



2018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K O R E A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f o r
H U M A N
S E T T L E M E N T S

ANNUAL REPORT **2018**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8**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발간에 즈음하여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정책,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및 관리, 공간정보체계 구축,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 한반도 공간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과 국민행복의 향상, 국토자원 보전·관리 등의 책무와 국책연구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물리적 인프라 개발에 기반한 국가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발전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2018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함께 누리는 혁신적 국토정책 연구’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총 208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적 국토정책 개발’,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국토정책 추진’, ‘융·복합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토정책 추진’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적 국토정책 개발을 위해서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국토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지역별 생활 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 방안’,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융·복합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토정책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방안 연구’,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 연차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차례

CHAPTER 01

연구원 소개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008
2. 연혁	009
3. 비전과 미션	010
4. 예산현황	010
5. 조직도	011

CHAPTER 02

그래픽으로 보는
2018년 KRIHS

1. 연구사업 관련 실적	014
1) 2018년 연구수행 현황	014
2) 정부정책과제 주요 성과	014
3) 국토분야 중점 국정과제 연구사업 수행비중	015
4) 협동연구 수행현황	016
5) 외부 전문가 참여현황	016
2. 연구성과 확산 실적	017
1) 연구관련 행사 개최	017
2)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017
3) 온라인 연구성과 확산	018
4) 연구성과물 배포	018
5)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개최	019
6) 홈페이지 방문자수	019
3. 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020
1) 해외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020
2) 해외 네트워크 구축	020
3)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실적	021
4) 초청연수 개최	021

CHAPTER 03

주요 연구성과

1. 2018년도 연구사업 및 2019년도 연구방향	025
2. 분야별 주요 연구	029
1) 국토계획·지역 및 국가균형발전연구	031
2) 도시연구	043
3) 국토환경·자원연구	057
4) 주택·토지연구	063
5) 국토인프라연구	079
6) 공간정보사회연구	093
7) 글로벌개발협력연구	105
8) 한반도·동아시아연구	109
■ 색인(연구과제명, 연구자명)	113

CHAPTER 04

연구활동

1. 주요 행사	120
2. 글로벌 협력	124
1) 해외학술교류	124
2) 연수프로그램	130
3) 글로벌개발협력 활동	132
3. 발간물	138
1) 국토	138
2) 국토정책Brief	144
3) 국토이슈리포트	145
4) 국토연구	146
5)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147
6) 도로정책Brief	148
7) Space & Environment	151

CHAPTER 05

임직원 현황

1. 인원 및 주요 보직자 현황	154
2. 조직 및 부서 소개	155

CHAPTER 0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원 소개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008
2. 연혁	009
3. 비전과 미션	010
4. 예산현황	010
5. 조직도	011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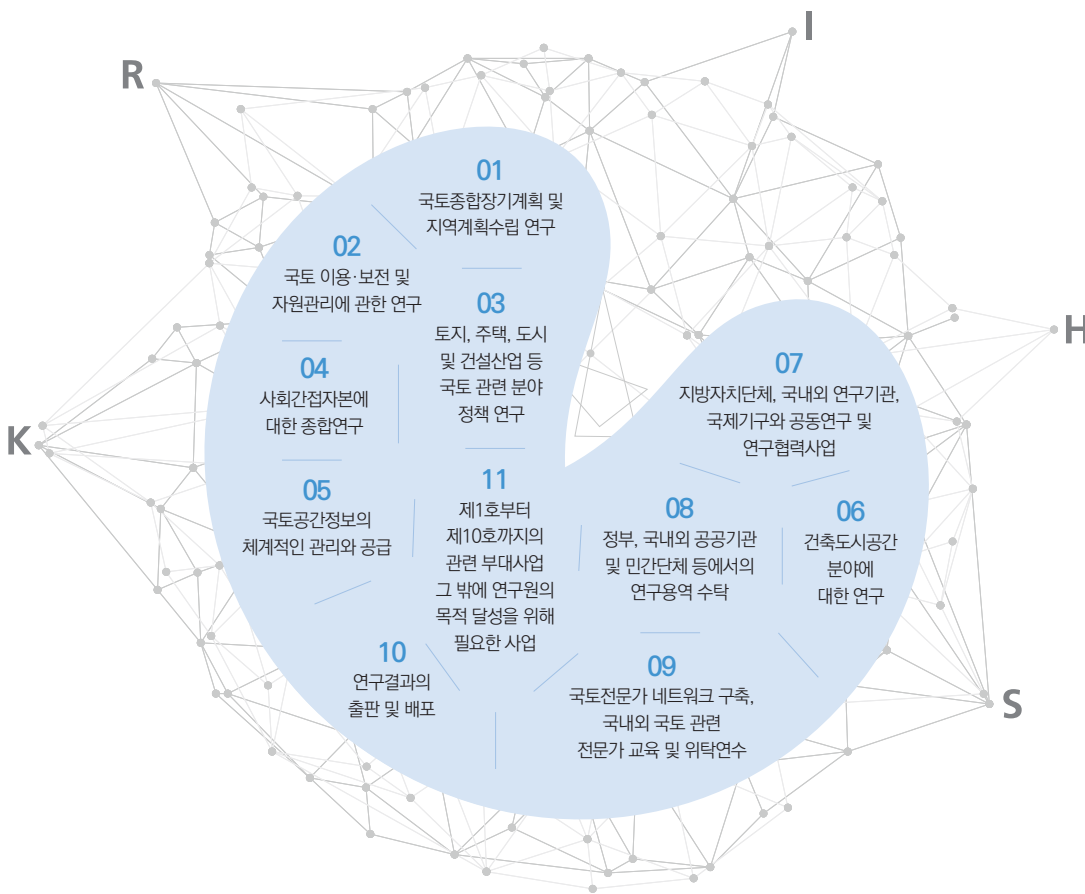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한반도·동아시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연혁

1970

- '78. 04. 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 '78. 09. 13 초대 노용희 원장 취임
- '78. 10. 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설립자: 대통령)
- '78. 12. 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 공포(법률 제3140호)

1980

- '81. 06. 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흡수 통합(정부출연기관정비계획에 의거)
- '81. 12. 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 '84. 12. 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 '88. 08. 09 제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90

- '92. 04. 2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93. 03. 30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 '93. 09. 07 제6대 이간영 원장 취임
- '94. 04. 27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안양시 평촌 소재)
- '97. 03. 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 '97. 07. 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 '99. 0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99. 12. 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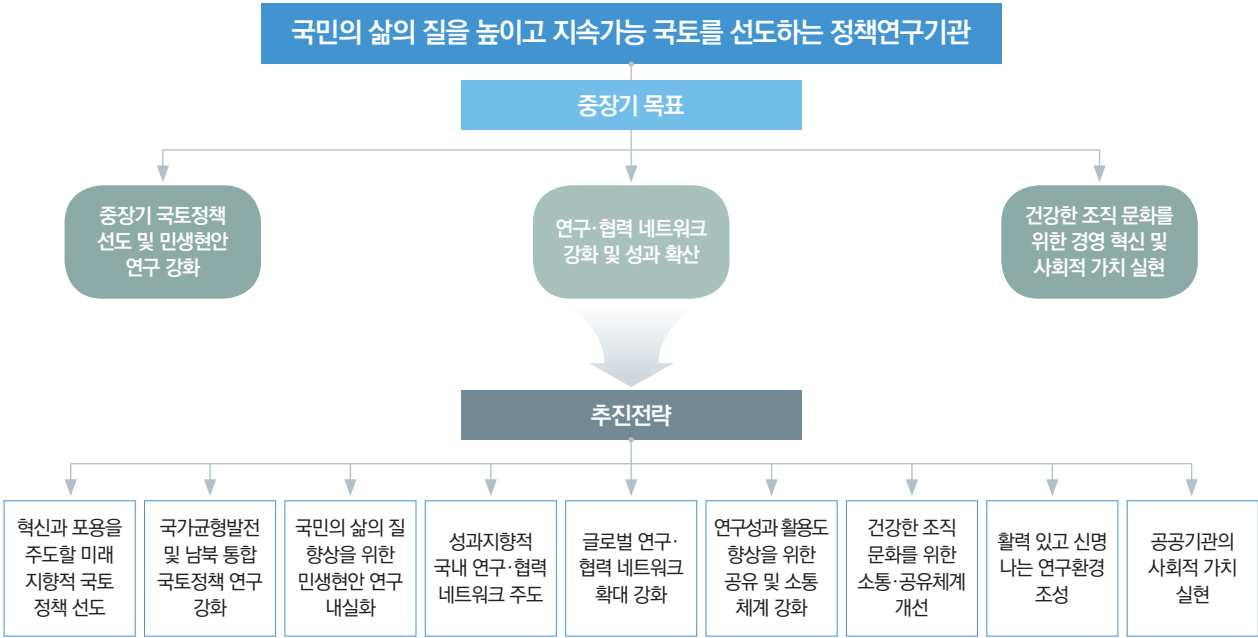
2000

- '02. 05. 10 '경제사회연구회 2001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 '02. 12. 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 '05. 05. 26 '경제사회연구회 2004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2회 연속 선정
- '05. 12. 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 '06. 05. 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 평가' 우수 연구기관 선정
- '06. 07. 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 '06. 12. 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 '07. 06. 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07. 07. 17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 '08. 04. 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8. 04. 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 '08. 06. 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 '08. 10. 01 새 C.I. 선포 및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09. 05. 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0

- '10. 02. 05 '2009년도 우수 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 '10. 12. 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설립
- '11. 06. 18 제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 '11. 12. 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출연·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 '12. 08. 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 '13. 08. 19 제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 '15. 06. 30 제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 '17. 01. 16 세종시 신청사 이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18. 07. 10 제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3. 비전과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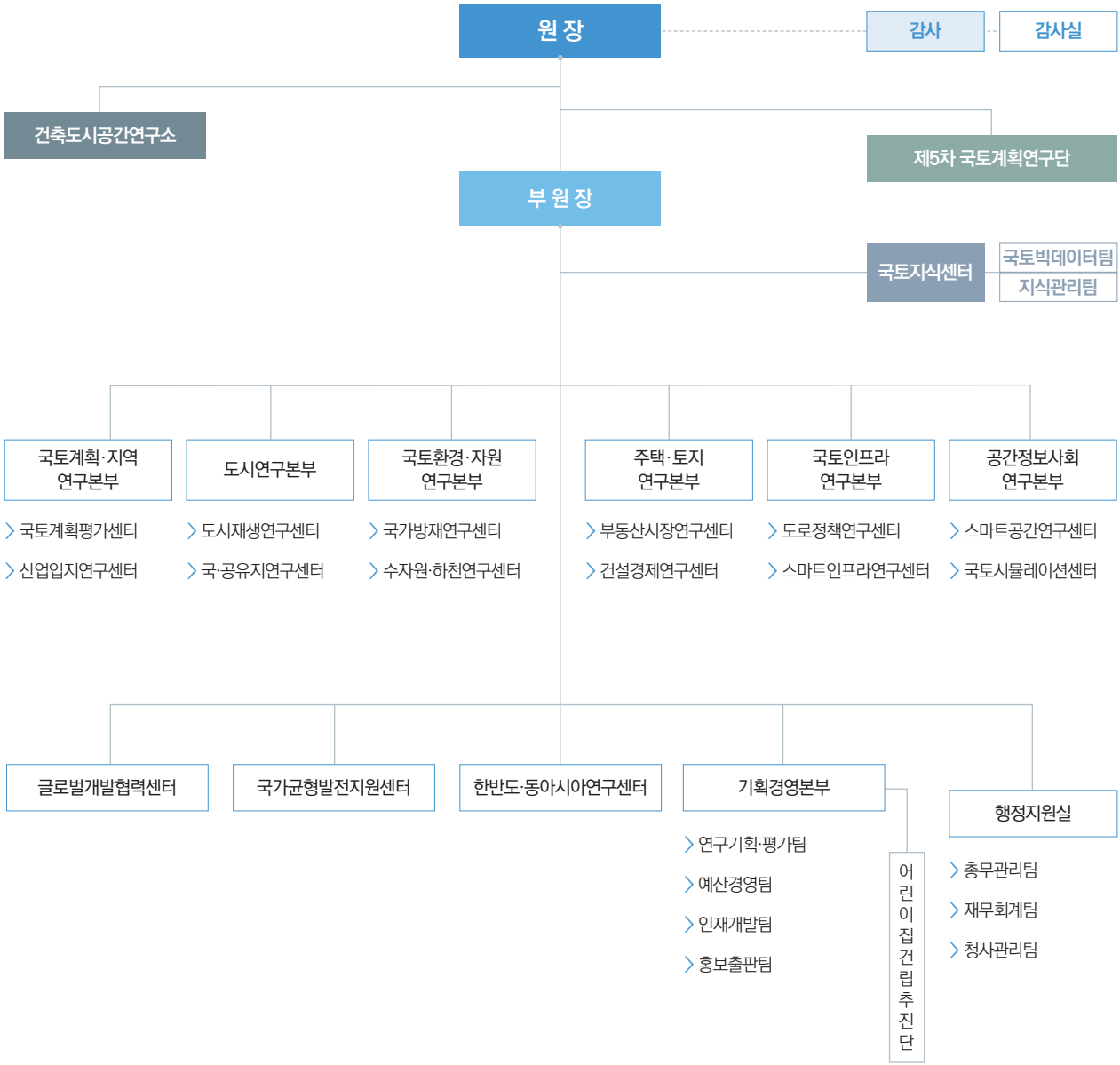
4. 예산현황

2018 수입	(단위: 백만 원)	2018 지출	(단위: 백만 원)
1. 정부출연금	18,161	1. 인건비	16,817
2. 자체수입	17,166	2. 연구사업비	16,329
		3. 경상운영비	1,693
		4. 시설비 등	488
			35,327

※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외

5. 조직도

국토연구원은 연구부서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공간정보사회 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국토지식센터와 행정부서인 기획경영본부, 행정지원실로 구성되어 있다(2019. 6. 1. 기준).



CHAPTER 0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그래픽으로 보는 2018년 KRIHS

1. 연구사업 관련 실적	014
2. 연구성과 확산 실적	017
3. 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020

1. 연구사업 관련 실적

2018년 연구수행 현황

국토연구원은 정부현안에 대응하고 국토분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국정과제와 국토분야 정책수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목표를 수립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 208건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정부정책과제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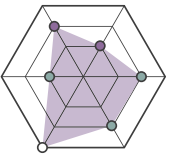


국토분야 중점 국정과제 연구사업 수행비중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토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총 171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연인원 653명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특화된 국정과제 수행을 강화하였다.



국토분야 관련 국정과제별 연구과제수		
국민이 주인인 정부	9건	총 171 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39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9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3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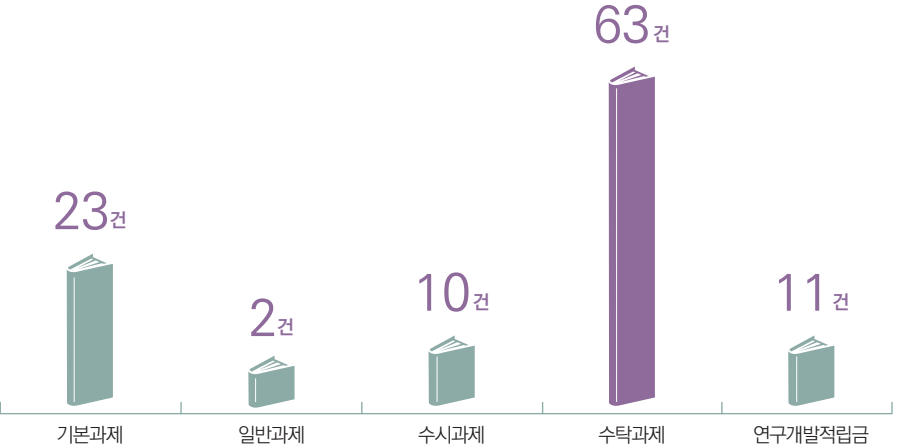


전체 연구사업 중 중점 국정과제 비율		
연구사업수	171건	82.2%
투입인력	653명	85.2%
예산	229억원	82.9%

2. 연구성과 확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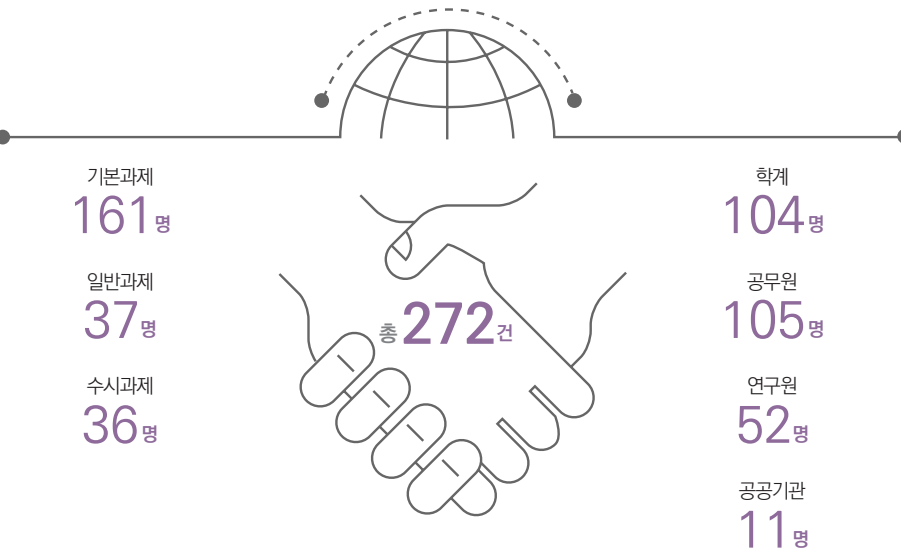
협동연구 수행현황

국토연구원은 연구의 정책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의 내용, 성격 등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2018년도 협동연구과제 수는 109건이며, 전체 연구과제 대비 52.4%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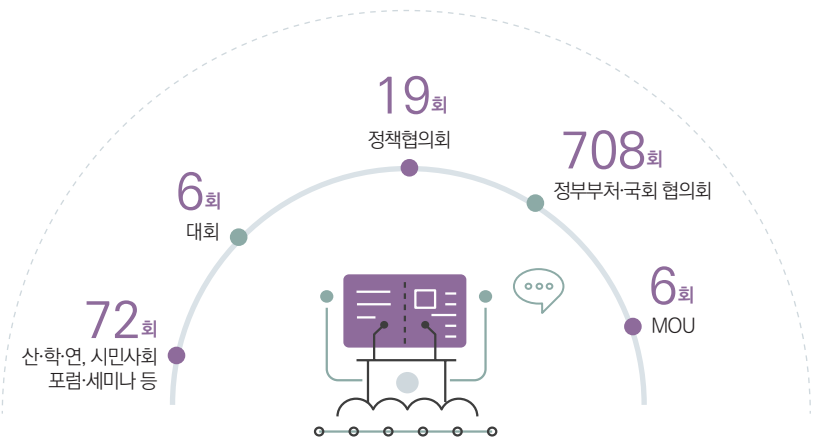
외부 전문가 참여현황

국토연구원은 연구심의회에 외부심의회위원을 의무적으로 구성,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 104명, 중앙부처 공무원 105명, 연구기관 52명, 공공기관 11명 등 다양한 부문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적, 학문적 연구의 질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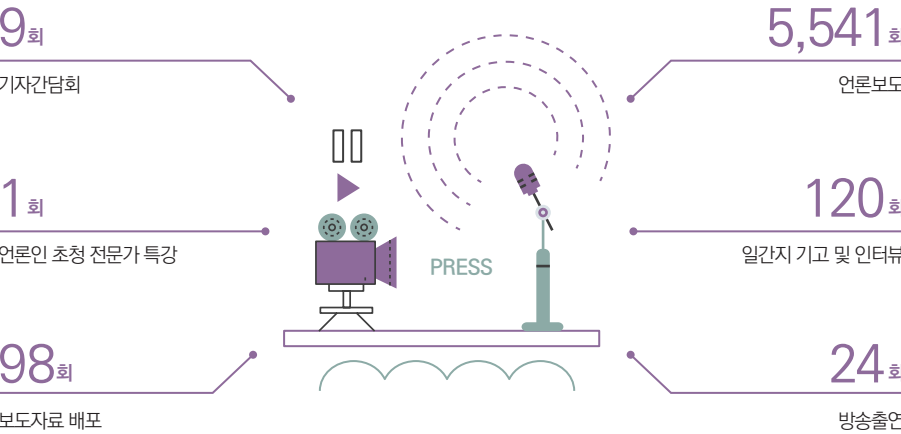
연구관련 행사 개최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국민, 지역사회, 언론을 대상으로 세미나, 발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질 높은 연구성과 생산을 위해 간담회나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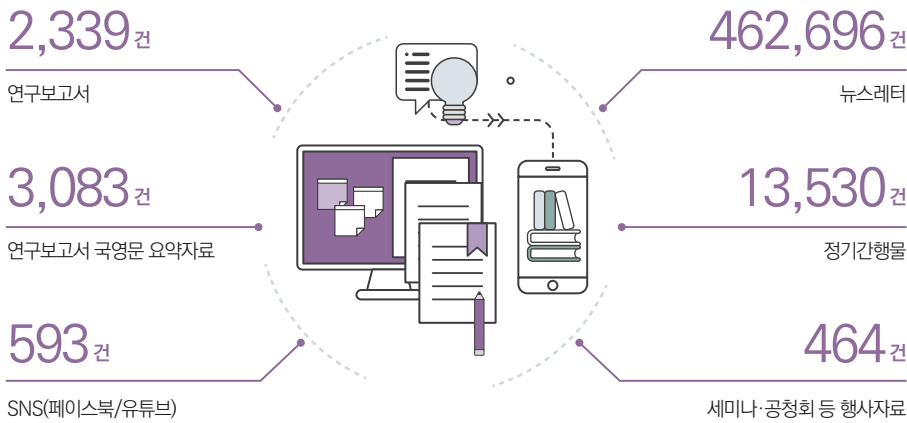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국토연구원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기자 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 초청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였고, 5,541회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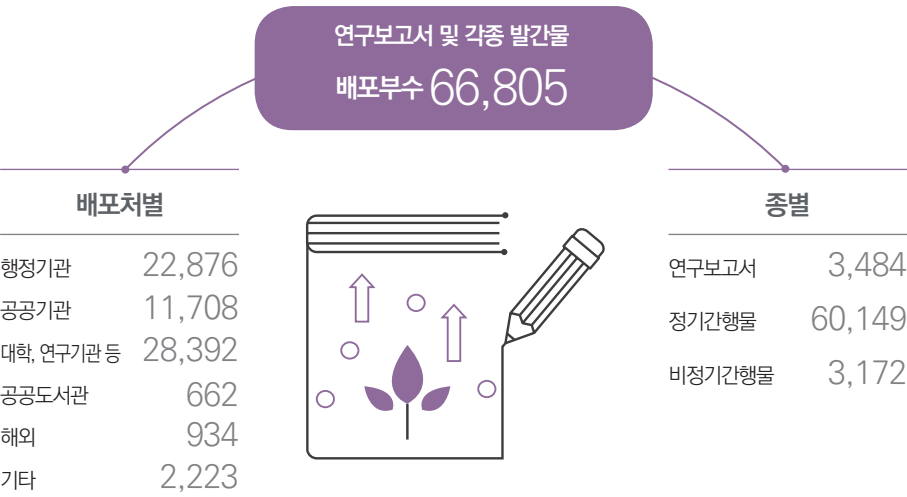
온라인
연구성과 확산

2018년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에서는 46만 2,696건의 뉴스레터 발송을 비롯, 연구보고서, 원문, 연구보고서 국영문 요약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 등 행사자료를 제공하여 누구나 연구성과를 열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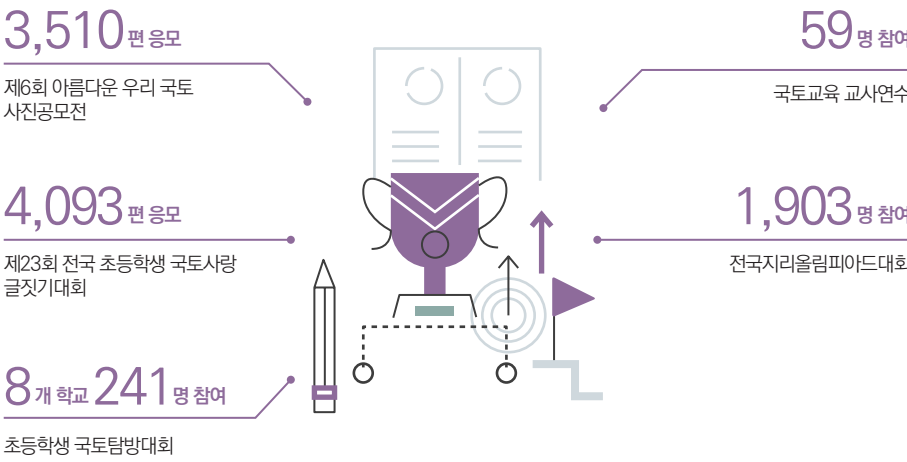


연구성과물
배포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6만 6,805건을 배포대상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개최



홈페이지
방문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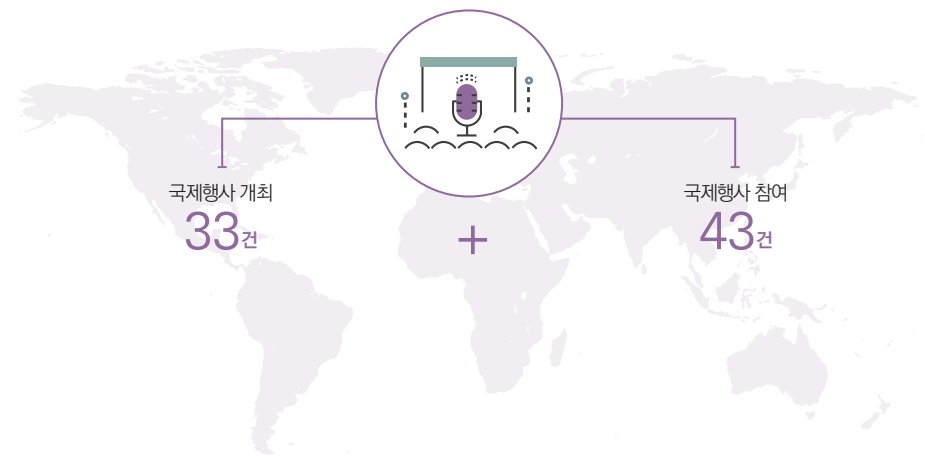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사이트의 방문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 세계 선진도시와 도시 재생 사례, 도로정책자료, 해외리포트, 상상대로 제안자료 등을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3. 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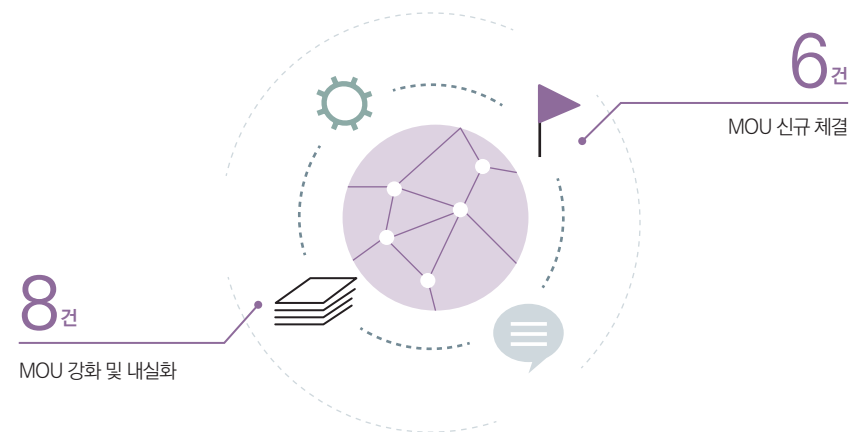
해외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국토연구원은 2018년 연구성과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공동워크숍, 한-중 국토정책 세미나,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CGIS) 등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세계도시포럼(WUF), 한-베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협력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였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신규 MOU 체결 확대 및 기존 MOU를 강화·내실화하였다. 파나마 시티 시 정부, 방글라데시 수도권개발청 등과 신규 MOU를 체결하였고,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기존 MOU 체결기관과는 공동연구, 교육·연수, 정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협력사업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실적

국토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해외 유수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및 심화로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단순한 실적증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후속사업 발굴,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초청연수 개최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6차례의 교육연수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1개 국가 공무원 101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CHAPTER 0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주요 연구성과

1. 2018년도 연구사업 및 2019년도 연구방향	025
2. 분야별 주요 연구	029

1

2018년도 연구사업 및
2019년도 연구방향

2018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8년도에는 연구사업 목표를 ‘함께 누리는 혁신적 국토정책 연구’로 정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적 국토정책 개발’,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국토정책 추진’, ‘융·복합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토정책 추진’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사업목표하에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등 33건의 기본·일반연구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등 20건의 수시과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연구’ 등 136건의 수탁과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등 19건의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등 총 208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다.

2018년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연구·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였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171건의 연구·사업에 연인원 653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다. 국정목표별로 보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3개 과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 39개 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9개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개 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9개 과제 등 5대 국정목표 지원을 위해 전체 연구사업 건수의 82.2%, 투입인력 85.2%, 예산 82.9%를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다. 법·제도 정비(16건), 정책지원(74건), 민생지원(15건), 시범·시책사업 추진(7건) 등 총 112건의 정책화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요 정책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촉진방안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체계 구축 연구’,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지침」,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18. 8. 27)에 혁신도시 발전방안 상정,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 로드맵 작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지원 등으로 이어졌다.

둘째,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부동산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주택매매시장의 안정화,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및 관리 선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세여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1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제시 등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셋째,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연구용

역’,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 방안’, ‘행정중심 복합도시 스마트시티 특화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운수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행료의 감면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지역별 생활교통비용을 산정하여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스마트도시 고도화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교통,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서비스 통합플랫폼 등의 ICT 인프라 조성기술 개발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활용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토 정책 연구’로 선정하였다. 연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분권화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혁신적 미래국토 설계’,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정책 추진’ 등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연구본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기반 조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용적 도시정책 개발,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산업 기반 강화, 포용과 혁신의 국토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국토의 구현, 글로벌 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등 주요 연구테마를 선정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19년도에도 다양한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의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으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19년도 중점연구과제

2019년도 수행과제 중 국정기조와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각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를 통해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다층적·상생적 국토 공간구조 형성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인구감소, 공간적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전략,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층적 권역구조, 계층적 도시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에서는 실천적·정책적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국토·도시분야의 핵심 이슈를 발굴하여 이슈별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포용적 도시정책을 구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달성 가능한 정책방향과 수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지방분권 시대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방안’은 지방분권 시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주거권을 구성하는 이론적, 법리적 측면을 고찰하고, 주거지원정책의 주거권 보장 수준과 범위, 한계 극복을 위한 공동의 책무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주거권 보장 촉구 노력과 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지방분권 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SOC 투자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SOC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SOC 투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OC 투자로 발생하는 특수이익을 보편이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전략 등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다섯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은 공간정보 융합환경을 진단하여 지오태깅, 4D 데이터, AI 등과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전략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이며,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촉매이다. 이 연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전략을 제시하고, 공간정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분야별 주요 연구

- 1) 국토계획·지역 및 국가균형발전연구
 - 2) 도시연구
 - 3) 국토환경·자원연구
 - 4) 주택·토지연구
 - 5) 국토인프라연구
 - 6) 공간정보사회연구
 - 7) 글로벌개발협력연구
 - 8) 한반도·동아시아연구
- 색인(연구과제명, 연구자명)

1

국토계획·지역 및 국가균형발전연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 국토발전 40년: 전개과정과 과제(1978~2018)
-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 혁신창출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연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Korea's Smart Regulation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연구책임 정우성 | 연구진 장철순, 이미영, 홍사흠, 김수연, 이원복, 송정현, 김진영 | 기본 18-02 | 209면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혁신에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와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과 충격을 가져온다는 점임

새로운 기술은 수용(Adoption)과 확산(Diffusion)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 지역발전과도 연관됨

- 이에 따라 부문별 산업정책은 물론 공간정책적 시각에서도 지역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
- 특히 정부부문은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지역에서 창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및 규제 개선 역할이 중요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를 검토하고, 신기술과 신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지역규제 법제도로 지역특구법상의 규제샌드박스, 유연한 토지이용제도인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형 산업입지제도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 등을 검토함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특구 및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은 실정

기업인식조사결과는 새로운 규제 설계 등 제도개선 도입 필요성과 동시에 기존 규제에 대해 불만이나 체감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수도권에 입지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과 비수도권의 전통 제조업종간의 규제인식격차가 적지 않았음
- 해외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제절차와 방식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인간의 창의성 활용을 위해 인간의 사업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가령, 기술 접목을 통해 거주자 우선의 입체적인 도시 개발을 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과 융합기술 간의 융합,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기술과 산업의 융합 등 다양한 '융합'현상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

- 정부는 규제합리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 투자재원 등을 담당하고, 투자 결정, 투자배분 등은 민간에 맡는 합리적 역할분담이 중요

한국형 스마트규제 재설계 방향으로 네거티브방식의 규제,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적응적 규제, 장소기반형 규제를 제시하였고,

- 추진전략으로는 ① 지역발전과 규제와의 적응성 강화, ② 지역발전 성과(결과) 중심의 규제 강화, ③ 실증적, 세분화된 접근방식, ④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규제의 차등화, 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강화, ⑥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구축 등을 제안

정책제안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신기술의 활성화와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규정의 유연한 해석과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정책 강화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규제방식과 절차 역시 경직적이고 느리다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규제로 변화 촉진

(적응적 규제) 시스템적 규제를 위한 ① 현재의 규제 평가, ② 새로운 규제에 대한 테스트, ③ 규제 방식과 절차 개선, ④ 규제이후의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장소기반형 규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과 연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Location Policy Studies on Innovation Fir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연구책임 강호제 | 연구진 류승한, 서연미, 표한형 | 수시 18-03 | 189면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 간 융·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정책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 기술개발과 생산성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구조 조정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
-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지원 중심에서 혁신, 성장,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기업지원 중심으로 입지정책 전환이 필요

4차 산업의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 가젤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

혁신기업의 입지사례조사, 인터뷰를 통해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 필요성과 정책 전환을 모색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간 융·복합으로 업종보다는 개별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성장, 혁신을 목표로 입지 지원 필요

혁신기업은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매출증가, 고임금 기업으로 정의

- 혁신과 성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은 유통, 서비스, 비제조업 등 산업분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남
 - 혁신기업은 모두 일반기업에 비해 수도권 집중 심화(60% 이상)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혁신형 기업은 연구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임금이 높으며,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들로 구성
 - 우리나라의 혁신성장기업은 수도권 남부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혁신성장지역을 형성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개인, 기업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도 확대 중
- 혁신기업 중심의 입지지원,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균형발전,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정책개선 필요

정책제안

(지역균형발전) 지방 인재와 기업가 육성,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하는 지방기업 지원 필요

(업종규제완화) 생산물 중심의 입지규제를 완화해 개별기업 중심의 혁신, 고용창출 기준으로 전환

(산단계획 및 입주업종 기준완화) 개별기업군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비제조 산단, 호텔 산단, 병원 산단 등)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개선) 규제개혁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가 실효성을 갖도록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총리실 직권으로 규제 완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 난개발 방지와 입지경쟁력 강화 위해 산단개발면적 제한규정 완화, 수도권 남부에 감정가격으로 기업용지 공급, 북부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개발이익은 창업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재투자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ssessment Criteria for National Territorial Plan Assessment



연구책임 민성희 | 연구진 이용우, 이순자, 김동근, 차은혜 | 수시 18-01 | 90면

연구목적

중장기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제시하고 있는 6대 평가기준(지역경쟁력,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의 모호성, 평가기준 간 중복성, 용어의 혼동 등에 기인하는 국토계획 평가기준의 적절성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계획에 대한 검토와 6대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세부 평가기준의 내용 및 범위를 검토할 수 있는 좀 더 상세한 지침을 제시

연구결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개념과 유형 및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은 종합 및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환경계획, 기타 부문계획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현행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중 그동안 관련 법률이 폐지되거나 개정 등에 의해 국토계획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변경되어야 할 계획들을 그 근거에 적합하게 조정함

중장기적, 지침적 국토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검토되었으나 포함되지 않았던 국토계획과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기후변화, 방재와 같은 신규 분야 검토를 통하여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을 조정

기 평가완료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실증분석, 계획수립주체 및 전문가 대상 업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현행 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과제 도출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계획임을 고려하여 계획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6대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이 연구에서는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장기적이고 지침적인 국토와 관련된 범부처적 및 신규분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28개 대상계획에서 8개 계획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평가기준 개선방안으로 현행 6대 평가기준을 4대 평가기준(균형적 국토발전, 효율적 국토이용, 친환경적 국토관리 + 계획의 적정성)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

개선된 4대 평가기준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기준은 계획수립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방식(선택적 적용)을 유지

- 세부 평가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기준의 경우에는 필수기준으로 지정

국토발전 40년: 전개과정과 과제(1978~2018)

40 Years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cess and Projects(1978~2018)



연구책임 김선희 | 연구진 김성일, 사공호상, 이수욱, 이왕건, 이용우, 이원섭, 이춘용, 정진규, 안예현, 이미영, 임상연, 전성제, 최재성, 홍사흠, 임용호, 조정희, 오경근, 전준호, 김상규, 한여정 | 수시 18-31 | 457면

연구목적

국토연구원 40주년을 맞아 1978~2018년 동안의 국토발전 전개과정과 주요 연구 실적 등을 정리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국토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국토연구원의 지난 40년 동안(1978~2018년)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고 분야별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고자 함

연구결과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1978~2018년 40년간의 국토발전 전개과정과 주요 연구 실적과 의의 등을 정리하여 국토연구원의 지난 40년의 연구업적을 회고·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함

국토발전 전개과정을 국토계획·지역연구, 도시연구, 도시재생연구, 주택·토지연구, 국토인프라연구, 국토정보연구, 글로벌개발협력연구 등으로 나누어 연대별로 주요 연구목록 및 내용을 정리함

지난 40년 동안 국토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주요성과를 논의하고 미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함

정책제안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미래 과제 5개를 제시함

- 미래 국토공간 형성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담은 국토 관련 과제
 - 동북아를 비롯한 주변정세의 변화와 예측을 담은 한반도 관련 과제
 - 삶과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국토가 있는 도시 및 도시재생 관련 과제
 - 미래사회의 모습을 설계하는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국토인프라 관련 과제
 -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지원하는 글로벌 국토발전 관련 과제
-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저출산과 주거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정책,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개발 및 보전 정책 등 국가 백년대계의 국토정책 과제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 개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강화, 대안적 삶의 양식을 만드는 주거공간 모델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도화하는 연구 추진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한 미해결 만성과제에 대한 대안 연구 추진

북한 도시지역 현황 정보수집, 한반도 전체 국토계획 수립,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지원 등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Decentraliz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연구책임 이원섭 | 연구진 양진홍, 박태선, 김진범 | 기본 18-10 | 211면

연구목적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인 흐름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보면, 분권형 균형발전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국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를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함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를 융합하는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연구결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지방자치제도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계획 수립, 재원 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제도는 분권형 지역발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가 필요함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자치적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전체 국가가 특색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하고 주민의 복리가 향상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함

-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 제도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실천력을 강화해야 함
-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과 상생발전을 활성화하는 계획수립 및 집행제도 정비가 필요함
- 균형발전 정책 실천수단의 분권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개편,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 확대, 지역 간 차등지원 강화가 필요함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모형은 자치분권의 핵심요소인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재정·입법권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공간계획, 추진체계, 지원체계, 법제도를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공간계획 요소의 분권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 및 계획수립, 공간 구분, 사업 구상 등을 분권화해야 함
- 추진체계 요소의 분권화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주체, 거버넌스 등을 분권화해야 함
- 재정 및 역량 요소의 분권화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의 실천에 필요한 재정 및 예산, 인력 및 조직 등을 분권화해야 함
- 제도적 요소의 분권화를 위해 균형발전 지원 제도 및 법률 등을 분권화해야 함

정책제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제도 및 재정운용의 분권화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의 지역 자주성을 제고해야 함

(자치분권형 지역발전 추진체계 강화) 자치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간 협력 및 지역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자치분권 기반의 계획계약제도를 시행해야 함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분권 요소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 핵심 시책은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강화하고, 재정의 균형발전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Assess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Industrial Complex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조성철 | 연구진 황명화, 장철순, 이인희, 노영희 | 수시 18-19 | 171면

연구목적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배후지역 정주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평가는 현재까지 이뤄진 바가 없음

-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정주환경 실태평가가 이뤄진 바 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는 보육이나 주거시설 등 일부 지표의 평가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수행이 요청됨

- 산업단지 정주환경의 현황 평가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형의 정주시설 공급이 시급한지에 대한 기초자료 구성이 시급한 상황
- 더불어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수요자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

연구결과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고용이 집중되어 있지만, 배후지역의 열악한 정주환경 때문에 만성적인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임

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정주환경을 평가한 결과, 국내 산업단지 대다수는 생활권 내에서 기초적인 교육, 의료, 상업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100여 개 산업단지는 30km 내 접근 가능한 배후도시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설문조사 결과, 종사자 가구의 생활반경은 배후도시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선호위치 및 형태는 가족구성 및 자녀 연령에 큰 영향을 받음

산업단지 종사자 가구의 실제 생활패턴 및 정주기능 수요를 고려한 정주환경 공급 전략이 필요함

정책제안

(배후도시 연계) 배후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되, 근로자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시설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공급

(정주기능 거점화) 시·도별로 거점도시 및 거점산업단지를 지정해 고차정주기능을 집적하고, 거점도시와 소규모 산업단지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정주기능 집산화) 통근권 내 배후도시가 부재한 소규모 산업단지 군집은 주거·지원기능을 집단화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이격개발 조건을 조정하는 한편, 미니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 필요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the Age of Low Growth

연구책임 민성희 | 연구진 김선희, 이순자, 김동근, 차은혜 | 기본 18-16 | 161면



연구목적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 정체 및 감소지역에서는 사업체와 종사자수의 감소가 나타나는 저성장시대 대에 진입하고 있음

기존 성장지향적 계획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저성장시대의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기존 시가지를 활용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일자리와 연계된 도시의 형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된 도시권의 형성 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성장시대에 부합하는 도시·지역계획의 역할 재고가 필요한 시점임

이 연구는 저성장시대 도래라는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문제 해결을 통한 합리적 계획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저성장 흐름이 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도시·지역계획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총량적 인구지표에 기반한 현행 도시·지역계획의 목표인구추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의 실태를 분석하고, 광역적 계획의 역할 강화와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유연화 등 도시·지역계획의 합리화 방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세부 목적임

연구결과

광역화에 따른 도시·지역계획의 광역적 역할이 필요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광역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권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자체와 협치 필요성이 증대됨. 따라서 저성장에 따른 도시 간 광역생활권 재편으로 인한 공동계획 수립이 중요해짐

도시·지역계획 주요지표 간 연계성 필요

- 인구지표는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기반시설의 공급 등 물리적 환경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과다공급으로 불필요한 주민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 사회·경제적 저성장 상황에서 도시 주변 지역에 개발되는 시가화에정용지로 인한 시가지

확장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저성장시대에도 계획수립에서 인구가 과대 추정됨

- 토지이용물량 확보를 위한 인구의 과대 추정이 발생. 성장하는 시·군에서는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상 인구가 부족하여 인구를 과대 추정하는 반면, 인구 정체 혹은 감소하는 시·군에서는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물량확보를 위해 인구 과대 추정

정책제안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수립, 다양한 인구 관련 지표 활용, 인구추정 방식 적용의 유연화, 도시유형별 도시계획 지표의 설정 필요

- 지역특성 반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 유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인구총량 지표에서 인구구조와 연동한 도시계획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함. 계획지표로서는 저성장도시에서는 총인구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인구구조 지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상주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추정에서 유동인구, 체류인구, 관광인구 등의 인구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인구추정에 있어서 종래의 총인구 산정 방식에서 드러난 인구 과다 추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구추정모형의 도입이 필요. 단순히 토지이용 물량 산출을 위한 인구추정이 아니라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에 따라 인구변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는 시·군이 존재하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도시 유형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의 지표를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 필요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Growth, Stability, and Inclusion in Regions



연구책임 홍사흠 | 연구진 문정호, 남기찬, 김다윗, 김동현 | 기본 18-20 | 131면

연구목적

비공간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어 온 소득격차를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측정하고 실증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함

- 지역경제의 포용성을 소득불평등과 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로 인식하여 측정

- 측정된 지역경제 포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성과 및 지역의 특성과 같은 결정요인을 선별

- 지역 포용성 정책 수립 및 제고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방안 제시

지역 포용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실험하고 근거를 관찰

- 기존에 시도된 바 없는 지역 소득 자료의 활용을 통해 공간에서의 소득격차, 분리 등의 현상을 분석하여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공간분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공간분리 역시 기회제한을 통해 고용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됨

- 소득불평등과 공간분리 사이의 관계는 빈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거나 소득증가 규모가 낮은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남

- 공간분리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하거나 일자리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남

탐색된 결정요인을 활용하여 경로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 산업구조, 인구구조에 관한 변수들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구조 변수들의 경우 소득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됨

- 정책변수들 중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심각한 소득불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정책제안

지역 포용정책의 대상 및 기준 선정에 활용

- 단순한 지역단위 평균소득 비교를 넘어 다각화(소득분배,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된 지역 소득 관련 지표로서의 활용

- 지역 소득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생활 최저기준(Regional Minimum) 도입에 활용

지역 포용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활용

-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시, 도 단위 지역 내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도입)

- 지역 소득증대를 통한 포용성 제고(지역 주민주도, 장소기반적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유흥자산의 공유화 및 사업성과 공유를 통한 주민 소득의 실질적 개선 도모)

-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지역별 포괄케어 시스템 및 복합시설 건설 등의 포용거점 구축 및 지원)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A Study on New Industrial Location Strategy for Building an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cosystem



연구책임 조성철 | 연구진 남기찬, 장철순 | 기본 18-23 | 280면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술형 제조창업 생태계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산업입지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 전체 창업 중에서 고용 파급력과 정책 지원수요가 높으며 창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문인 기술형 제조창업에 분석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구체화하고자 함
- 공간적 측면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기존 문헌에서 다뤄진 바 없었던 기술형 제조창업의 분포실태와 입지요인을 각각 2,905개의 기업DB 분석과 418개의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
- 입지유형별 국내 주요 창업생태계에 대한 현장연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결과

제조창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원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요성 증대

- 디지털 가공기술,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클라우드펀딩 같은 기술 변화는 제조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개방형 혁신을 확산시키며 제조 창업의 과정을 생태계적 현상으로 전환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형태 및 입지수요는 창업배경, 사업전략, 기술수준에 따라 상이

- 산업단지 입주기업(전체의 29%)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크며 B2B 거래에 주력

- 대학·연구기관 입주기업(약 18%)은 R&D·무형자산 비중, 혁신성이 높은 초기단계 기업

기술창업이 집중된 생태계는 산업단지형, 대학 캠퍼스형, 도심입지형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수도권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정부지원프로그램 등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형성

- 비수도권에서는 대학·연구기관이나 국가산업단지 내 보육기관이 창업생태계의 거점으로 기능

정책제안

(창업생태계의 특징을 고려한 지원수단 마련) 산업단지형, 도시재생형, 대학·연구기관 연계형 등 기 조성되어 있는 창업생태계의 구조와 특징을 고려해 결핍된 요소를 보충하는 지원수단 마련이 필요

(산업단지 내 메이커인프라 공급) 창업입지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를 선별해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인프라를 공급하고 기존 전문공장과 창업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킹 사업 전개

(도심형 창업입지 공급) 메이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헤건물 등을 활용한 입체형 미니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창업기업의 입지수요 지원

(대학부지 등 혁신기관과 연계된 창업입지) 대학이나 연구소가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엔지니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지공급 전략 필요

혁신창출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연구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Policy on Enhancing Regional Innovation Environment of Innovation Cities



연구책임 윤영모 | 연구진 차미숙, 김선희, 서연미, 차은혜 | 기본 18-27 | 200면

연구목적

혁신도시를 지역산업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책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현재 혁신도시는 산·학·연 유치 및 협력체계 구축이 부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산업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혁신도시를 지역의 산업혁신 및 사회혁신을 창출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을 제시함

- 113개 이전공공기관의 다양한 기능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산업혁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혁신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제시

연구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혁신도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나, 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치중하여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구축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산업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유치가 부진하며, 연계·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조성, 입지 지원제도 마련 등이 미흡

- 혁신도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산·학·연 유치 및 협력 촉진, 혁신여건 조성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은 초기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구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 및 상호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의 지원 및 지역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혁신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이전공공기관들의 경우, 기업, 대학,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역량 강화 지원, 대학의 전

문인력 양성 지원, 대학 및 기업과 공동 R&D 확대, 이전공공기관 보유 정보 및 시설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산업혁신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 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인 태양광·바이오의약 등과 연계성이 높은 이전공공기관은 부재하나 인력 개발·교육 관련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공공육혁신을 표방하는 모델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등 지역사회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정책제안

이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를 지역산업혁신 및 지역사회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함

- 첫째, 혁신 창출·촉진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함. 기업 유치 및 창업, 혁신주체 간 협력·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기능공간 조성, 인접 대도시 및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인프라 확충, 인재 유치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여가 및 의료·교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

- 둘째,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혁신주체의 유치를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혁신 지원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유사한 특구 수준의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 입지 지원제도를 혁신도시에 적용해야 함.

- 셋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지자체 및 지역사회 간 신뢰·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야 함. 특히 지역혁신을 위한 산업별·부문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참여를 촉진·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넷째, 도시 건설에 치중한 현행「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전면 개정 필요. 특히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산·학·연·관·민 협력 촉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주체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정해야 함

2

도시연구

-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 지역발전을 위한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스마트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Smart City Competitiveness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Centers

연구책임 이성원 | 연구진 홍진현 | 수시 18-12 | 190면



연구목적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혁신생태계의 개념과 구체적 조성 방안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현재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궁극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시 생산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은 찾기 어려움

이 연구는 스마트도시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산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분석하고 스타트업이 주로 증가하는 대도시 내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특화 전략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스마트도시 개념을 해외 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임을 확인

해외 연구를 토대로 스마트도시 정책에 유럽의 스마트 특화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문헌 고찰함

새롭게 성장하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포함하여 4대 이머징 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생존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함

효과적인 장소기반 전략을 위해 시·도 단위보다 작은 공간 단위(Local) 전략이 필요하며, 이머징 산업은 고용중심지에서 주로 증가함

- 혁신의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 산업은 소비 어메니티가 높은 도심이나 부도심 등 고용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 증대
- 국내 광역급 이상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특허출원건수와 집계구단위 고용밀도는 서로 상관관계(약 7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 특화전략을 활용하여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산업에 호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 국내 7개 대도시의 고용중심지를 대상으로 고용중심지별 이머징 산업에 대한 우선사업선정방안 예시
- 스마트 특화전략에서 제시한 지역 산업구조 변화 분석과 이머징 산업에 대응한 지역 역량분석 방안을 각각 제시
- 혁신생태계 구축은 지역의 산업변화, 역량 정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정책제안

혁신의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과 이머징산업은 소비 어메니티가 높은 고용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고용중심지 특성에 맞는 혁신생태계 구축전략이 필요함

스마트 특화전략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산업의 변화에 따른 경로의존적 일방적 이머징 산업정책 대신 시민의 특성에 맞는 산업 전략도 동시에 필요함

혁신생태계 확산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목표로 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틀도 필요함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Quantitative Framework for Gentrification Analysis and Policy Application

연구책임 이진희 | 연구진 임상연, 박종순, 이왕건, 박민숙 | 기본 18-08 | 209면



연구목적

2000년대 들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화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과 거주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지역 활성화와 지속적인 투자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이주나 주거지의 지나친 상업화 등의 부작용 역시 발생함

도시재생과 같이 국비가 투입되거나 정부 정책에 의해 특정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정부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은 문제 발생에 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관련법 개정, 종합 대책 추진, 조례 제정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의 발생을 진단 및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 및 단계를 정량화된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연구결과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와 진행 단계별 특성과 문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4단계로 구분함

- 초기단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이전 지역이 쇠퇴 상태인 단계
- 주의단계: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단계
- 경계단계: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지역이 완전히 활성화된 단계
- 위험단계: 비자발적 이주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단계

선행연구 및 사례검토, 전문가 설문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후,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하여 변수별 중요도를 파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와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구축함

-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에 포함된 6개의 변수 중 우선순위는 유동인구 증

가율, 프랜차이즈 업체수, 창폐업 횟수, 평균 영업기간, 인구 증가율, 가구 평균소득 증가율순으로 나타남

변수별 위험도 및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선정 방법에 따라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서울시 용산구와 종로구를 대상으로 실증을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대안을 선정함

산출된 지표값은 현장 답사나 관계자 인터뷰 등 정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검증하여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정책제안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값을 활용, 지역 내 공론화와 조례 제정의 근거로 활용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문제 대응을 위한 구역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근거로 사용 가능함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에 맞춰 적절한 정책적 수단 적용이 가능함

-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문제 악화가 예상되는 초기 및 주의단계에서는 선제적 조치와 공론화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비자발적 이주 및 주거지 상업화 등 문제 발생이 심화되는 경계 및 위험단계에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개발 행위 및 입점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응함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Strategic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gram in Korea



연구책임 서민호 | 연구진 배유진, 권규상, 김유란, 박성경, 백지현, 이건원, 이상훈 | 기본 18-30 | 310면

연구목적

정부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3)의 핵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방식을 보다 전략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등 주체별 역할 명확화할 필요

- 지역 나눠 먹기식 사업 배분방식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 노력이 제로섬(Zero-sum)에 그칠 우려가 있고 충분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역량·자원의 투입·배분에 한계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정책목표·전략인 콤팩트-네트워크형 지역거점 조성, 전국 쇠퇴율 제어, 지역주도 추진 관점에서 현재 사업추진 여건·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전략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 콤팩트-네트워크형 지역 거점 조성전략은, 우리 국토의 공간 구조적 여건상 실현 가능한 방향이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전국적으로 도시 쇠퇴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및 유관 사업들은 필요한 지역에 전개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도시재생 뉴딜의 예산운용과 추진방식은 지역 주도 추진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연구결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 심화, 도시쇠퇴 악화의 여건 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단순한 주거지 정비를 넘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혁신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경쟁우위적 사업대상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으로 당초보다 국가 지원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시재생은 국가와 지방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과 적소성이 낮은 상태이며 국토차원의 공간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

- 따라서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는 지방 거점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전국적 쇠퇴 제어와 노후·저층주거지의 삶의 질 개선 등에 집중하고 다른 영역은 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필요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시된 핵심 정책목표와 예산·사업운용체계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건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

- 국토 차원에서 전국적으로는 17개의 기능적 도시권을 형성되어 있어 도시재생 뉴딜에서 상정한 콤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는 기능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거점도시에 기능을 1%p 더 집중시킬 경우 생산성 0.6%p 증가 효과가 기대됨

- 그간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 추진과정에서 쇠퇴 심각수준에 비해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 전국 821개 읍·면·동(전체의 약 23.5%)에 달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책·사업 추진이 긴요하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뉴딜과 범부처 전략사업 중 일부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3년간 쇠퇴율 4.7% 완화 가능

- 도시재생 뉴딜의 지역 주도 추진방식은 예산 및 사업운용 측면에서 여전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유관 사업을 결합한 실질적 포괄보조 예산 편성과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예산 운용권한의 지방 이양이 중요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 추진, 지역 거점과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제도의 개선, 지역 주도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함

-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국가는 광역·지방도시권의 거점조성과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근린형 도시재생은 지역에 대폭 권한 이양하는 ‘선택과 집중’형 전략 필요

- 특히 국가·광역혁신거점 조성 및 지방도시권 지역거점 조성사업, 쇠퇴 심각지역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지역 주도 사업 예산·추진체계 정비 등 전략사업 추진이 중요

- 지역거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도심 내에 재생사업을 집적하고 국공유지 활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기업의 총괄관리자 역할 강화를 패키징한 혁신·특화거점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 규모의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 간 도시권 협약제 도입이 필요

-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범부처 생활SOC 확충사업을 총괄하는 범부처 추진조직을 신설하고 예산계정·사업선정·운영관리를 통합해야 함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효적 지역 주도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금의 지자체 선택권 강화와 보조율 폐지, 계획계약제에 기초한 도시재생 뉴딜 관련 사업의 다년 편성 추진 등이 필요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Promoting Cooperative Enterpris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연구책임 배유진 | 연구진 이지원 | 수시 18-25 | 160면

연구목적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재편되면서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국비지원 종료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지역 내부 운영주체가 부족함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연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국비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주체를 육성해야 함

이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립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현황을 검토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실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 및 지원방식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연구결과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된 정부보조사업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기반의 자립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측면에서 제도적 동형화를 겪고 있으나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어 양 지원제도가 경쟁적 관계로 작동하고, 일정 기간 지원한 이후에는 자원이 단절되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함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기 지원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제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관리주체로서 도시재생회사의 발전모델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도시재생뉴딜로드맵(‘18.3)을 통해 터 새로이 사업자,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같은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50곳 이상 발굴·지원할 계획을 제시하였음

- 개별 사업모델 및 사회적경제 사업체 발굴은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재생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회사의 모델은 아직 미흡함

- 특히 관련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사업모델 없이 정부지원에 의존하거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가치 없이 공동사업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회사 모델로서 3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 지역관리 도시재생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자로서 권한을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추진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함

- 사회적경제 조직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업화를 시작하여 지역공공자산의 운영조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는 방식으로 성장함

- 도시재생 경제조직은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외에 해당 지역 재생사업 및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발전을 유도함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방안을 제시함

-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일반협동조합도 명시하고, 주택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지방공공기관의 참여확대, 총회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함

-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 공익과 수익이 조화된 사업모델 개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지표에 반영함

-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도시재생회사의 법적기준을 만들고 설립형태 및 공공성에 따른 차등지원방안(세제감면, 사회적성과 연계채권)을 적용함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Future Conditions

연구책임 이용우 | 연구진 변필성, 김성수, 김동한, 임지영, 전유신, 정일훈, 차주영 | 기본 18-09 | 179면



연구목적

도시·군기본계획의 도입으로 현재 도시계획체계의 기초가 만들어진 1981년에 비해 오늘날의 도시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도시계획제도의 수직적 역할 분담 및 계획 상호 간 수평적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한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연구의 목적은 도시가 경제 및 인구 저성장, 기술혁신, 분권화 등 여건변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역할, 내용, 수립 및 운영체계의 재정립방안을 제시하여 도시계획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음

-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및 한계와 여건변화 영향을 정리하고, 재정립방향을 도출함
- 도시·군기본계획의 위상 강화, 이슈 중심의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강화,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인공지능 기반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참여주체의 다원화 및 역할분담 체계화 등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과제를 제시함
- 도시계획체계 관련 법 및 지침 등 제도개선방안과 추진방안을 마련함

연구결과

도시계획체계의 핵심인 도시·군기본계획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 도시·군기본계획이 이슈 중심의 종합계획으로서 시·군종합계획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시·군 업무총괄부서에서 수립하되, 지자체장의 임기와 연동하여 4년 주기로 정비함
- 이슈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이슈 중심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군의 특수하고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개별법에 의한 기본계획과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고, 시·군의 미래상을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의 틀 내에서 구체화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와 객관화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제시 및 생활SOC 접근성 개선 등 공간복지가 강조되고, 시·군 차원에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가 구현되며, 공간복지

및 국토-환경 연동 관련 지표 개발과 평가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도시 현황 파악과 미래 변화 예측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필요함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의 변화 모니터링과 계획, 도시계획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도입함
- 참여주체의 다원화와 역할분담의 체계화가 필요함
- 주민참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제도화되어야 하고, 모바일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의견 수렴방안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함
- 전문가는 계획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는 국가도시정책으로 제시하고, 도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정책제안

도시계획체계의 핵심인 도시·군기본계획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 제시 등 시·군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수립부서를 총괄부서로 격상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친환경성, 균형, 포용, 삶의 질 등 국토공간의 이슈를 시·군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종합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별법에 의한 도시관련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야 함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를 위해 공간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환경계획과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도시계획의 현실성, 정교함, 증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가능지 제시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이슈 중심의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서의 생산을 위하여 지역전문가와 시민이 직접적인 계획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국가도시정책 수립과 도(道)의 광역적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c Response to Smart City Types



연구책임 이재용 | 연구진 이미영, 이정찬, 김익희 | 기본 18-13 | 189면

연구목적

국내의 정책 환경 변화로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대상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시티의 목표, 대상범위, 수단 등을 새롭게 정립하여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 확대

- 스마트시티 정책 목표는 국내외적으로 신기술 활용 도시문제 해결에서 최근 혁신적 신산업 창출까지 확대되는 추세
- 스마트시티 대상범위는 국내의 경우 신도시 중심에서 기존도시 및 쇠퇴지역까지 확대
- 스마트시티의 수단은 기존 기술 및 인프라 중심에서 시민참여, 민간기업 협업, 규제프리존 등 실제 첨단 기술 및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확대

이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정책 변화를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전국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IPA 평가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유형을 구분 후 정책 방향을 제시함

연구결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시티의 주요 관심사가 기술, 인프라 측면은 감소하고 혁신성 측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국내의 경우 스마트시티 인프라 관련 키워드가 2005년 약 46%를 차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2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혁신성 관련 키워드는 2005년 10% 정도에서 2018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
- 해외 역시 유럽의 경우 인프라 관련 키워드가 2011년 약 28%를 차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13% 정도로 감소하고 혁신성 관련 키워드는 2011년 약 10%에서 약 20%로 증가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에 대한 전국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함

-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재정투입은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조성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중앙정부 예산 등을 활용
- 지난 15년 동안 스마트시티 관련 기반시설 조성비는 약 2조 원에서 3조 원이 투입되었고 중앙정부 예산은 3,000억 원 미만으로 기반시설 조성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압도적임

- 하지만 도시정책의 변화로 더 이상 택지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스마트시티 관련 자원 투자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 발굴 필요성이 높아짐
- 지자체 담당자들 설문조사 결과 국내 162개 시·군 중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 지자체는 66개 지자체로 나타나며 수도권 지역이 20개 지자체로 압도적이며 이는 2기 신도시 추진 시 스마트시티 관련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가 다수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유형을 국내외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첨단인프라 구축형, 플랫폼 중심형, 혁신공간 창출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내 지자체들은 혁신공간 창출형으로 전환을 고민 중에 있음

- 국내 스마트시티의 현재 유형은 첨단인프라 구축형 43%, 플랫폼 중심형 52%, 혁신공간 창출형 3%로 나타났지만 향후 5년 이내 추진할 유형으로는 첨단인프라 구축형 20%, 플랫폼 중심형 57%, 혁신공간 창출형 23%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첨단인프라 구축형은 점차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첨단인프라 구축 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주로 신도시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존도시로 확산 필요성은 높으며 이를 위하여 단기간 대규모 예산투자가 가능하였던 신도시 모델과 다르게 기존도시의 각종 인프라 고도화 사업들과 연계하여 기존도시의 첨단인프라 확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플랫폼 중심형은 현재 지자체의 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지만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그 성취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실제 기능들이 상호 연계 통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역별, 주체별 다양한 연계 추진이 필요함

혁신공간 창출형은 중앙정부 및 이론적 부문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유형으로 향후 스마트시티의 주요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개념 중심적 접근에서 구체적인 혁신 실행 방안 마련과 실증 성과들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 마련이 필요함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 Promoting Smart Cities in Korea

연구책임 김익희 | 연구진 이재용, 이정찬 | 수시 18-27 | 76면



연구목적

통신분야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스마트시티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 2011년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하여 교통·환경·방법·방재 4개 분야에 한정하여 자가망 연계를 허용함
- 최근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분야 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가망 연계를 포함한 통신분야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 증대
-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에 장애가 되는 통신관련 각종 법령,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 도출
- 지자체의 자가망 구축 확산 이유를 살펴보고,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망과 관련된 규제를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지자체들의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요금 개선방향 제시
-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사물인터넷의 구축 필요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

연구결과

자가망 연계 가능 분야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허용

-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자가망의 연계 분야 확대가 필요함
-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자가망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및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공공기관끼리 자가망의 연계를 허용해야 함
- 자가망 구축이 어려워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함
-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가망 구축 및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임대 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으며, 이러한 통신요금 부담은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큰 걸림돌임

스마트시티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사물인터넷망 확대

-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확산이 필요함
- 공공사물인터넷은 도시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정책 수립에 중요하므로, 구축 및 확산이 요구되며, 무선 통신 요금 인하 혹은 무선 자가망 구축 및 연계가 요구됨

정책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들이 연계·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제 65조와 관련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 외 사용의 특례범위」 고시 제1조 제5호의 개정이 필요함

- 최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분석될 수 있는 환경이 선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함
- 자가망의 연계 분야 확대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도록 해당 고시의 개정 필요
-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이끌 수 있음

기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전기통신설비의 통신요금 인하 필요

- 2019년에 있을 예정인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침에 관한 행정안전부·NIA·기간사업자들의 논의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전달될 필요가 있음
- 2018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확산 협약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공공와이파이의 확산은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들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과 연관되므로 지자체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Job Creation: The Case of Urban Manufacturing Cluster Regeneration

연구책임 권규상 | 연구진 강호제, 박소영 | 수시 18-05 | 144면



연구목적

도시재생활동가 육성 및 공공일자리 창출, 건설분야 고용증가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며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재생지역 내 산업의 고용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고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정책에서의 과도한 기대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민간 산업 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 부족
- 도시형 제조업과 같이 낙후된 환경에 입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의 뿌리산업으로서 기능하는 산업부문의 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을 연계할 필요

이에 이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인쇄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세부목적을 달성

- 첫째, 도시재생에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국내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의 분포와 지원정책의 한계를 도출하고, 셋째, 국내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의 환경 및 산업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넷째,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토지이용방안, 산업고도화 등과 연계한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전략을 구축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연구결과

인쇄업은 소규모 업체 중심의 산업으로서 성장률이 높지는 않으나 포장·특수인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용 유지

- 도심 내 소규모 업체의 집적을 통한 분업화에 기반하여 맞춤형 생산을 추구하며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주문·배송방식의 변화로 인해 도심입지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상존
- 인쇄업 집적지역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형성되어 인쇄기계에 부적합한 건물에 입지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재개발압력에 직면
- 인쇄업 집적지역의 재개발압력에 대응하여 산업단지 등의 외곽 이전이

추진 중이며, 적절한 이동수단이 확보될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건축물을 활용한 수직적인 공정연계에 긍정적임

- 인쇄업은 저층 위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수평적인 공간분업을 형성하지만, 총별 공정분리, 화물용 승강기, 하중 및 진동에 적합한 설계, 기계에 맞는 공간분할 등이 수반될 경우 입주에 긍정적 인식
- 인쇄업은 자동화로 인해 단순한 공정 습득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부가가치 공정은 오랜 시간의 교육과 노후유가 필요하며 기술과 인맥을 보유한 분사창업이 매우 활발한 산업분야
- 인쇄업 집적지역 내 업체는 대개 타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기술과 인맥을 습득하고 자본투자를 위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분사 창업하여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
- 특수인쇄·포장 등은 기계 및 관련 공정들에 대한 이해, 기술력에 대한 주위의 평판과 신뢰 획득 등 다양한 점들을 극복해야 하므로 업종 전환 및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적합한 교육체계가 필요

정책제안

도심에서의 시장접근이 필요한 일부 공정 혹은 이전이 어려운 후가공 공정은 집적지역 내 존치하고 그 외 제조공정은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채움을 위한 비움'으로서 이원체제 전략을 제안

- 추진의 기본방향은 기획 및 디자인 공정은 여전히 도심입지가 필요하나, 제판·인쇄·후가공 등 생산 공정은 공정연계가 중요한 입지요소이므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화 유도
- 존치지역은 도시재생 신규유형으로 '도심산업형'을 신설하고 이전하는 업체들의 부지 및 공간을 활용하여 존치업체들의 집단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추구
- 이전지역은 인쇄공정에 연결된 다양한 업체를 집단 이전하기 위해 인쇄업 종사자들 간 '협동화 사업'을 유도하여 도심 인근의 산업단지 조성 및 소규모 업체의 동반이주를 통한 산업생태계 유지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원체계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고용 및 신규창업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정주환경 제고, 기술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Why Disappearing Urban Neighborhoods Matter: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연구책임 구형수 | 연구진 민범식 | 수시 18~18 | 102면



연구목적

도시근린지역의 소멸가능성 대두

- 최근 인구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논쟁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 차원과 달리 근린 차원에서는 향후 충분히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에 적합한 정책 대응이 미흡한 상황

- 과소현상에 대한 정부정책은 그동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쇠퇴지역을 재생하거나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개념 정립 및 실태를 분석하고,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연구결과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지역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세 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세 번째 단계인 ‘한계근린’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함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 내에서도 한계근린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비중이 크며,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희주거·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한계근린에서 공공도서관과 병·의원을 이용하려면 존속근린에 비해 3배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약국이나 편의점, 슈퍼마켓의 경우 4배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

해외에서는 축소(과소)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축소(과소)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미흡

정책제안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근린지역의 주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지방중소도시의 어떠한 근린지역이 소멸위기 상태에 도달하는지 선제적으로 진단하거나 주요 실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진단→기본전략→세부관리방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체계 개편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항목으로 근린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을 신설하여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기본전략을 담도록 하되, 사회·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새로운 사업모델 확립

- 시설 설치 위주에서 서비스 전달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생활서비스 전달 수준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도달거리 형태의 최소기준을 설정함

지역발전을 위한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Efficient Use of Vacant Public Facil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연구책임 이승욱 | 연구진 김명수, 조판기, 김은란, 구형수, 박소영, 김수진, 배인영, 김용기, 임영식, 조미향 | 기본 18~21 | 180면



연구목적

인구감소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 내 유희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혁신을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

- 유희공공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중소도시 중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대표 도시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전기)데이터를 통해 유희공공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발생원인 등을 분석함
- 지역혁신 및 포용적 활용에 있어 유희공공시설의 한계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검토, 활용사례 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지역발전을 위한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국내 유희공공시설의 활용 실태 분석과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유희공공시설 활용의 근본적인 이슈를 활용, 제도, 시스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도시쇠퇴를 경험하며 도심 및 구시가지에 유희공공시설이 발생하고 있음

- 중소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 정체 및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지역 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인해 도시 내 유희공공시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유희공공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쇠퇴도시 20개를 선정하여 도시 내 국·공유지 내 건축물의 에너지(전기)사용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첫째, 분석결과 20개 도시에서 국·공유지 내 공공건축물 중 동수 23.0%, 연면적 19.0%가 유희로 의심되는 건축물로 나타남

둘째, 공간적으로는 구도심 및 구시가지에서 유희(의심)공공시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시가지화지 확대가 유희공공시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셋째, 유희공공시설 현황분석 결과 2㎡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활용가치가 낮아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함

즉, 이처럼 각자의 특성을 가진 유희공공시설을 획일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필지는 매각·교환을 통해 단지규모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식 또는 복합화를 통해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도시규모, 인구변화, 쇠퇴정도 등 지역특성마다 발생하는 유희공공시설의 개수와 연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이 요구됨
- 이 연구에서는 대상지 진단 후 지역의 유희공공시설 활용 목표 설정 후 달성하기 위한 도입기능으로서 ‘지역혁신형’, ‘포용적 활용형’, ‘복합적 활용형’, ‘임시활용’ 등 네 가지 기능 유형을 제안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혁신·포용성장을 유희공공시설 활용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정책목표로 설정
- 유희공공시설의 지역혁신 및 포용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희공공시설의 명확한 법적 개념과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희시설로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
-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단위의 시설현황 파악이 우선되고 활용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유희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지역 중심의 유희공공시설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유희행정재산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필요
- 국·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희행정재산의 현황 파악과 활용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가칭)국·공유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활용 관련 실천방안 수립 필요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Strategy and Practice in the Compact and Network City Policy



연구책임 권규상 | 연구진 다무라 후미노리, 김영룡 | 수시 18-22 | 144면

연구목적

도시재생 및 국토공간의 기본공간구조로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가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실정에 맞게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 논의는 파편화되어 있거나 방향과 수단이 불분명

- 국내에서 컴팩트 시티나 네트워크 시티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의 스마트 성장, 일본의 컴팩트 도시를 위한 입지적정화 계획이나 정주자립권 구상 등을 분석하면서 정책구조와 수단에만 초점을 맞출 뿐 효과와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관심 부족
- 예를 들어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정주자립권구상의 성공 여부와 효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 실패했다면 실패한 이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재

이에 이 연구는 국내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컴팩트-네트워크 도시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3가지 세부목적을 지님

- 첫째,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의 이론적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해외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 추진과정의 한계,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국내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셋째, 국내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정책대안 제시

연구결과

도심이 외곽의 대형 쇼핑 중심지나 집객시설을 대체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기능을 차별화하는 방향 설정 및 거점의 수를 축소하여 설정

- 미국과 일본의 컴팩트 정책 추진 사례 도시의 경우, 도심과 성장경계 내로 다양한 기능을 입지시키기 위해 세금감면 및 자금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집객을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의 지원정책 추진
- 일본의 도야마나 아오모리 등 집객을 유도하는 지역에서 기능을 도심이나 유도지역에 입지시키더라도 집객은 매우 어려우며, 미국 도시에 서도 여전히 외곽의 쇼핑물 등으로 이동할 뿐 도심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저조

적정규모의 거점설정 및 거점 간 기능의 차별화 필요

- 기능유도를 위한 거점을 다수 설정하는 경우, 집객을 위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으며 과거 중심지를 모두 유도구역으로 설정하면 분산으로 인한 정책 효과 반감

도시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성장경계나 입지적정화계획에서 유도지역 내로 개발 유인과 함께 외곽 개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반감

기존 도시 인구의 거주이동은 상대적으로 어려움

- 거주에 대한 선호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기존 거주민의 이주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도시별 인구 규모와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소수의 거점 중심으로 집약적인 공간구조 확립

- 도시공간구조가 단핵구조일 경우 해당 중심지에 도시 전체의 중심적 기능을 유도하며 다핵구조일 경우 중심지 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필요
-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입지한 지역의 경우 신규 개발에 따른 이점이 존재하는 신시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구도심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체계 필요

- 성숙·안정형 도시유형일 경우 필수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에서 공간구조와 교통축을 고려한 유도구역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지정
- 기능유도 중심의 거점구축사업은 지금과 같은 동별 쇠퇴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추진하기보다 실제 사업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쇠퇴 기준 완화 적용

외곽개발에 대한 규제와 거점 인근 유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혼합 필요

- 도시외곽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성장관리방안을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중복 지정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의 택지수급계획 작성 시 도시재생을 통해 제공 가능한 주택물량을 고려하여 외곽택지소요량의 과대추정 방지
- 신규 이주자가 거점 인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생활거점의 기능 강화 추진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How Korean Redevelopment and Latin American Slum Upgrading Diverge and Converge: Critical Reflections on Policy Responses to Urban Informality

연구책임 김수진 | 연구진 이진희, 이소영, 박혜정 | 수시 18-21 | 116면

연구목적

- 중남미국가의 비공식주거지(Informal Settlement) 관련 정책은 도시 정비 차원의 대응 전략이 미흡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 이에 중남미 도시지역에 위치한 비공식주거지와 관련하여 90년대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급격한 정책변화가 일어났고, 더불어 공공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미주개발은행(이하 IDB)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자체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 사례공유 및 중남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요청함

- 이 연구는 최근 30년간(1980~2000년대)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흐름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중남미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결과

-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은 크게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사업대상지 특성에 따라 정책목표, 정책대상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달라짐

-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공공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 철거 후 이주로 인한 원거주민의 지역이탈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지역공동체 와해에 일정 부분 기여

- 주택재개발사업의 작동기제는 사업성 확보, 부동산 가치상승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 건설경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휴자본이며, 문제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정부 의지와 의미 있는 공동체 참여 부족으로 이는 중남미국가 정책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임

-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남미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요인(주택점유형태, 도시공간구조, 비공식주거지에 대한 사회인식 등)에 의해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남미국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슬럼업그레이딩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행·재정적 역량 부족 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중남미국가의 관련정책 또한 철거 후 이주로 인한 원거주민의 지역이탈현상에 대응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질문이 제기된 바, 사업대상지 유형에 따라 정비사업의 보완책을 병행·조합한 세 가지 사업모델(공공주도, 민간주도, 공공관리)을 제안함

정책제안

- 정비정책의 적용에 앞서 중남미국가의 사회경제적, 공간적 맥락에 맞게 각 사업의 작동기제를 점검하고, 사업대상지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

-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공공과 민간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를 인식하고, 각각의 사업모델(공공주도, 민간주도, 공공관리)에 따라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

3

국토환경·자원연구

-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
-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Development of the Urban Flooding Risk Prevention System(III)

연구책임 이상은 | 연구진 김종원, 한우석, 이병재, 이종소, 김슬예, 송창근, 함영한 | 기본 18-32 | 332면



연구목적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도시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시자원의 방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 하였으며, 이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특히,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취약지역의 방재대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에 초점을 맞춰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구축

연구결과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별 기초자료를 개발하고 프로파일 등을 통해 시각화

- 도시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자체가 방재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의하고 신뢰도 높은 위험정보를 구축
- 지자체에서 중점관리 대상지역의 방재대책을 발굴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위험지역 위치, 주요 위험원인, 대책수단의 목록과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작성
- 도시계획 담당자들의 수요와 작업환경에 맞춰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구축
-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제시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검증뿐만 아니라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수단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제 재난관리 정책 흐름에 맞춰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 기술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재대책 수단을 마련하는 데 큰 기대효과가 예상됨

정책제안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화) 정부에서 목적지향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확도 높은 위험정보 생산을 지원

(수요자 맞춤형 도시방재 정보서비스 제공)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수요에 맞춰 방재대책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

(도시방재 기술역량 고도화) 관련 자치에 근거를 확보한 뒤 도시침수를 중심으로 우선 시스템을 운영하고 산사태, 해일 등에 대해서도 정보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활용)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의 공간범위, 주택정비 대상 등을 결정하여 도시침수 방재대책을 추진하는 데 본 시스템을 활용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

A Study on Pricing Local Water Supply Service for Relieving Regional Disparities and Sustainable Water Supply

연구책임 조만석 | 연구진 김아름, 허성윤 | 수시 18-09 | 88면



연구목적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7.5%(2015)로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소규모 지방도시 및 농촌 지역의 상수도관리 재원조달 및 서비스 증진에 문제를 겪고 있음

- 특히 인구가 적고 물이 부족한 여러 군 지역의 경우 높은 비용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하여 노후 관정 문제, 누수율 문제 등 상수도의 질적 관리 문제가 심각함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정책 검토와 상수도요금 및 이용·관리 실태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수도 통계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상수도요금 수준과 상수도 이용현황, 관리 실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식별
- 경제학적 이론의 심층적 고찰 및 기존 우리나라 상수도 정책대안의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우리나라 여건 변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대안방향 제시
- 상수도 사업의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추정 및 각종 통계지표를 통한 지역 간 격차 분석을 바탕으로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의 객관적 근거 마련

연구결과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3년 89.3%를 최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기준 77.5%까지 떨어짐

-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상수도 평균요금 상승률보다 총괄원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임
- 상수도 평균단가는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2.26%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총괄원가는 동 기간 연평균 2.96%의 증가율을 보여 상승폭이 더 컸음

총괄원가 추이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대도시권과 시 지역, 군 지역의 차이가 극명함

- 2015년 현재 7대 특·광역시 지역의 평균 총괄원가는 685.7원/톤, 시

지역은 876.1원/톤, 군 지역은 1,821.4원/톤으로 그 차이가 극명

- 총괄원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나 시지역의 경우 평균 총괄원가의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군 지역의 평균 총괄원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행정안전부(2013)의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른 총괄원가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단순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기 지표만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재무지표 이전에 총 공급량, 유수율, 시설이용률, 최대가동률 등 사업지수 등을 먼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최소 4~5년의 사업지수 및 재무지표를 확인하며, 경영·재정계획 등도 총괄원가 산정 시에 반영

급수인구수(가구수)가 많고, 관로 길이가 길며, 급수량이 많은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들의 상수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계량적으로 검증함

- 상세분석 결과 시 단위보다 군 단위에서 규모수익이 크게 나타났으며, 군 단위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 보급률, 지역 간 용수 수급 불균형 및 규모의 영세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

정책제안

상수도 관련 최상위법령인 「수도법」에서 원가보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요금의 형평성 제고, 수요자의 부담력 제고, 장기전망 및 사업계획 고려 등의 구체적인 요금체계 설정 원칙을 명시하여 법률상 구속력 강화 및 개선 유도가 필요

현행 재무지표 기반에서 벗어나 상수도사업의 외부비용, 기회비용, 환경비용 등을 고려한 총 경제적 가치 관점의 원가산정이 주된 설득 및 지역 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 유리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

장기적인 지방상수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상수도 요금인상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요금인상 여파 완화 및 광역권 통합 시 요금격차 조정 등 수요자 충격 완화를 위해 상수도 기금 등을 설치·활용할 필요가 있음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Using the Mobile Big Data for the Smart River Space Management

연구책임 이상은 | 연구진 조만석, 이광섭, 유영준, 유병혁, 최돈정 | 수시 18-20 | 139면



연구목적

친수지구를 활용한 지역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과 실무 차원에서 하천이용객 수요를 잘 이해하고, 친수지구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짐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를 위해 2017년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통신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존 현장조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타진

이 연구는 친수지구 관리에 있어서 하천이용객의 실제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수집한 통신 빅데이터에 대해 자료원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하천관리의 정책·실무 차원에서 그 활용성을 검토

- 아울러 당장의 자료수집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추진해오던 여러 기술기반 구축 사업, 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 등과 연계한 후속연구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하천이용·관리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고찰

연구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친수지구 내 유동인구 자료는 크게 이용객 수, 이용 패턴(월 단위, 주중/주말), 이용객 특성(성, 연령), 이용객 유입지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료 활용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배후지역 도시화 정도에 따라 과거 현장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집계가 용이한 장점을 감안할 때 전국 차원에서 이용도의 지표 사용하기에 훌륭한 자료원이라고 판단됨
- 하천이용이 활발한 두 곳과 저조한 한 곳의 월별 이용패턴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 등을 위한 두 곳과 관광목적에 뚜렷한 한 곳의 주중/주말 이용패턴 또한 그 차이를 수치적으로 확인
- 세 곳 모두 하천이용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지만 관광목적의 친수지구가 여성이용객 점유율이 다른 지구에 비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용객 연령구성은 친수지구마다 크게 다름을 파악
- 지역주민이 여가, 휴식 등으로 활용하는 두 곳은 과반수 이상의 이용객이 해당 지역에서 유입된 반면, 관광목적에 뚜렷한 곳은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한 ‘관광객’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용객 1인

평균 이동거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됨

이러한 자료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통신 빅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용객 수, 유입지별 이용객 자료를 활용하고, 향후 체류시간 정보, 이동 수단, 방문 목적 등의 자료가 보완된다면 계량분석을 통해 지구별 이용가치를 판단하고 친수지구의 지정·해제·축소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 가능
- 통신 빅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면적당 이용객 수, 주말의 이용객 점유율, 타 지역 이용객의 자료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마련한 정량적인 판정기준을 통해 실제 이용패턴에 근거하여 친수지구의 유형 구분 가능

아울러 자료는 하천 유지·보수 계획과 예산 수립 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통신 빅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297개 친수지구의 면적당 이용객 수를 이상치 분석, 분위분석 등 통계기법을 통해 총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친수지구 이용도 등급화 결과는 실제 이용도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차등화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 가능
- 한강시민공원의 실적자료를 해당 친수지구의 이용도 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친수시설 관리, 환경관리, 수목관리 등 예산항목의 차등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추후 연구주제와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함

- 통신 빅데이터의 정확도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유동인구의 후처리 방법 개발, 자료수집 대상지역 확대, 집계구 또는 표준격자 단위의 유입지 자료 수집
- 정책·실무 의사결정 품질 향상을 위해 체류시간에 대한 자료 수집, 친수지구의 추가시설 확충 필요 여부 판단기준 마련, 정기적인 설문조사 실시, 장래 친수지구 이용패턴 예측 방법 개발, 공간적 이용패턴 관련 추가자료 수집
- 하천행정의 지능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 하천이용·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 of Water Resources Considering Efficiency and Acceptability



연구책임 김창현 | 연구진 김종원, 조만석 | 기본 18-28 | 293면

연구목적

하천정비나 물 공급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정체 및 감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투자 및 공급위주였던 수자원 정책이 중대 국면에 직면

- 향후 수자원 관련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통하여 대국민 설득력(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수자원 관련 여건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정책방향,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강화와 대국민 설득력이 높은 수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초 근거를 제공

연구결과

경제적 효율성의 수자원 정책방향 도출

- 향후 치수부문 정책은, 특히 비도시지역 지방하천에 대하여 홍수터 복원·관리 등 비구조물적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이수부문 정책에서 물 공급능력 확대보다는 기 개발용수의 재배분 등 수요관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정책방향
- 하천공간부문 정책은, 친수지구의 조성·정비, 유지·보수, 지정해제·자연생태환경 복원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경제적 효율성의 수자원 정책방향을 위한 수자원 정책대안의 도출

- 치수부문의 비구조물적 정책대안들 중 홍수터의 복원(지정) 및 관리 및 이수부문의 물 수요관리 정책대안들 중 기 개발용수의 용도 간·지역 간 재배분
- 여기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지역 간 이해관계 대립의 해소가 핵심
- 하천공간에서 친수지구의 보전·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정책대안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수자원 정책 실천방안의 도출
- 치수부문에서는 홍수터의 전면매수를 통한 하천구역 편입(공익적 활용)과 이수부문에서는 수원지역과 수역지역 간의 교류·협력 제도 도입

- 수리권 확립과 수리권 거래제도의 도입, 수원지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금의 도입도 주요한 실천수단
- 하천공간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하천구역 관리·이용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하천이용협의체(지역주민, 지자체 등) 구성 및 지자체의 하천이용 자율성 확대도 주요한 실천수단

정책제안

수자원 정책방향 및 정책대안의 경제적 효율성 검토·평가 제도의 도입

-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검토·평가하는 절차의 제도화
- (치수정책) 홍수터 지정·관리지침의 마련과 홍수터 매입 재원조치의 강구
- 홍수터 지정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침,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제방축조 등 하천정비 추진
- (이수정책) 수원지역과 수역지역 간 교류·협력제도의 도입
- 유역을 단위로 하는 경제·생활권 형성을 유도
- 지역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수계 단위의 자체기금 마련
- 소규모 댐이나 저수지 등 신규 수원 개발에 대한 수리권 제도의 확립
- (하천공간정책) 하천구역 관리·이용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제도 기반 마련
- 제내지 토지이용이나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하천구역 이용·관리 등
- 친수지구의 체계적·계획적 관리·활용을 위한 내용을 포함
- 친수지구의 신규 지정과 조성·정비(대도시 이용포화구간 중심)
- 기존 친수지구의 유지·보수와 재정비(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등)
- 유류·방치 친수지구의 지정해제와 자연생태환경의 복원·보전
-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하천구역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 명시
- 지자체, 지역주민(상공인 등) 등에 의한 이용협의체의 구성과 지역주도의 하천구역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등
- 수익자부담원칙에 기반한 하천구역 관리기금의 제도화를 검토

4

주택·토지연구

-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 건설산업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기초연구
-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중심으로
-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Advanced Management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Dispute Adjustment

연구책임 최수 | 연구진 이형찬, 안승만, 윤선근 | 기본 18-04 | 192면



연구목적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은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혹은 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 연구의 목적은 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해외사례의 체계적 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과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연구결과

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그리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 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집합건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음

- 집합건물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집합건물', 상가, 대규모점포 등으로 사용되는 '상업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등으로 사용되는 '업무용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집합건물', 학원, 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과 동시에 상가로 사용되는 '복합용도용 집합건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집합건물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자치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
- 집합건물은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리소장과 관리인 등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 집합상가 관리비는 입점상인이 지불하는데 관리비로 운영되는 관리업체는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가 있음
-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대부분의 외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특수성이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나 특별규정이 입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따라 법제도의 통일성 유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체계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은 통합된 법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법체계가 달라 지금 당장 통합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염두에 두고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정책제안

(법체계의 통합성 유도) 외국사례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가 바람직함

(공적 규제 강화) 통합적 법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일 규제 적용)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 시 공동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및 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실효성 제고)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기초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the Use of Big Data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연구책임 김성일 | 연구진 안종욱, 조정희, 문혁, 주기범, 장철기, 김재영 | 수시 18-17 | 123면

연구목적

건설산업 분야에서 시설물 및 건축물의 생애주기별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나, 정보의 유기적 연계·통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기존 건설산업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정형정보를 중심으로 행정정보 및 통계정보가 구축되어 활용

- 개별 행정주체,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각기 그 필요성에 따라 사업정보 및 통계를 생성하여 활용하여 개별 시설물 및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정보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건설산업 빅데이터는 건설 시공 및 유지관리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유지관리, 개량 수요 파악 등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이에 이 연구는 건설산업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차원에서 시설물 및 건축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통합형 건설정보 구축 방안을 제시

- 기존 건설산업 정보 활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기본체계와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연구결과

건설공사는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부처 포함 약 30개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공사 참여 업체 및 참여자 인적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소속·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 중

현재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

- 건설사업 관련 공공 정보시스템들은 거래처리시스템(Transaction Processing Systems: TPS)의 관점에서 주체와 행위에 따라 별도로 구축되어 시설물과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과 업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함

- 시스템별로 상이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를 수집·생산·관리함에 따라 데이터가 분절적이며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근의 어려움, 데이터구조의 복잡성, 정보 누락 및 중복 등 문제 발생

- 기관 내부에서도 시설물·건축물별 생애주기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

- 정보의 활용도가 낮고 사업 투명성, 관리 효율성과 관련한 기여도 향상을 위해 대국민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등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정책제안

건설 관련 DB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보주체 간 정보공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시스템과 별개로 '생애주기 통합 건설정보포털(가칭)'의 구축

- 생애주기 통합 건설정보포털에 저장될 정보의 객체(Entity)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완성물(Stock) 기준

- 정보 인덱스 시스템 구축, 고유식별자 연결,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 정보포털 구축

- 시설물과 건축물의 생애주기 단계별 정보는 현행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주체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유지하고, 핵심 정보부터 단계별로 연계를 확장

생애주기 통합 건설정보포털 구축을 위한 실질적 계획 수립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생애주기 통합 건설정보포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 전략을 수립을 위해 인덱스 DB의 항목 및 속성 정의, 정보연계 방식 정의, ISP(정보화 전략 계획) 추진 및 시스템 설계 등을 위한 R&D과제 추진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생애주기 통합 건설정보포털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 주체 및 구체적 운영방식 결정

- 「건설생애주기 빅데이터 조성 및 이용 효율화 법률(가칭)」의 제정 및 건설사업 및 생산과정, 시설물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련된 법률 정비를 통해 건설정보의 효율적 관리,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Study of Policy for Construction Workers: Responding to Technology Development



연구책임 안종욱 | 연구진 김성일, 윤하중, 조진철, 이승훈, 조정희, 조재용 | 기본 18-05 | 122면

연구목적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등 고용안정성은 낮은 편에 속함

-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건설현장의 생산기반이 악화되는 현상이 심화됨
- 건설일지리의 취약성을 개선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자동화·모듈화·지능화 등 건설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지는 못하는 실정임

이 연구는 건설현장의 기술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의 유지, 육성, 관리 정책을 제시하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 건설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기술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변화와 건설생산기술의 발전 전망, 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 해외사례 조사 등의 분석을 종합하여 기술변화를 고려한 건설인력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연구결과

건설업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이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실정임

-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52%로, 전 산업 평균(33%)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
- 기능인력은 건설근로자 중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나, 상용직의 10%에도 못 미침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포함한 기존 건설인력정책을 기능인력 중심으로 분류하면 평가·분류 체계, 교육 훈련 지원, 고용 관리 효율화 등 세 가지로 정리됨

- 정책분야별 중요도, 기술 준비, 기술변화 영향 등을 파악한 결과, 평가 분류, 고용관리, 교육훈련순으로 정책 수요가 큰 것을 발견함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건설기술의 변화는 자동화, 모듈화, 지능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됨

- 기술변화별 시의성, 작업방식 영향, 인력수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한 결과, 모듈화, 지능화, 자동화순으로 정책 수요가 큰 것을 발견함

건설업이 발전한 나라들의 건설기능인력 육성 사례를 종합해 보면, 직업 교육훈련, 교육, 전문 자격을 통합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협력하여 청년층이 건설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함

- 등록기간기능자 제도는 숙련된 작업 능력, 풍부한 지식, 현장 관리 능력을 갖추고, 전문공사업 단체의 자격 인정을 받은 기능인력을 등록하여 대우함
- 초급인력에서부터 중견인력, 반장, 숙련인력으로 성장하는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커리어패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등록기간기능자가 그 최상위 등급에 위치함

정책제안

정책대응 방향을 우선 설정한 다음, 단기에는 기술변화와 관련이 낮은 인력 확보 등 기술변화 대응의 기초 작업에 치중한 뒤, 중장기적으로 기술변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인력정책의 체계를 마련해야 함

(평가 및 분류체계) 작업과 능력 구분에서 합의기반 및 현장 반영

- 명확한 경력경로 제시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자격 및 기능인 등급을 기술변화에 맞게 개선

(교육훈련 지원) 진입 장벽 최소화 및 지속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숙련인력 육성

- 단기에는 병역특례 도입 및 지속적 교육지원(일학습병행) 필요, 중장기적으로 기술비전과 로드맵을 구성하고 그에 맞춘 교육훈련 내용 개선

(고용관리 효율화) 노동자의 동기부여(생산편익)와 사용자의 비용 절감(소비편익)

- 기능인력 통합 DB 구축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여성인력 활용 계획 수립 필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etterment of Housing Allocation System to Improve of Quality in the Apartment Construction



연구책임 이수옥 | 연구진 박천규, 전성제, 최진도, 손은성, 이기상 | 수시 18-06 | 94면

연구목적

이 연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발생과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주택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주택 선·후분양제의 특징과 장단점, 아파트 하자발생 유형과 건축공정별 발생 실태, 하자소송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 전문가 심층면담조사(IDI)를 통해 하자발생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가 가능한 분양시기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아파트 하자발생 최소화,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가격 상승 억제 등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시기 및 분양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주체와 소비자의 부담 최소화 방안, 사업주체별 아파트 후분양제의 단계적 적용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연구결과

아파트 하자발생은 대부분 마감공사 전후로 발생하며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도 보수 중심에서 보상 중심으로 변화

- 하자는 마감공사에서 주로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분쟁도 대부분 이에 집중

- 하자 발생이 빈번한 건축공정은 10개 공종으로 골조, 창호, 방수, 미장, 수장, 타일, 도배, 도장, 단열 등

후분양제 환경이 미 구축된 상황에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위기,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

- 학계, 시공사, 민간시장분석기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파트 하자 빈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분양시기(후분양시기)를 조사한 결과, 80% 이후 분양을 가장 선호

- 후분양제 확대 도입 시에는 자금조달 방식, 보증의 다양화 및 기능 향상, 중소 건설기업체를 위한 조치방안, 소비자 주택자금지원 방안 등 후분양제 시장에 맞는 환경 구축이 선행될 필요

- 도입은 일시적 보다 3단계에 걸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 분할분양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

정책제안

공동주택 품질향상 방안으로 하자 감소 추진 및 주택 후분양제 재도입을 제안하고, 아파트 하자발생 감소와 주택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 정책의 추진을 제안

- 아파트 하자 발생, 하자 소송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기를 마감재 공정 시기에 맞춰 건축공정률 60% 이후로 조정
- 하자 감소를 위해 감리자도 하자 책임을 지도록 감리제도 강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수분양자의 하자청구권을 강화, 불공정 도급구조 개선
- 아파트 후분양제는 60% → 80% 혹은 80% 이상으로 단계적·점진적·자율적 확대도입이 바람직하고, 공적보증 강화 등 환경기반 구축 병행
-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주택공급 위축 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 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 우선권 부여, 조달금리 인하 지원,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for Shared Housing Supply



연구책임 최수 | 연구진 정승혜 | 수시 18-08 | 181면

연구목적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가 가족일 경우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1인 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에 가구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필수적인 설비로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구가 필수설비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공용시설의 공유로 가구당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열악한 주거수준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사례 검토, 거주자 인식 조사 등을 통해 공유주택의 주거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택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연구결과

1~2인 가구는 2015년 53.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45년에는 71.2%로 증가할 전망이며, 새로운 주거양식이 등장하게 됨

-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공유주택이 1인 가구 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음

공유주택의 개념, 준주택과 공유주택의 차이, 기존 최저주거기준 제도와 문제점 및 한계

- 공유주택은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부엌 등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하우징(Co-housing), 공동체 주택(Collective House), 협동주택(Cooperative House), 그룹 홈 등과 유사한 주거형태임
-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미국, 영국에 비해 선진적인 수준에 그치는 수준임

공유주택은 가구당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열악

한 주거수준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방안 모색 필요

- 공유주택 공간을 거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개인사용공간'과, 생활지원공간(필수 부대시설)과 주민공유(커뮤니티시설)공간인 '공동사용공간'으로 분류하여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면적을 제시
- 소규모(10인 미만) 공유주택은 기존주택을 활용하여 공유주택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기준은 필요하지 않으나, 최소 침실규정 및 채광과 환기 기준은 지침으로서 명시되어야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공유주택에 대한 시설·안전·위생·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같이 고려해야 함

미국, 영국, 호주는 공유주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며 성능요건, 취사 및 쓰레기 처리, 화재 예방, 피난 조명 및 출구, 대피계획 등에 대한 건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전 세계 최고의 집값을 자랑하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 인원수 대비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공유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만족도를 평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이용하여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거주자들은 저렴한 주거비를 우선으로 공유주택을 선정하고 있으며, 방법 및 보안시설 마련을 기대하고 있음

정책제안

공유주택의 현황과 설문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현행 최저주거기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공유주택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대안인 공유주택의 활용 및 성장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함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Location Housing Affordability Index



연구책임 박미선 | 연구진 김호정, 강미나, 김도형, 권기현 | 기본 18-06 | 193면

연구목적

국정과제를 통하여 서민 주거안정,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교통·통신비 절감에 따른 생활비 절감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면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

- 유엔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주거지 개발 등 주거지의 적정입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주거입지 결정 시 교통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정립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 중

-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주거부담지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부담 수준이 차이를 파악하고 있으나, 공간적 정밀도가 높지 못하여 입지 분석에 한계
- 이 연구는 기존 주거부담지표를 보완하여 입지를 고려하고, 공간적 정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교통부담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으로 한정, 공간적 정밀도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 수준으로 분석

- 연구의 대상은 주택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임차가구로 한정

- 임차가구의 주거비와 교통비 산정을 위하여 최근 2년간 전월세 실거래자료(2016.1~2017.12)를 활용하여 주거비를 산정하고 최근 연도 가구통행실태조사(2016) 전수화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비를 산정

- 분석방법은 통계분석, GIS 맵핑, 지오코딩, 네트워크 분석, 설문조사 등을 활용

주거부담 수준 측정 결과는 주택정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부담 기준은 20%(1910년대)에서 25%(1960년대)로 상향 조정 후 30%(1980년대)로 상승함
- 주거부담 기준은 공공임대주택정책,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

정과 정책효과 평가기준으로 주택정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중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토대로 주거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입지별, 주택유형별로 교통비를 포함한 주거비 부담이 소득 대비 과다한 가구가 발생함을 확인

- 수도권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19.6% 수준, 교통비 포함 시 23.3%까지 상승
-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남

주거입지 결정 시 주거비와 교통비의 영향력 분석 결과, 주거비의 영향력이 월등히 높으나, 출퇴근 시간이 길고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통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최대 추가 통근시간이 짧아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추가 주택가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낮아 보충금 증가 여력이 적음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통비를 포함한 주거부담지표를 개발하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포용 및 국가균형발전) 지역별, 입지별 주거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자체의 자치 및 분권강화가 필요
- (주택정책) 주거교통부담지표를 신도시 및 주택 건설에 활용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부담가능주택 건설 재원 배분기준으로 활용
- (교통정책) 중앙정부의 대규모 교통사업 의사결정에 본 지표를 활용하고,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지역 및 가구 선정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
-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도시쇠퇴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Housing Policy Strategies in Response to Downtown Revitalization



연구책임 박천규 | 연구진 전성제, 변세일, 노민지 | 수시 18-24 | 90면

연구목적

최근 일부 도심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 악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주민의 이주가 늘어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택부문의 연구와 정책적 고민은 미흡한 실정

-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 도심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거문제를 조명하고, 주민들의 악화된 주거환경에 대해서 보도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

-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제기되는 주택시장 불안,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 모색은 미흡

기존 도시의 활성화가 지역 주택시장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주택부문 정책과제 도출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도심활성화 거주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연구결과

최근에는 기존 원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주요한 도심 내 문제, 즉 정책과제로 대두

- 이러한 도심지의 문제점들의 경우 원거주민의 주거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택정책 차원의 대응방안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도심활성화 사례지역으로서 서촌과 북촌의 경우 주택 수요는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5년까지 이러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어 주택가격이 상승

도심활성화 과정에서 기존 주거용도 건물이 상업용도로 바뀌면서 주택재고가 감소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소음 및 쓰레기 증가, 주거지 무단 침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주차문제 심화 등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대두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더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마을 기능 쇠퇴, 즉 생활

SOC 부족 문제도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더해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주민 간 갈등 야기와 그에 따른 마을 커뮤니티가 약화됨

- 도심활성화에 따른 상가 문제는 해당 지역의 정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로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

정책제안

이론 및 이슈 탐색, 시장 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저렴한주택 공급, 기초편의시설 및 주거서비스 유지, 커뮤니티 강화 등임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주택과 생활SOC 및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제안

거주민 간, 거주민 및 상인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제안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정주성 강화를 위해 거주민의 계층별, 세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마련

도심활성화로 인해 정주성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생활 SOC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지역별 수요 대응 주택공급 방안



A Study on Housing Supply and Stock Management for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I): Focusing on Strategies for Inducing Housing Supply in Response to Housing Demand by Region

연구책임 변세일 | 연구진 박천규, 오민준, 정경석, 조정희, 권건우, 전성제, 이운상, 방보람 | 기본 18-33 | 232면

연구목적

가격 상승기에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어 나타나는 수급 불일치 문제로 인해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 수급격차로 인한 부작용은 수요초과 시기에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공급초과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국민들의 자산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를 양산

- 주택 수급 불일치로 인한 주택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모니터링 및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

이에 이 연구는 신규주택 수급 불일치로 인한 지역부동산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 대응 주택공급 유도방안을 도출

- 지역별 수급 불일치 발생원인과 영향에 대해 검토한 후, 수도권, 영남권 등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경쟁률, 미분양률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수행

-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건설업체 개별 심층면담조사(ID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주택 유형 중 공동주택이 비율이 75% 수준으로 제일 높고 공동주택의 약 80%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유형의 비중도 아파트가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규주택의 수급문제 접근 시 아파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지표를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주기적으로 주택시장에 관한 정확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부족한 실정

아파트 수급이 아파트 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대수 증분, 준공물량, 청약자수, 미분양물량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수급관리를 통한 아파트 가격 안정의 효과를 확인함

청약 경쟁률 및 미분양의 결정요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 단지총세대수,

㎡당 분양가격, 가계대출금리,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숲·백화점과의 거리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 차지단체가 인허가 시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인허가 시 단지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중앙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보증 전 분양가 통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청약 경쟁률 및 미분양률을 조절할 필요

- 금융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미분양률을 줄이기 위한 고용률 등 지역산업 안정성 제고 정책도 동시 고려 필요

-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택수요자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조사결과와의 조사 및 공표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고, 가격과 거래량,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

정책제안

지역 주택시장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해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통합정보를 쉽게 제공

지역별 주택시장의 객관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와 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부동산시장 평가결과를 제공

주기적인 수급격차에 의해 시장의 불규칙한 변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택공급과정에서 법제도상 수요 검증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수급 불일치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택지 확보가 중요하며,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의 역할 강화

대출금리의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정책 운용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중심으로



Community Based Asset Management Organization to Invigorate Social Economy: Focused on the Social Real Estate Management Organization

연구책임 최명식 | 연구진 김승중, 송하승, 김수진, 홍사흠, 전은호, 박윤미, 오근상 | 기본 18-11 | 179면

연구목적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와 함께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방식으로부터 중소규모 개발방식으로, 개발-공급 중심에서 임대·관리·리모델링 위주로 변화

-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내에서 공유되어 선순환되는 구조가 필요
- 이러한 구조 구축을 위해 지역에 기반한 자산관리조직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의 도입을 위해 사회적 부동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부동산을 공유(共有)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 기반 자산관리조직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분야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연구결과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의 특징과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 명칭을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으로 함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란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및 운영조직’을 의미함
-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목적을 가진 부동산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되어 사회적 임대업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함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자산 공유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회적 부동산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모델이 제시될 정도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

- 문화예술 또는 지역재생 등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던 지역 기반의 주체들이 안정적 부동산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별적으로 자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부동산 관리주체의 운영을 돕기 위해 공공

과 민간의 투자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전문인력 파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제공 등 지역 부동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부동산 공유구조 확립, 사회적 부동산 창업 생태계 구축, 주민투자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정책방안 제시

정책제안

사회적 부동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청년기업 등 사회적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촉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벤처 창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함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창업 전용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 부동산업을 크라우드 펀딩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며 최적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육성 필요

주민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투자 공모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의 투자 중개 역할 필요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운영에 주민 참여 기회 확대(주민 고용 확대), 조직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훈련 및 컨설팅 연계 강화, 자금조달 연계(사회투자나 기금 등)로 주민들의 책임성 강화, 사회적 부동산 운영 주체의 독립적 관리권한 확보(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가 필요함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A Study on Review of Mountainous District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Efficient Forest Land Use

연구책임 안승만 | 연구진 최수, 송하승, 임지영 | 수시 18-04 | 97면

연구목적

생태적·거시적 산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산지구분 기준을 마련함

- 1969년 식량생산 목적을 위한 최초의 산지구분이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 이르는 동안에 생태적·거시적 산지의 특성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나날이 증가하는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지의 생태적·거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이용과 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연구결과

산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1970년 이후 45년 동안 산지의 면적은 약 27.7만 ha 감소(연평균 약 6천 ha) 하였으며 이러한 단기적인 산지면적 감소추세는 유지될 전망임
- 산림과학원 장기전망(~2050)에 따라 한계농지 및 유휴초지가 숲으로 변화되면 산림축적량이 2005년 5억 6백만 m³에서 2050년 9억 1천만 m³로 증가할 전망임

국토 전반에서 산지가景观적으로 파편화 되고 있음

- 산지의 면적은 최근 9년간 약 9만 ha가 감소하였고 산지의 경계면 길이도 약 7,798km 감소하였음

- 가장 큰 산지의 경관생태적 면적은 2008년 444,971ha에서 2017년 287,802ha로 약 35.5%(2,250ha) 감소하였으며 작은 산지경관의 증가로 인해서 평균면적은 2008년 약 11.9ha에서 2017년 11.1ha로 약 0.8ha 감소하였음

주된 이용활동이 산지경계부(경계면으로부터 100m 이내)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지를 100m 거리를 기준으로 중심부와 경계부로 배타적으로 구분한 결과 경계부가 46.5%(2,973,455ha)를 차지하고 중심부가 53.5%(3,425,883ha)를 차지함
- 산지의 46.5%인 산지경계면 100m 이내에서 전체 산지전용의 93.3%가 허가됨

산지 전체의 면적 중 약 1.5%에 해당하는 산지에서만 높은 개발 압력이 나타남

- 산지 전체 면적 중 약 1.5%(101,538ha)에서만 통신유동인구가 확인되며 2000~2016년도까지 타 용도 전용이 허가된 산지는 전체 면적의 약 1.6% 수준임

생태적·거시적 산지구분 기준으로 경계특성, 이용적성, 개발압력이 고려되어야 함

- 산지(山地)를 경관생태특성을 고려한 중심부와 경계부 구분(Level 1), 입지특성을 고려한 이용적성과 보전적성 구분(Level 2), 이용활동을 고려한 높은 이용과 낮은 이용 구분(Level 3)을 통해서 생태적·거시적 특성을 고려하는 평가·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산지관리방안을 제시함

- 경계특성, 이용적성, 개발압력을 고려해 산지 이용·보전 기준이 세분화되어야 함
- 파편화되고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취약해지는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종다양성을 증진하면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를 차별화해야 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Strategies to Improve the Non-residential Property Sale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연구책임 이형찬 | 연구진 조정희 | 수시 18-34 | 91면



연구목적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존 부동산 상품은 주로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 상품은 현금 흐름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다변화하면서 기존 제도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에 이음

이에 대응하여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여 거짓·과장 광고에 따른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선분양-후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축물 분양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정보 비대칭에 노출되어 분양 상품(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분양자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분양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가 불완전한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규제는 일반법(「표시·과장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과 개별법(「건축물 분양법」)으로 두고 있음

- 표시광고법령에서 광고와 관련하여 중요사항과 금지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물 분양법령에서는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주요 의무사항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비주거용 부동산은 장기간 확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지급한다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되거나 최상급을 표현하는 광고, 금융기관에서 마치 수익을 보장하는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광고하는 유형이 있으며, 수익금 배분에 따른 분쟁도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 보장방법, 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부동산(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와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이원적 제도 유지

- 둘째, 표시광고법은 상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익률 산출 등 광고예시를 규정(일반법)하고 있으나 부동산(신규) 분양은 일반 상품의 광고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따로 (수익형) 부동산 관련 규정을 관리하거나,

- 셋째, 부동산 상품의 광고와 긴밀하게 관련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을 통합 운영하거나

- 넷째, 이원적 운영을 하되 일정 규모나 면적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분양 신고를 받는 ‘부동산 분양 광고’에 관련 조항을 두는 방안임

정책제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하도록 건축물 분양신고 제도를 개선

- 둘째, 부동산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표시광고에서 모집 공고의 의미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

- 셋째, 분양광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모집공고에 공지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 넷째,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 사후적 부동산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 다섯째, 건축물 분양업체와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와 부동산 소비자에게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 여섯째, 건축물 분양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구 내 건축물 분양 관련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The Strategy of Investment Development for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연구책임 조진철 | 연구진 이승훈, 조정희, 김태엽, 원동욱, 정연우 | 수시 18-07 | 141면



연구목적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의 전반적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진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해외건설 컨트롤 타워로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기능 설정 필요

- 2016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2010년에 비해 1/3로 축소되는 등 해외건설 수주 급감

- 각국은 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지원 중

- 우리 정부와 국회도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설립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의 구체적 업무 추진 방향성 및 장단기 전략 마련 필요

이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국의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지원기구 사례를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기능과 역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제28조의 16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주요 업무인 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에 대한 투·출자 및 금융자문, 협상지원, 국제협력, 전문가 육성 교육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파악

- 타국의 인프라 및 도시개발 지원기구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장기 비전 및 전략 연구

연구결과

투자개발형 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괄하는 사업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사업에 가깝지만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민간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짐

- 기존 정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PPP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PF 사업방식을 통한 자금조달로 규정하여 민간발주 사업 제외

사업발굴과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기존 방식은 금융조달에 한계를 가짐

- 대부분의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KSP 정책자문 사업 등은 국내 컨설팅사의 육성을 통해 금융과의 연계 또는 사업화를 모색하나 국내 컨설팅사들의 자금조달 컨설팅에 한계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업발굴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소규모 도시개발 및 건축 사업 미흡

- 「해외건설촉진법」은 지원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실제 사업이 가능한 개별 건축물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인프라·도시개발 분야의 정보가 각 기관에게 흩어져 있고 공유되지 않으므로 통합·축적된 DB가 없으므로 정보 분석기능이 부재

- 협회,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별 유사 시스템의 독자적 운영으로 정보 관리가 파편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정보 분석기능이 부재한 상황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일본 해외교통도시개발지원기구(JOINs)와 같이 지원기관이 금융투자를 결정하는 형태가 바람직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주요 기능에 대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전체 PF 사업의 큰 범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을 정의하고 민간발주까지 포괄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기관 이외에 국제사회의 금융지원과도 결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사업발굴 단계부터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업무를 주요 업무로 구성

- 기술지원펀드(TAF)를 타 국가 DFI 및 국제개발은행 등과 공동 조성 사업개발 시 일본 JOINs처럼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

- 병원, 박물관, 공공시설물 등 보다 구체화된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발굴 필요

공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국제협력 및 사업 발굴 정보공유체계 마련

장기적으로 대륙별 지역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해외사업에 필요한 현지화 전략 추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Effects on the Real Estate Market by Improv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연구책임 이태리 | 연구진 전성제, 권건우 | 수시 18-10 | 120면

연구목적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과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목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장치로서의 역할과 함께, 효율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조세라고 알려져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이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개선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 및 경제적 효과를 미·거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변화가 주택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관련 세금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민간소비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민간소비는 하락함을 확인함

- 종합부동산세는 세제 전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한 원인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게 된다면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하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있으나 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편해야 한다면 목적에 따라 주택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HP 분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선 시 고려해야할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은 형평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평성 내에서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과세대상 및 세금부담 측면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하였을 때,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시나리오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상향하는 방안, 세율을 0.5%p 인상하는 방안, 공제금액을 2억 원씩 하향 조정하는 방안순으로 나타남

- 개선 목적을 명확히 하여 하나의 대안만을 적용 혹은 모든 대안을 동시에 적용하는 개편은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중요 순위를 고려하고 방안 몇 개를 목적에 따라 조합하여 시행함으로써 방안 간의 연계, 결합(Combination)을 통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보유단계의 세금이 강화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위해서는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접근 필요
- 목표에 따라 개선 목적을 명확히 하여 하나의 대안만을 적용 혹은 모든 대안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중요 순위에 따라 몇 개의 방안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도 가능
-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기여도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Creation of Construction Jobs of Small & Medium Construction and DIY Market through Facilitating Self/Custom Building



연구책임 조진철 | 연구진 이승훈, 이양재 | 기본 18-26 | 132면

연구목적

주택자재 시장 및 셀프/주문 빌딩 문화가 미성숙한 이유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주택자재 시장 및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구에서 주택자재 유통산업은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등을 통해 발달하고 있으며, 셀프/주문 집수리(Home Improvement) 및 집짓기 문화가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반면, 우리는 대기업 중심 아파트 건설 및 공급에 치우쳐 셀프/주문(Self/Custom) 빌딩 문화 성숙이 미흡하며, 관련 주택자재 유통산업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음

이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우리의 주택자재 유통산업 및 셀프/주문 빌딩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택자재 유통산업 육성의 핵심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셀프/주문빌딩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결과

셀프/주문 빌딩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수요 및 선호도가 증가 중이며, 주변 여건도 이로온 상황으로서 대도시 중심의 아파트 공급 공영개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셀프/주문 빌딩(소규모 건축·건설) 공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

- 2010~2017년 단독주택 인허가 실적은 162%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약 6만 호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이 가능한 5G 통신인프라를 통해 자율주행차, 비행 자동차 등의 탄생을 가까운 장래에 가져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교통혁명을 불러와 도시민의 교외화 현상을 부추기고, 주거유형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셀프/주문 빌딩 공급정책은 무엇보다 지역 건설공급사슬을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업종을 창출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형성하리라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건축·건설이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중대형 건설사 및 건축사가 주류를 형성한 데 반해, 단독주택이 일반화된 건설방식인 나라에서는 설계, 감리, 시공 등에 종사하는 10인 이하 건설사가 우리나라에 비해 20만 개 이상 많은 상황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영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셀프/주문 빌딩을 위한 토지공급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임

- 우리의 경우 연평균 6만 호, 10년간 60만 호의 단독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유헥토지에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토지공급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셀프/주문 빌딩 공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법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셀프/주문 빌딩 협회의 창출과 플랫폼 마련,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

- 다만, 소규모 건축·건설 직영공사 규모 확장, 전담 설계 및 감리 인력양성 건축사 2급 신설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 등의 개정을 통해 마련될 필요

이외에 주택자재 부품화, 유닛화 추진 필요성, 건식 셀프/주문 빌딩 방식 활성화 필요성 등도 장기적 방안으로 제시

- 건식 셀프/주문 빌딩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주택자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량주택부품 인정제도의 도입을 제시

정책제안

- 소규모 건축·건설에 대한 업역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 요건에 마련하고, 일정 면적 이하의 건축설계 및 감리 건축사 2급제도의 도입 검토
- 셀프/주문 빌딩에 대한 토지공급 정책을 추진하되 혁신도시 등 지방거점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토지공급과 셀프 빌더들을 연계하는 사회적 주문빌딩 디벨로퍼 양성
- 셀프/주문 빌딩 플랫폼 구성을 통해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 등을 긴밀히 연계하고, 토지공급, 주택자재, 재정지원 정보 등을 통해 셀프 빌더들의 안심 집짓기를 유도
- 셀프/주문 빌딩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 주택자재 부품화, 유닛화 추진 및 건식 셀프/주문 빌딩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량주택부품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셀프/주문 빌딩 협회에서 운영함으로써 신뢰성을 강화
- 셀프/주문 빌딩 공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주택부품 인정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책임보험과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Real Estate Market Trends and Issues for 2035

연구책임 이수옥, 박천규 | 연구진 강성우, 김지혜, 노민지, 이태리, 전성제, 최진, 황관석, 한국리서치 | 기본 18-31 | 186면



연구목적

장래 우리 사회는 빠른 인구·가구 구조변화와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인구와 경제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는 부동산시장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나, 부동산시장 분야에서는 산적인 현안의 우선 해결 필요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비하는 작업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 연구는 인구변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같은 여건변화로 2035년 미래 부동산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그 변동수준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장래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분야의 미래 환경변화 전망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대응 방향 정립이 반드시 필요함

연구결과

미래 부동산시장에서는 초고층 아파트·소형주택 선호 지속, 건강·환경·에너지·스마트 기능을 갖춘 첨단 주택보급 확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장 분석 및 예측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거생활, 주택유형, 부동산정책 측면에서 현재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미래 부동산시장에서는 편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

-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됨

주택가격과 공급(준공)의 변동은 경제성장을 둔화보다 인구감소로 인한 하락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

-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변화가 주택가격과 공급(준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구감소와 경제성장을 둔화로 주택가격 변동률은 모두 하락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2035년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수요 감소, 주택의 이용과 거주 인식이 확산되겠지만,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주택가치 상승과 자산적 활용도 지속될 전망

공유주택, 서비스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주택시장의 지역적 차별화도 심화 예상

주거생활 및 기능 측면에서는 소형주택, 패시브하우스, 월세시장 일반화,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스마트주택·건강주택 공급 확대, 내진·방음·미세먼지·하자 등과 관련한 주택성능 향상 등이 부각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정책 추진방향과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여건변화 대응,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복지 및 주택기능 향상 측면에서 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16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여건변화 대응) 인구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고령인구 주거복지정책, 주택개념·유형 등에 관한 새 기준 마련, 부동산정책 지방이관 및 위임사무 정비, 북한 주택시장 개방 대비 등을 제안

(부동산시장 안정) 소비자 지향 주택공급 환경 확대, 부동산시장 지역차별화 확대에 대비, 지방마을 소멸로 인한 시장붕괴 완화, 주거정비사업 체계 재편, 통합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

(주거복지 및 주택기능 향상) 세대별 주거소비패턴 반영, 주거서비스 향상 기준 마련, 기존 건축기준 개선, 패시브하우스 등 보급기준 정비, 노후 공동주택 주거성능 개선기준 마련, IT기술 확산 정책적용 등을 제안

CHAPTER 03

5

국토인프라연구

- 2040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연구
-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전략 연구
-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 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고려한 도로부문 대응과제
-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
-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
-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분석체계 연구: 기대효과 및 효과척도를 중심으로
-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2040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연구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Arterial Roads



연구책임 김호정 | 연구진 이춘용, 고용석, 윤서연, 김상록 | 기본 18-01 | 137면

연구목적

1992년부터 추진 중인 전국간선도로망(7×9) 계획은 2020년 목표 구간 완공 이후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최상위계획 등이 새롭게 갱신 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이에 다양한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래 도로교통수요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전망할 필요

미래 환경변화 가운데 도로교통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요인을 도출하고, 국토공간변화와 신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간 선도로의 대응전략 마련

- 미래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토계획과 교통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핵심요인을 기준으로 국가간선도로 미래상 정립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AI, 드론 등 신기술 도입 이후 국가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 강화 필요성과 신기술 측면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래지향적 도로정책방향 제시

연구결과

메가트렌드 등 미래사회 변화를 거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미래 연구 보고서 14종, 미래사회 전망 보고서 8종을 대상으로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Ecological and Political Analysis) 분석을 시행하였고, 19건의 국내외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문 미래환경 변화를 분석

- 5개 영역에서 11개의 메가트렌드와 27개의 세부 변화요인을 도출

국토 공간구조 재편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의 계획·개발 기조를 효율적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간선도로의 역할과 각 시나리오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있는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제시 ‘미래 환경변화 가운데 도로교통부문 관련 변화를 고려하여 대응 가능한 도로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설정

- 과제1(도로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과제2(국가간선도로의 기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간선도로의 미래 상 도출

앞에서 설정한 메가트렌드와 세부 변화요인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와 검증과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국가간선도로 미래상의 정책방향을 조사

국토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별 도로교통수요 측면과 도로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선도로의 과제와 역할을 검토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여 장래 국 가간선도로 미래상을 구체화

- 시나리오 1(국가 역할 강화): 초고속도로 교통수단의 도입 시 초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장거리 통행을 분담하는 방안과 함께 도로공간의 복합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 시나리오 2(간선서비스 유지 및 관리): 간선기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는 주요 대도시 간을 연결하는 노력과 함께 이용률이 저조한 노후도로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 및 접근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 시나리오 3(분산과 집중): 전국의 지역 간 통행의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
- 시나리오 4(기능 다각화): 초연결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중심의 디지털 인프라체계 구축과 함께 지상, 지하, 상부공간까지 복합적 활용 요구

국가간선도로 미래상을 중심으로 정책적 측면의 국가 역할 강화방안과 관리측면의 기술변화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의 역할과 입장에서 세부 실천전략 마련

정책제안

(국가역할 강화) 메가도시권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교통수단과 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한 초고속도로 도입 검토

(간선서비스 유지 및 관리) 최종목적지(Last One Mile Service)까지의 연계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노후화가 예상되는 간선도로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

(도로기능별 선택과 집중 관리) 분산된 도시권에 균등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관리가 필요한 도로, 간선기능이 수행 가능한 도로 등 전략적 관리체계 마련

(도로기능의 다각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환경 등 기술변화에 대응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도로-지상 등 도로공간의 복합적 활용 방안 마련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Study on Efficient Investment and Economic Ripple Effect in SOC Budget

연구책임 김호정 | 김종학, 최재성, 류덕현 | 수시 18-33 | 126면

연구목적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통적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따르면, SOC 분야의 재정지출은 2017 년 22.1조 원에서 2021년 16.2조 원으로 연평균 7.5% 감소할 전망이다
- SOC 스톡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 복지부문 재정지출 증가는 과거에 비해 SOC 투자소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 최근 들어 전통적 SOC 투자의 단계적 감축 계획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정부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투 지방향 등에 대하여 계량경제 모형 분석을 통한 실증적 시뮬레이션 검 토가 필요한 상황임

이 연구는 2018년 이후 정부 SOC 예산 투자규모의 적정성을 장래 경 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하고, SOC 투자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창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정의되는 전통적 SOC를 대상으로 향후 효율적 SOC 투자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교통 및 물류(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와 지역개발(수자원, 지 역 및 도시, 산업단지)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통적 SOC로 정의

연구결과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에 대응한 SOC 예산의 적정 투자 규모와 경제 및 고용 창출 파급효과를 추정함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을 감안하 여 산정한 결과,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 비율 은 2.52~2.69%로 분석함

- 국내 4대 주요기관의 2019년 경제성장 전망치(2.5~2.8%)와 국가재 정운용계획의 SOC감가상각률(2%) 등 2019년 국가경제의 기초 경제 여건을 감안함

-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에 비추어 고성장 4% 이상, 평균성장 3~3.9%,

저성장 2~2.9%, 초저성장 1~1.9%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세밀하게 분석을 수행함

SOC 투자에 따른 국가와 지역 단위의 투자규모 및 경제·고용 부문의 파 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함

- (국가 투자규모) 정부의 투자 가능한 SOC 예산 규모는 매년 약 40~ 42조 원, 총 5년간 약 206조 원 수준이지만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SOC 투자와 비교할 경우 매년 약 4.7~11.4조 원, 총 5년간 약 28.9 ~46.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지역 투자규모) 적정 SOC 수준으로 추정된 2018~2022년 총 5년 동 안의 SOC 투자 규모를 지역단위 SOC 부문의 세출 현황을 바탕으로 배분하면 수도권은 연간 19.5~21조 원, 총 5년간 97.7~105.1조 원, 비수도권은 연간 27.4~29.6조 원, 총 5년간 137.2~147.8조 원 수 준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성장 극대화 SOC 대비 정부 투자 가능 금액과의 차이) 경제적 파 급효과는 5년간 약 49.8~177.9조 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 수는 총 5년간 약 24.1~86.4만 명이 증가
- (경제성장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5년 간 약 658.2~786.3조 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 수는 5년간 약 319.9 ~382.2만 명이 증가

정책제안

이 연구의 SOC 투자 적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국가재정운 용계획, 정부 예산안 등 재정운용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함

SOC 투자재원의 확보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미래 투자재원을 구축하고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SOC 투자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SOC 투자 및 관리 분석을 위해 지역별 SOC 스톡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가칭) SOC 데이터 연구 센터’ 설립이 필요함

향후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시 재생 등과 관련한 생활 SOC를 대상으로 적정투자 규모 산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함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y of Transportation Project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연구책임 이백진 | 연구진 윤하중, 고용석, 백정환 | 수시 18-28 | 56면



연구목적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한 남북 교통인프라 사업의 실질적 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특히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항공 등 남북 교통인프라 연계사업은 가장 우선적이고 대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

이 연구는 수시과제로서 남북 교통인프라 연계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해 기존 남북 협력사업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특히 동유럽·중국·베트남 등 체제전환국 사례, 국제금융기구 지원 전략 등을 검토하여, 남북 교통인프라 사업의 효과적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수시과제의 짧은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례분석은 도로와 철도의 일부 사업에 한정

연구결과

남북 교통인프라 연계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에는 민간자금의 투자유도가 필요하며, 이때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무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베트남,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체제전환국들의 교통인프라 개발과정은 각각 다른 특성, 즉 중국은 정부주도하의 점진적 접근방식으로 특정 경제특구 중심으로 개방하고, 이때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한 직접투자 방식의 외자유치를 선호, 베트남은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외자를 유치

한편 체제전환국들의 자본유치 과정은 초기에는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의 비율이 높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

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 북한도 국제제재가 완전하게 해제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본격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정부를 포함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직접적인 양자/다자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 가능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개발 초기 남북 양자협력을 통한 개별적 사업추진과 함께 우리 주도로 주변국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정부의 북한개발 주도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 또한 중장기 다자협력을 통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은 대부분 국제입찰을 통한 사업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건설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정책제안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 초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중요

- 남북 양자협력을 통한 개별적 사업추진과 함께 우리 주도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국제제재가 완화되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의 대부분이 국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건설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국내외 민간자금 투자유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필요

- 민간기업들은 북한 교통인프라 사업의 초기 경제성 확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사업 위험요소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에 대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자금과 연계한 보증,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Arterial Road Network Function of General National Highways in Urban Area

연구책임 이춘용 | 연구진 고용석, 정명운, 김종학 | 수시 18-29 | 112면



연구목적

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인 일반국도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국가 도로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국가간선도로망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도출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국토 균형발전의 주요 거점인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국가간선도로망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해당 시장이 관리하는 구간에 대하여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함

- 국가가 해당 시장에 위임한 일반국도와 도시지역 국가 지원 실태를 분석·정리하고
-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시대적 변천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 도시지역 사례 유형에 따른 국가의 역할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축 전략의 기초 자료를 작성함

연구결과

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 교통 혼잡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역할과 자치단체의 대처도 소홀함

- 자동차전용도로로 신설된 구간의 관리주체가 국가와 자치단체로 상이하고, 기존 대도시권 교통 혼잡 개선도로와 광역도로 사업은 혼잡 완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함
- 시급 도시와 읍·면급 도시 지정국도제도는 예산상의 이유로 국가 역할이 없고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간선도로의 적정 관리가 미흡함

국정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국토균형발전과 도시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과 같이 선진적인 국가 책무를 강화하여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강화해야 함

국민 일상 활동의 터전인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국토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해야 함

「도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는 도로 사용자에게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일반국도에 대한 국가 사무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국가는 도시지역 일반국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축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국토 공간구조가 단일 도시에서 도시권 차원으로 생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국도가 각 도시권을 상호 연계시키고 상시간선도로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함

정책제안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일반국도 간선교통축을 선별·관리해야 함

- 일반국도의 간선교통축을 선별하여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연계 보완하며 도시권을 상호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완성해야 함. 대도시권과 시급 도시가 연담된 도시권에서는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기 구축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하나의 교통축을 설정하고
- 개별 시급 도시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읍·면급 도시에서는 기존 시 관내 국도의 교차 방식의 개선, 도로 용량을 저감시키는 노상주차와 진출입 통행량의 제한이 필요하며 또한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회도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 일반국도 간선교통축에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인력과 예산의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국가간선도로의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실시간 통행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운영관리가 필요함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

- 국가간선도로망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설정 근거를 「도로법」과 국가도로종합계획 내용에 포함하고, 시 관할 국도의 적정 수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의 근거, 자동차전용도로를 일괄 관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세출 항목에 시 관할 국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함
- 일련의 일반국도 간선교통축은 신규의 투자가 아닌 기존 간선도로망 네트워크의 연결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는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함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 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Building O/D(Origin and Destination) Data by Mobile Bigdata

연구책임 김중학 | 연구진 백정한, 고용석, 김준기, 김익기, 심재엽, 이동욱, 강중식 | 수시 18-03 | 139면



연구목적

개인행태는 거주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변화

- 교통수단, 통신망 발달로 개인행태는 거주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다변화 및 광역화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로 개인의 미시적 활동 내역 파악가능

- 최근 통신사에서 모바일폰의 시간대별 위치와 전시간대 위치정보를 함께 기록하는 등 기술진보로 기종점 통행량 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사회변화에 적대 대응 가능한 인프라 정책마련을 위해 모바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종점 구축 방법론 개발 등이 필요함

이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 통행량 구축 및 신뢰성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결과

모바일 빅데이터의 군집별 동적위치 정보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기종점 통행량(OD)을 처음으로 구축한 연구임

- 구축한 모바일 OD는 국가교통DB OD와의 상관성이 0.915로 높았고 실적통행량과의 유사성도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모바일 빅데이터의 체류개념을 적용한 활동인구 및 성별 연령별 통행 패턴에 대한 활용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로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동 인구 개념을 제시

- 모바일 자료의 성연령별 OD 분석결과 내부통행은 여성이 4.4%p, 외부통행은 남성이 9.4%p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30대, 50대, 20대 순으로 통행량이 높게 나타남

정책제안

관련법령의 조사체계 및 교통통계 개선

- 모바일 기종점 자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의 국가교통

조사의 여객통행량 조사자료를 보완 및 대체하는 데 이용가능

- 모바일 활동인구 자료는 거주인구와 함께 지역의 활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인구자료로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의 요건에 부합

국가교통DB 보완

- 모바일 빅데이터는 국가교통DB와 상관성이 높고 실적자료와 유사한 통행패턴 설명이 가능해 국가교통DB 보완 역할 수행 가능

-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바일 빅데이터 구축방안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다면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절대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

생활주기(Daily Life Cycle) 파악을 통한 상품 홍보 및 정책모니터링 가능

- 민간회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상품의 타겟이 되는 인구 집단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마케팅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개통된 KTX 경강선의 이용자 통행패턴 파악 등 정책홍보 및 개통 후 인프라 시설 모니터링 가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고려한 도로부문 대응과제 : 도로 설계 및 계획을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to Make the Road Sector Read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연구책임 김광호 | 연구진 박종일, 윤태관, 김진태 | 수시 18-16 | 80면



연구목적

자율주행차의 도입 전망, 차량 및 인프라의 기술현황, 도로 설계·계획 부문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자율주행차 도입에 관한 공간적 범위와 소유방식에 따른 전망을 검토
- 자율주행차의 인지·판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량 및 인프라의 기술현황을 검토
- 도로 설계·계획 부문의 현황은 이론 및 모형, 지침 및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율주행 상용화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로 인프라의 요구사항과 도로 설계·계획 부문의 대응과제를 도출함

- 자율주행 상용화 시나리오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전망, 차량 및 인프라 기술현황을 고려하여 도출하고,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기술발전 전망,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연구결과

자율주행차의 기술수준 및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그 도입 양상을 전망해볼 수 있음

- ES(Everything Somewhere) 방식: 높은 기술단계의 자율주행을 한정된 공간에서 적용
- SE(Something Everywhere) 방식: 부분적인 자율주행을 광범위한 지역에서 적용

자율주행차의 인지 및 판단 기술은 핵심기술, 이동물체 인식방식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뉨

- 영상수집과 인공지능에 주로 의존하는 방식: 비디오 카메라와 레이더(Radar)를 이용하여 주변 객체를 감지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비디오 영상을 해석하여 운행
- 고정밀 센서와 고정밀전자지도에 의존하는 방식: 라이다(Lidar)와 같은 고성능 센서로 스캔한 자료와 기 구축된 고정밀전자지도를 상호 조회하는 방식으로 운행

자율주행차의 활용분야를 '개인 이용'과 '공유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 활용분야에 대해 단기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도출함

- '개인 이용'의 경우 부분적인 자율주행을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하고, 영상추출 처리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인프라와 차량 간 통신을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단기적 실현가능성이 높음
- '공유 서비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제한된 경로에 적용하고, Lidar와 고정밀 전자지도에 의존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인프라와 차량 간 통신을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단기적 실현가능성이 높음

정책제안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과제 제 제안

-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를 위해 '고품질 전자정밀지도의 구축 및 관리 방안 정립',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한 접근성 평가도구 개발' 등을 대응과제로 제안

- 자율주행차의 개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전자정밀지도의 구축 및 관리 방안 정립'을 대응과제로 제안

- 자율주행차의 '개인 이용'과 '공유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는 대응과제로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대한 규정 개선', '자율주행차 안전 정차 시설의 설계 기준 정립' 등을 제안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

Developing the Disaster Response Routes of Korea



연구책임 육동형 | 연구진 임영태, 김종학, 이상은, 최재순, 남지현 | 기본 18-15 | 146면

연구목적

재난 대비 및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가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

- 방재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재난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재난에 취약한 도로 구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재도로 선정 연구가 필요한 실정

재난 피해의 최소화 및 원활한 복구를 위한 방재도로의 구축 방안 제시
이를 위해 방재도로에 대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립된 역할에 따른 방재도로의 선정 및 운영 방안 수립,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

연구결과

방재도로 선정 절차를 수재해와 지진재해로 구분하여 제시

- 수재해 관련 방재도로의 정의)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인근 대피소로 안전하고 신속히 유도하여 수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도로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수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
- 주민들의 우선 대피 장소인 임시주거시설(학교, 주민센터, 시청)을 선정
- 피해지역에서 임시주거시설로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재도로 선정

(지진재해 관련 방재도로의 정의) 방재자원의 신속한 전달로 기대되는 재난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재난 상황 및 복구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도로

- 지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로의 기능 실패 예상 구간 파악
- 주민들의 우선 대피 장소인 임시주거시설(학교, 주민센터, 시청) 선정
- 구조 활동을 위한 방재거점(병원, 소방서, 경찰서) 선정
- 주요 시설의 연결

방재도로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방재도로의 중요도별로 시설물의 목표상태를 차별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필요 시

긴급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는 중요 방재도로의 시설등급 조정을 통한 유지·보수의 기준 강화

- (관리) 방재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제시
- 시설물 기반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이 아닌 목적 기반의 방재도로 관리 시스템을 운영

방재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기존 도로가 방재도로로 지정됨으로 인해 유지·관리 수준이 강화되는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므로 방재도로 관리에 적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에 중요도가 높은 방재도로를 2종 시설로 편입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책제안

방재도로의 선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재도로 도입의 필요성, 유지·관리의 제도화, 홍보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

- 기초지자체 및 하위 행정단위에서 재난의 취약성을 고려한 방재도로 선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
- 재난특성에 적합한 방재도로가 선정되면, 선정된 방재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재해성을 보강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
- 도로의 재난 대비 대응력(차수 시설, 내진 설계 등)에 대한 정보 관리 필요
- 기 구축된 도로의 방재도로화를 위한 재해유형별 내재해성 기준 마련과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지침 마련에 대한 연구 필요
-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재도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 시민들에게 배포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

Application of Smart Mobilit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연구책임 박종일 | 연구진 김광호, 윤태관 | 기본 18-18 | 203면

연구목적

‘공유’, ‘자율주행’, ‘배터리’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시교통 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에 기여 가능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은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지방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지방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승용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므로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시 기대효과가 큼
-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세부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중소도시는 농촌지역, 원도심, 신도심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세부 지역별로 대중교통 여건, 통행 특성, 인구 특성, 인프라 여건 등에서 상이한 여건을 지님

농촌지역은 기존 수단의 대체를 목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요 응답형 교통이 적합

- 원도심과의 통행 비율이 높고 버스 이용률이 높아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나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수요 응답형 교통 도입을 통해 기존 통행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타당

원도심과 신도심은 기존 수단의 보완 목적으로 공유 자전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가 가장 적합하며, 대체 목적으로는 라이드 셰어링이 가장 적합

- 신도심은 내부통행비율이 높고, 통행거리가 짧으며, 인구 밀도와 청년층 비율이 높으므로 공유 자전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을 통한 수단 대체 효과도 기대되며, 원도심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

신도심의 공유 자전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라이드 셰어링과 농촌지역의 수요 응답형 교통은 상대적으로 도입 효과가 크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정책제안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목표를 기존 통행수단의 보조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수단 전환을 추진할 필요

지방중소도시의 세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비전의 수립과 세부 추진전략 수립 필요

중앙정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시범사업을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 필요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도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하여 법·제도 정비 및 갈등해소 필요

지방정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국외의 갈등 사례를 참고하여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의 마련을 포함한 사전 준비 필요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Estimation Living Travel Cost and Mitigation of Regional Gap



연구책임 김종학 | 연구진 백정한, 고용석, 배윤경, 최재성, 송재인, 임이정 | 기본 18-22 | 138면

연구목적

정부는 ‘교통비 절감을 통한 생활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교통비용에 대한 지역별 파악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0대 생활SOC 투자방향을 발표하였으나 생활시설에 접근하는 교통시설은 생활SOC 유형에서 제외됨

교통비 절감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 지출현황을 실생활 공간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

-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교통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유류비와 같은 실 지출비와 통행시간과 같은 불편도 비용으로 환산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설문조사에 의존한 기존 교통비용 파악 방식이 빅데이터와 웹 기술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보완 또는 대체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교통비용 개념 정립 및 빅데이터와 웹 기술을 활용한 생활교통비용 추정방법 개발과 사례지역 적용을 통해 지역별 생활교통비용의 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결과

이 연구는 기존 설문조사 방식의 생활교통비용 추정방법을 웹 크롤링과 모바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선시킨 선도적 연구임

- 웹 크롤링: 포털사이트의 길찾기 기능을 프로그램화해 출·도착지 간 거리, 시간, 유류비 등을 파악
- 모바일 빅데이터: 생활통행 추정을 위해 모바일 빅데이터로 읍·면·동 간 기종점 통행량(O/D)자료 구축
- 생활교통비용: 생활통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유류비, 요금 등)과 간접비용(시간가치)의 합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격차) 사례지역(경기도 560개, 강원도 193개 읍·면·동) 간 월 생활교통비용 추정 결과 경기도 33만 원, 강원도 54만 원으로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21만 원 높음

- 사례지역 내 동 지역과 읍·면의 격차도 경기도 25만 원, 강원도 37만 원으로 강원도가 높음

(소득계층별 생활교통비용 격차)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월 생활교통비용 차이(일원분산분석)는 강원도 41.6만 원, 경기도 30만 원으로 강원도의 소득계층 간 차이가 큼

- 일원분산분석결과, 경기도는 소득수준 평균이상 계층 간, 강원도는 소득수준 평균이하 계층 간의 생활교통비용 차이가 없어 도별로 소득계층 간 상반된 생활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음
- ※ 생활교통비용 유사 계층: 강원도(평균이하 소득계층), 경기도(평균이상 소득계층)

정책제안

(생활교통비용 통계 생산)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바일 빅데이터와 웹 크롤링 기법으로 생활교통비용 추정 시 저비용으로 전국단위의 일관된 생활교통비용 통계자료 생산가능

- (생활SOC 유형에 생활교통인프라 추가)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SOC 유형에 접근성 개선을 통한 투자효율화를 위해 생활교통인프라 추가 필요
-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격차완화)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형 격차 완화 방안 추진 필요
- 예) 도 경계인접 농촌지역 생활교통비용 파악 → 농어촌 광역버스 도입
- (소득계층별 생활교통비용 격차완화) 지역별로 소득수준 대비 생활교통비용 점유율을 파악해 생활교통 취약지역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예) 생활교통비용이 높은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유류비 또는 고속도로 요금 할인 쿠폰 제공 등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분석체계 연구 : 기대효과 및 효과척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enefit Analysis Framework for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Focusing on Expected Impacts and Measure of Effectiveness

연구책임 윤태관 | 연구진 김광호, 박종일 | 수시 18-23 | 81면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국내외 지능형교통시스템(ITS)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사업 등 유사사업 구축효과 분석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C-ITS 구축효과 분석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세부적으로 C-ITS 주요 15개 서비스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서비스별 기대효과, 효과척도 및 조사방법을 제시하며, 기대효과를 그룹화하여 시공간도를 구성함

최종적으로, 시공간도에 배치된 기대효과 중 기존 ITS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C-ITS 특성을 고려한 효과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결과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나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인구증가율은 상승 추세임

- 전국 인구증가율은 2008~2012년 2.8%p에서 2012~2016년 1.5%p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9개 시·군)의 인구증가율은 2.4%p에서 4.5%p로 약 2배 상승함

국토교통부는 2018년 현재, 서울시와 제주도를 대상으로 C-ITS 실증 사업을 수행 중이며, 이에 대한 구축효과 분석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기존의 ITS 구축효과 분석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C-ITS는 그 성격이 ITS와 다르므로 C-ITS 특성을 고려한 구축효과 분석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ITS와 C-ITS에 대해 분석하고, 그중 ITS의 구축효과 분석체계에 대한 분석과 C-ITS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C-ITS와 ITS의 차이점을 도출함

- ITS는 단방향 서비스의 수집·제공 체계이며 교통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C-ITS는 양방향 수집·제공 체계로 교통안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함
- 양방향 수집·제공 체계인 C-ITS는 실시간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

여 초단기에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음

C-ITS 15개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대효과, 효과척도, 조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C-ITS 주요 서비스와 구축효과 간의 연계를 분석함

분석된 구축효과 중,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구축효과를 그룹화하여 총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시공간도를 구성함

- 7개 구축효과 그룹은 안전성(Safety), 편의성(Convenience), 이동성 및 접근성(Mobility and Accessibility), 지속성(Sustainability), 생산성(Productivity), 활용성(Utilization), 만족도(Satisfaction)로 정의함
- 시공간도는 정보수혜자(개별차량)와 사회전체(도로 전체 네트워크)의 공간과, 효과발생시기에 따라 단계에서 장기로 구분함

시공간도 분석을 통해 C-ITS는 ITS에서 분석할 수 없던 단기-정보수혜자(개별차량)의 기대효과까지 분석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차량탑재장치(OBU) 데이터를 활용한 구축효과 분석방법을 제시함

- OBU 데이터는 총 15종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성, 이동성 및 접근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 그 외 기존 ITS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ITS 구축효과 방법인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가능함

정책제안

C-ITS는 ITS와 그 특성이 달라, 효과분석체계도 새로 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대효과와 효과척도를 활용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시공간도 분석을 통해, ITS에서 분석할 수 없던 단기-정보수혜자(개별차량)의 기대효과 분석을 위해 C-ITS OBU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분석체계 수립이 요구됨

또한 외부 연계 데이터(민간 내비게이션, 기상청 자료 등)와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축효과 분석 방법 및 교통·통신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분석체계 도입이 필요함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Reinterpreting the Right to the City in Korea: Policy Responses to Urban Vulnerable Areas



연구책임 김수진 | 수시 18-37 | 94면

연구목적

기존 도시취약지역 관련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나 이는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이 되기 쉽고 도시차원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사전에 이루어진 방향설정과 기준마련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선제적 개입 측면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도시취약지역의 문제는 단순히 주거복지, 도시재생, 안전 등 부문별 대응을 넘어선 도시차원의 통합적 문제이고 종합적 재생을 위해 이러한 통합적 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 담론을 살펴보고자 함

이 연구는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현 도시취약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관련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결과

포용도시를 위해 취약지역 거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포용도시란 도시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기회와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변화를 가져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
- 그러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자력으로 도시 내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포용도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

도시 내 취약지역의 재생을 위해 주민주도의 상향식 공모방식에 기대기 보다는, 공공주도의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서울 흥제동 개미마을 사례를 통해 확인

- 해당 사례는 도시화과정에서 빈곤과 위험이 불균등하게 배분된 결과 형성된 도시 내 취약지역의 문제점(구조적 정비 지연), 취약계층의 인식과 일상경험(공간생산의 주체로서 역량 부족),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주민주도 상향식, 점진적 재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줌

- 위와 같은 사례는 도시 쇠퇴와 축소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리라 전망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을 시작해야 함

기존 관련 사업과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도시취약지역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정책제언

거주민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도시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시 공적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 방식 내 불량주택 판정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중점정비지구 지정요건을 마련

중점정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토지수용, 부분 및 전면철거, 이주대책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절차를 통해 공공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SOC Investment and Management Plan for Inclusive National Development



연구책임 김준기, 이백진 | 연구진 윤하중, 변필성, 윤서연, 배윤경, 백정한, 장수은, 이경아, 임준범 | 기본 18-25 | 248면

연구목적

(포용적 가치 기반의 SOC 투자 및 관리 필요) 지역 SOC(도로, 철도 등) 개선을 통한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포용적 국토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을 담은 SOC 투자 및 관리 필요

- 국토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SOC는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불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은 사회통합 저해 및 국민의 삶의 질 차이를 야기

(합리적인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필요) 이에 대응하여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투자평가 및 관리 방안을 마련

- 국민들이 인식하는 SOC(도로, 철도) 서비스의 포용성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

연구결과

국토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SOC(도로, 철도)는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투자 및 관리에 있어서 SOC의 포용성 가치 측정이 중요

- 국민들은 사회통합, 균형발전 등 사회적 공익을 포함한 포용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방 고속도로, 지방 고속철도, 대도시 고속도로 및 대도시 고속철도 사업순으로 가치를 부여
- SOC의 포용성 가치를 투자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SOC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 면담 및 SOC 정책의 여건분석(정치·경제·사회·기술)을 통해 포용적 국토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을 담은 SOC 투자 및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

(정책적 의의) 그동안 간과해왔던 SOC 서비스의 포용성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SOC 투자 및 관리 정책에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제시

-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선망 구축, 철도서비스 개선, 벽지노선 운영 등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향후 과제) 사업 유형, 규모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된 포용성 가치 계량화

필요 및 종합평가(AHP)의 포용성 반영에 있어, 자료 구득 한계 개선 및 추가 지표 발굴

- 평가항목 간의 가중치 범위를 사업의 유형별로 구분한 연구 수행 필요

정책제언

(SOC 투자 개선) SOC 투자 개선방안으로 포용성을 지역포용성과 계층포용성으로 분류한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포용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개선) 포용성 측면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노후 시설물(터널·교량)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국가의 비용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통한 유지관리 지원 방안 제안
- 안전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HSM(Highway Safety Manual)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

(법·제도 개선) 포용적 국토발전 관점에서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도시권 광역화에 따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 제안

- 국민들이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통권'을 규정하고, 관련 교통법들이 지녀야 할 방향성을 규정하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방향을 제시
- 광역교통기구의 역할 및 재원 등 광역교통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

6

공간정보사회연구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개인·기업 금융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스마트 국토·도시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방안 연구: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을 중심으로
-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전략 연구
- 토지·주택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Development Directions Of Spatial Data Governance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연구책임 황명화 | 연구진 박미라 | 수시 18-13 | 93면



연구목적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다양한 요소가 융합을 통해 상호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도래

공공부문의 공간데이터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적극 개방되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 기반으로서의 역할 기대가 높으나 현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여 종합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공간데이터가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기반으로, 명실상부한 공간데이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전략 모색 필요

- 공간데이터 생산 및 융·복합 활용 관련 공공기관 내부, 공공-민간-시민 간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제언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넘어선 데이터 공유, 품질, 호환성, 소유권 등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논의 확대 필요

국내 공간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시스템 구축 중심, 조직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민간·시민과의 협업 노력 미흡 등의 문제 보유

해외에서는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데이터협력협정 기반 데이터 개방·공유 및 민간-공공 협업 활성화, 안전한 데이터 융합을 위한 인프라 마련, 시민 데이터주권 보호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부응하도록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5가지로 도출함

- 공간데이터의 총괄관리를 담당할 전담 컨트롤타워의 운영 및 강화
- 공간데이터 접근성, 공유, 품질, 소유권,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도·정책 마련

- 공간데이터 공유, 연계, 융합 중심의 거버넌스 재편 및 인프라 강화
- 민간-공공-시민 간 협력적 공간데이터 생산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간데이터 주권 및 권리의 상생적 향유를 위한 제도 및 기술기반 강구

정책제안

(추진체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간데이터 관련 조직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거버넌스 사안들을 다루도록 그 기능을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가이드라인) 공간데이터의 접근성, 공유, 품질, 소유권 등에 관한 범정부 및 기관 차원의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

(융합기반 강화) 공간기반 데이터 융합에 자주 활용되는 기본공간정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문제없이 공간 기반으로 데이터를 융합하는 기술기반 및 지원조직 강화

(선도적 연구개발) 민간-공공-시민 간 협력적 공간데이터 생산, 공간데이터 관련 시민주권 보호 등에 관한 선도적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중장기 지원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Use of National Territorial Data for Efficient Usage of Public Land

연구책임 정문섭 | 연구진 양진홍, 최용복, 강용석 | 수시 18-39 | 114면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국공유지 정보를 연계·통합 활용하여 국공유지의 활용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제안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및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국공유지 정보의 연계 통합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 플랫폼은 저성장시대 국토공간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투자정책지원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국공유지를 신성장 및 포용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연구결과

국공유지 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부재

- 국유재산 관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특히 저성장시대 다양한 국공유지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토공간 정책 차원의 공간활용 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지원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임

국공유지 연계 통합 관리체계 구상

- 국공유지에 대한 계획기능 및 국유재산 총괄관리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중 국공유지 부문의 시스템을 별도로 구분하여 국공유지의 공공성, 수익성, 효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GIS기반 국공유지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공유지 활용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기존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및 공유지 관리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법」상의 국유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을 개정하거나 국유재산활용법을 제정하여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공유지 개발지원시스템, 인허가시스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연계 통합 등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 개발

정책제안

국공유지 활용 데이터 및 조직 거버넌스 체계 혁신 필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효율적 국공유지 활용을 위해 '(가칭) 국공유지 활용 전략센터'를 신설하고 동 센터에서 'GIS기반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혁신해야 함

국공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해야 함

-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유재산관리법」상 국유지 정보체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유재산법」상의 공유지 관련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국공유지의 연계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국공유지 활용 조직체계 개편 필요

- 국유지 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관리조직을 연계하여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공유지 활용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공동 추진해야 함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방안 연구

Building 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 for Promoting Well-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연구책임 이영주 | 연구진 오창화, 황명화, 김대중 | 수시 18-15 | 98면



연구목적

국정과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주제 및 관심지역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면밀한 현황 진단,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및 지식 융합을 촉진하여 지역문제 진단부터 해결까지 협력적 추진 및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

- 정부는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황 진단부터 대안모색, 시뮬레이션, 정책평가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 데이터 활용수요 급증

국정과정 이슈에 대응하여 소통형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을 통해 증거(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 및 정책연구 성과의 쌍방향 커뮤니티를 구성

- 국토 진단·분석결과를 지도, 그래프, 통계 등이 융합된 웹 기반의 상호작용지도 (Interactive Maps)로 공유하여, 데이터 기반의 이슈 공론화 및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을 이끌어내어 협력적 지역문제 진단·해석 및 정책방안 모색 지원

연구결과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Interactive Land Monitoring Reports)란, 상호작용지도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로 진단한 국토 현안에 대한 사항을 움직이는(動的) 지도, 그래프, 수치 등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지식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촉발하는 물리적 환경 및 이에 포함된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구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첫 번째는 증거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석·시각화
- 두 번째는 소통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체계 및 쌍방향 소통 커뮤니티 환경 구축

- 세 번째는 초학제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이슈 지역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솔루션 도출을 지원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구축방법 및 구성요소를 정립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는 정책이슈 발굴을 시작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스토리 메이킹, 의견공유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지향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는 상호작용지도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분석·시각화·참여/소통 지원 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작용지도와 그래프, 통계정보/속성정보, 정책스토리, 소통창 등의 콘텐츠를 포함

도시재생·재난안전 등의 주제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시범 제작

- 인구와 건물 데이터를 활용한 전국의 쇠퇴지역 진단을 통해 재생사업 선정 및 지원이 필요한 관심지역 모니터링
- 전국의 내진 설계건물 현황을 분석·공개하여 데이터 기반 이슈 공론화 및 소통 도모

정책제안

데이터 기반의 소통을 위한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활용 확대방안 제시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는 증거기반, 소통기반, 초학제간 융합을 바탕으로 구축해야 하며, 단순히 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
-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소통·참여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증거기반의 정책 기반 및 방법론을 확산하고, 이에 대응한 업무 및 정책 추진 프로세스 혁신 및 데이터 기반 소통체계 마련
-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도구 개발·활용 및 교육을 확대하고, 상시적 국토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해석·시각화·정보 발신-피드백 데이터 재수집·분석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전담수행조직체계 구성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 개인·기업 금융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Toward Analyzing and Forecasting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use of Personal and Business Big Data

연구책임 김동한 | 연구진 변필성, 이성원 | 수시 18-11 | 79면



연구목적

국토 공간상의 균형발전에 관한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 사업체 등 개별 행위주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한 뒤 각종 공간 빅데이터와 융합하여 기존의 국토, 지역, 도시 부문 통계와 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전 국토 또는 국토 공간상의 지역, 도시 등에 관한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분석지표 및 모형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를 대상으로 공간분석 및 통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의 소득과 소비, 기업의 입지와 고용, 창업과 폐업 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국토 공간상의 균형발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나아가 국토 공간상의 균형발전 실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를 구축하고, 그림으로써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자 및 국민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함

연구결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에 관한 빅데이터를 구축, 활용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전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대시보드를 시범 개발한 결과 지역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 빅데이터는 기존의 사회경제통계와 달리 구체성과 최신성이 높고, 자료의 갱신 주기가 빨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쇠퇴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가능
- 분석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간단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간 비교분석만이 아니라 지역 내 비교분석에도 유용
- 개인 소득과 기업활동에 관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소비활동 등 보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면 지역격차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도출 가능

정책제안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빅데이터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공간상의 지역, 도시 등에서 개인, 기업 등 개별 행위주체들의 생산(Production), 교역(Trade), 소득(Income), 소비(Consumption) 그 자체에 보다 근접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빅데이터 발굴, 수집, 정제를 위한 체계 구축

-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구축하는 정형화된 통계데이터와 달리 빅데이터는 비정형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내역과 특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 국토, 지역, 도시 부문 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 정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토공간의 불균형 등 실태 파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의 분석, 시각화,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필요

- 빅데이터의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통계분석 및 공간분석의 수단으로는 다루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분석방법과 기술을 접목한 균형발전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국토공간의 실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분석뿐만 아니라 시각화나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에 관한 모형도 지속적으로 개발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정책 담당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스마트 국토·도시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for Smar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and Urban Spaces

연구책임 황명화 | 연구진 김대중, 임용호, 박미라 | 기본 18-12 | 288면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토·도시 공간의 변화와 현 정부의 지능화 혁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국토·도시관리 방법도 변화 필요

국토·도시관리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전략을 도출하여 국토교통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에 기여

-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국토·도시관리의 세부정책 분야를 식별하고, 도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공지능기술 적용 시나리오 제시

- 국토·도시관리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추진 방향,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추진체계(안)을 제시

연구결과

국내외 국토·도시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초기 단계이나, 해외는 스마트도시 구현, 예측기반 선제적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

현행 도시·토지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기술의 적용가능성 분석 및 일부 실증

- 자동화나 논리적 판단 수준의 지능과 인력·업무시간의 효율성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조사 및 평가/분석/검증 업무에 인공지능 우선 적용 가능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토지특성조사 등 업무개선 가능하나 데이터 및 기술 인프라 구축 측면의 선결과제 해소 필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①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수행 역량, ② 예측 기반 선제대응형 정책수행 역량, ③ 국민 소통, 참여, 편의 지향적 정책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사례조사,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활용, 데이터/IT 인프라, 기반기술, 인적역량, 법제도 측면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 제시

정책제안

(활용 전략) 국민 및 정책실무자 체감형, 예측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데이터/IT 인프라 전략) 인공지능 친화적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공유체계 마련

(기반기술 전략) 국토·도시분야 고유의 예측모델, 스마트도시 지원형 등 핵심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확보

(인적역량 전략) 인공지능의 이해, 제어, 활용 및 개발 역량을 갖춘 인적 기반 구축

(법제도 전략) 안전하고, 공정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법제 기반 검토 및 선제적 정비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Blockchain for the Intelligent Geospatial Information

연구책임 임용호 | 연구진 강민조 | 수시 18-30 | 108면



연구목적

(공간)데이터는 3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에너지(원유)'에 비유되리만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분야로, 지능형 공간정보를 실시간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유통 및 활용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정보융합의 핵심 키(Key)인 지능형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개인정보(개인식별, 위치정보 등) 등의 문제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있어 한계에 직면

이를 위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하여 정보주권 보호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공간정보 기술분야에 블록체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의 개념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보주권, 위치(공간)정보 활용, 미래형 기술과 융·복합 활용을 위한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에 필요한 기반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공공부분 공간정보 시스템 분야 및 IoT 관련 블록체인 도입방안 제시

연구결과

데이터 주도사회(Data-Driven Society)로의 진화에 따라 지능형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보안문제, 데이터 신뢰성 등이 정보 활용의 장애물로 작용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피해의식이 확대되고, 사물인터넷(IoT) 등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과 데이터 활용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

블록체인은 분산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기반으로 정보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 확산 및 미래 산업과 사회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블록체인은 데이터 혁명의 기초인 신뢰성 높은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손실(Dark Data)을 줄일 수 있음

-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통합(CPS) 운용의 핵심 키는 공간정보이며 블록체인의 신뢰성 및 보안성 그리고 스마트 콘트랙트 등은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음

블록체인의 공간정보 분야 도입은 초기 단계이므로 정보주권 기반의 개인정보 활용, 블록체인 기반의 공간정보 기반기술 개발, 공간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함

- 공간정보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표준 및 기반기술 개발,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보호를 위한 DECODE(Decentralised Citizens Owned Data Ecosystem) 등과 같은 도구 제공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IoT, AI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 네트워크로 지능형 공간정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와 더 강한 기술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함

블록체인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정보 활용도 개인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므로 실천적 테스트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참여를 확대해야 함

정책제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함

- 블록체인 기반의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은 총체적인 정보기술 관점에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의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주권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 지능형 공간정보의 분산원장 구축 시 상호운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및 활용의 관점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기본공간정보 및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한 표준제정 필요

- 정책수립 시 데이터 활용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객관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활성화를 추구해야 함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Geospatial Capacity Innovation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

연구책임 김미정 | 연구진 강혜경, 임시영 | 기본 18-17 | 102면



연구목적

199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민서비스와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였음

중앙정부 주도의 구축, 지방정부 환경의 고려 없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정부별 공간정보 구축, 운영환경 및 활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지역 간 정보격차 및 생활환경 불균형,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앙부처 주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사용, 지역 자체 역량의 축적이 미흡함

- 또한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으며,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지방정부 개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움

이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환경과 공간정보역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공간정보역량 강화 전략과 제도 및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지방분권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함

-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기능, 자원, 인력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현황과 역량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예산권 측면에서 검토함

- 공간정보 관련 조례는 179개 지방정부 중 80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지방정부의 50%가 팀 중심의 공간정보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

- 공간정보 관련 사업은 지난 3년간(2016~2018) 147개를 발주하였고 발주금액은 약 587억 원이었으며, 지자체당 평균 사업수는 4건(약 9천 만 원)임

-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역량을 조사한 결과 업무효율성 제고, 행정서비스 제공, 정책결정의 효과적 지원, 지역경제 발전, 시민참여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간정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정부 내·외부의 거버넌스를 단단히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예산권 측면에서 전략을 제시함

- 효율적 업무수행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관련 조직과 전문관 제도 등에 대한 근거조항,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반드시 공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 관련 업무 수행 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이 필요함

- 융·복합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행정업무를 구성하고,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관련 부서 등과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성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예산분담 제도와 투자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미래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지방정부 업무를 명확하게 제시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협의회 개최
- 공간정보아카데미, 공간정보 거점대학, 국토교육인재연구원 등을 이용하여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신설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을 중심으로

Monitoring Method for Land Use and Land Cover Change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

연구책임 서기환 | 연구진 오창화, 김다윗, 이민영, 양윤정, 이은규 | 기본 18-19 | 144면



연구목적

정부는 국토의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피복도를 구축해 왔으나, 자료의 일관성, 현재성, 시계열성을 갖추지 못해 한계가 있음

-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

이 연구는 기존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의 한계 또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현황 자료구축을 통한 새로운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최적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해 토지이용현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실증연구를 수행

-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과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안함

연구결과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2016년 촬영한 25cm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주거용 건물과 건물 이외 객체의 경계를 구분하여 대상자료 구축

- 분류하고자 하는 관심객체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객체수가 많고 패턴이 다양하고 복잡해 분류 자동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반주택지'를 선정하여 실증 수행

- 데이터셋의 구축은 영상자료와 GIS 건물통합정보 등을 중첩하여 영상 입력·건물경계 구획·오류 검수·이미지 변환의 절차로 진행

딥러닝 모델의 학습은 관심객체 추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델선정에서 시작, 데이터셋을 학습엔진을 통해 훈련시키고, 훈련된 모델을 검증 모듈(검증 셋 활용)에서 검증하면서 하이퍼파라미터를 수정,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여 학습 수행

- 실증 적용 모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별된 DeepLab V3+와 Deep U-net 모형에 대한 훈련 및 검증 과정을 거쳐 분류정확성과 학습 속도를 고려해 Deep U-net을 적용모델로 선정

최적 모델로 선정된 Deep U-net에 시험셋을 적용,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심객체인 일반주택지에 대해 76.1% 수준의 분류정확도를 도출

- 관심객체 분류정확성 결과는 환경부 세분류 토지피복도 4-2차 구축사업의 전문가 분류정확도 검수결과(76.9%)와 비슷한 수준이 도출됨

- 이 연구에서 분류객체는 객체들 중에서도 분류가 까다로운 주거용 건물을 선택하고, 분류정확도의 결과가 스크린 디지털이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함

정책제안

실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 딥러닝 기반의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함

- 딥러닝 모델 도입을 통해 토지이용현황자료의 구축 및 갱신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공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자료를 생산, 시계열 현황자료로 변화탐지 및 미래예측 수행

-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피복도 분류기준 및 항목을 통합하고 고해상도 정사영상 등을 활용하여 세분류 토지이용(피복)현황 자료로 구축하고, 자료의 편집을 통해 중분류와 대분류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현황 자료 구축 예산과 시간을 절약

- 다음과 같이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슈 가능성 검토

- 2단계: 본 사업을 통해 학습 자료 구축,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 검증

- 3단계: 영상수집 체계, 반자동 학습자료 구축기능 및 변화탐지 모형 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전략 연구

A Study on Spatial Information Strategy for the Hyper-connected Smart City



연구책임 임시영 | 연구진 사공호상, 오창화 | 기본 18-24 | 187면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사회와 스마트시티가 부각되면서 공간정보 분야 역시 이에 대응하여 기존과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실내 내비게이션, 드론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실내공간정보, 3차원 격자지도를 개발하는 등 구축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변화 중
-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로 일컬어지는 초연결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는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며, 공간정보 분야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이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초연결 스마트시티 개념과 구성요소,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역할, 시나리오와 실험 구축을 통한 현재 수준 진단, 초연결 스마트시티를 위한 공간정보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

연구결과

도시의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필요

-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속화될수록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도시에서는 데이터 간 연결, 행정 및 서비스 분야 간 연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연결로 초연결이 이루어질 것임

초연결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전반적인 데이터가 촘촘히 연결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시'임

- 초연결 스마트시티는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의 데이터 수집 및 획득,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연계 및 융복합 활용, 빅데이터에 내재된 가치 창출, 도시 내 데이터의 융합·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 필수

공간정보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실험적으로 구현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 초연결 스마트시티에 공간정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구축 방법과 절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객체화 수준 등에 대한 가이드 필요
- 필요한 부분만을 가시화하거나 필요한 정보에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이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기술 필요
- 수집되는 정보들에 위치를 부여하는 등의 공간정보 관점에서 재조정이 필요
- 객체화된 구성요소가 더욱 많아지고, 수집되어야 하는 도시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인공지능(AI)이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많은 실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객체화 수준, 구축 소요 비용, 객체화된 구성요소의 결합, 센싱정보 등의 도시정보 연결법, 위치 부여, 분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표준화해야 함
- 도시로 확장할 경우 구성요소가 많아지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객체화를 통한 가상공간 구축은 빔(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용

정책제안

현실도시와 가상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스마트시티 동기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공간(DTS) 프레임워크의 표준화 및 확대 추진

객체기반의 3D 공간정보 구축, 3D 공간정보의 모듈화를 중심으로 가상공간을 구현

스마트시티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동기화, 스마트서비스를 위한 공간분석을 강화하여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 운영

3D 구축에 대한 비용 산정 체계 구축, 공간데이터 및 서비스 거래시장 형성 등의 활용기반 강화와 지방정부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토지·주택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Study on Reformulating Land&House Information System in Cloud IT Environment



연구책임 김미정 | 연구진 강해경 | 수시 18-35 | 65면

연구목적

효과적 행정업무, 편리한 대민서비스 및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해 토지·주택 관련 정보시스템을 1990년대 중반부터 업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함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토지·주택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와 통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적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거나 환경변화에 따른 고도화는 미흡한 실정임

-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 공간정보 연계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정책수립과 다양한 활용 확산, 환경변화에 따른 고도화는 미흡한 실정임
- 시스템별 개별 서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정보의 단절,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관리, 외산소프트웨어 중심 구축 등이 비용 낭비 및 국내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주택분야에서 구축된 다양한 시스템의 융합을 기반으로 업무 및 정보환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결과

현재 토지·주택분야에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18개의 시스템이 도시건축, 주택·토지,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음

- 각 시스템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투명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 제공, 관련 통계 및 민원발급을 목적으로 구축됨
- 시스템의 운영환경 중 하드웨어의 Sun, IBM, 소프트웨어의 Solarks, Oracle 등 외산에의 의존도가 높음

- 또한 각 시스템의 연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며, 토지·주택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대장 기반의 연계와 지역지구·지적 등의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음

토지·주택분야의 패러다임이 개방형 정보화와 참여·소통·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관련부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수직적 거버넌스를 통한 데이터 공유·융합기반 조성 필요
- 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부가가치 높은 부동산데이터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체계의 도입 필요
- 이외에도 사물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환경을 구성하여 국토 이슈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활용

토지·주택분야의 융합 활용을 위해 ① 토지·주택분야의 공통데이터 구축, ②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통합플랫폼 구축, ③ 데이터기반의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④ 융합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등 네 가지 측면의 전략을 제시함

정책제안

토지·주택분야의 융합 활용을 위한 네 가지 추진전략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을 제안함

- 토지·주택분야의 공통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공통데이터를 선정 및 데이터 간 준실시간 연계를 위한 표준을 개발해야 함
-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주택시스템을 연계함
-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토지·주택분야의 정책결정모델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인사이트를 발굴함
- 융합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업무정의, 영역, 프로세스 등의 정의, 융합 활용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구체적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함

7

글로벌개발협력연구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Developing Indicator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Urban Sector

연구책임 안예현 | 연구진 유희연, 이소영, 윤지윤, 이은미, 김민지, 김윤정, 정의홍 | 수시 18-14 | 182면



연구목적

원조효과성 관련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중요성 증대

-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 5대 원칙 중 하나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가 채택된 후, 성과관리 논의 본격화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도입으로 개발협력 내 국토·도시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독려로 국토·도시 관련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내 국토·도시 분야의 개발협력 성과관리 미흡

체계적인 개발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성과관리 지표 개발 필요

-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및 국토·도시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 필요
-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로서 개발한 지표들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

연구결과

기존 성과 프레임워크 및 지표 사례로부터 국내 국토·도시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시사점 도출

- SDGs 연계 및 수원국 차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표 사용
-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실제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 필요
- 질적 측면의 개발효과성 제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평가 고려

5개 세부 분야에 대한 38개의 세부 목표와 89개의 지표, 4개 사업 유형에 대한 13개 산출물·성과물과 53개 지표 개발

- 국제사회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11개와 국토·도시 세부 분야를 연계하여, 5개 세부 분야의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성과지표들을 개발함

- 활동부터 분야별 목표까지 단계별 연계를 위한 4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들을 개발함

각 분야 전문가 및 개발협력사업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과지표들 검증하여 보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지표를 제시함

- 유상원조와의 연계지표
- 특정사업유형의 단계별 이행에 대한 구체적 지표
- 공여기관 관점에서의 성과지표
- 비정량적 지표

정책제안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세부목표를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 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기관 차원의 중장기 성과관리 향상 필요

- 제시된 사업유형별 산출물을 단위사업 관리에 활용하여, 사업별 지표 수립 과정에서 소요되는 조직적·행정적 비용의 절감 및 기관효율성 제고 필요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함

- 양질의 원조사업 수행을 위한 기구 효율성 제고
-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적용 프로세스 개발
- 지표 측정 및 목표 설정에 대한 방법론 개발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단계별 지표 활용가이드 개발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etropolitan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연구책임 안예현 | 연구진 이용우, 김중은, 유희연, 이소영, 김은화, 이주일, Ishita Alam Abonee, Doan Van Minh | 기본 18-07 | 243면



연구목적

전 세계적 도시화에 따라 개도국 대도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광역적 도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은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 경험의 공유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음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대도시권 관리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방안 필요

이 연구는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국내 대도시권 관리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국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대도시 인구분담률은 1960년 13.9%에서 2015년 22.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1인당 대도시 GDP가 낮은 도시일수록 대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

대도시권 관련 국제기구 문헌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도시화, 정부, 개발, 계획 등의 단어가 대도시권과 함께 빈번히 사용됨

- 범분야 이슈인 정치·행정 부문은 부문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식, 도시계획·법·디자인 등 정책적 지원, 광역정부 필요성, 지자체 간 협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역할 조율, 정부 역량 강화, 재정수단 다양화 등 강조

호치민시티 대도시권의 분절화된 계획체계가 주요 계획 간 비정합성 문제와 난개발을 조장함. 계획통합을 지원하는 신계획법의 발효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다카 대도시권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관리 한계에 부딪혔으며, 강력한 광역기구 부재 및 분절화된 원조사업 구조는 기관 및 관할구역 간 분쟁 심화, 사업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함. 다카 대도시권에 적합한 광역 거버넌스 모델 연구 및 장기적·내생적 성장을 위한 사업 필요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관리정책 수립

- 신도시 건설 및 광역차원 교통계획 수립 등의 투자정책과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억제 등을 위한 규제정책 병행을 통해 균형발전 유도 및 중장

기 계획 수립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광역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유도

정책제안

우리나라 국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국제협력 이행의 측면에서 고려하고,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의 시사점을 국제협력 내용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을 위한 방향 도출

- 지속가능성 및 내생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사업 수행
- 협력국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 경험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공유 플랫폼 구축 개도국 대도시권 각각의 여건에 따라 하기의 국제협력사업 추진 제안

- 호치민시티 대도시권은 도시계획 통합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에 높은 수요를 보임에 따라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통합계획 이행을 위한 기술 자문사업 제안

- 다카 대도시권은 광역 관리를 위한 적합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고 각 기관의 역할에 맞는 역량개발이 필요하여 다카 광역계획 수립 및 이행 역량개발사업 제안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세계 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대도시권 관련 연구컨설팅 및 협력사업 수행기관의 글로벌 연대를 수립함으로써 기존 조직들의 역량 강화 및 상호협력 증진 기능

- 대도시권 관련 연구수행 및 협력활동을 전담하는 신규기관 설립을 통해 현황 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공유하여 대도시권 연구를 선도하고 중장기 사업을 수행

-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을 도입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력국의 수요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사업 단계 및 부문 간의 연계성 향상하고, 관리이슈에 법정부적 대응

8

한반도·동아시아연구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1)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연구책임 강민조 | 연구진 임용호, 강호제, 김종진, 유현아, 최용환 | 기본 18-29 | 210면



연구목적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 접경지역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남북 협력의 장(場)’,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지대’이며 ‘하나 된 한반도를 위한 선도 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과 법·제도적 규제로 남북 협력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능력이 확보되지 못해 남북 접경지역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

- 1차연도(2018년)에는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과학적 공간분석과 제도적 여건분석 등을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종합발전 기본구상 제시

연구결과

이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초하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경제부문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기본구상을 제시

- 낙후한 접경지역의 발전방안 마련 등의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균형개발 목적에 따른 기본구상 제시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의 발전방향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

첫째,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 판문점선언 등에 따른 국가정책의 기초하에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개념 설정 및 필요성을 제시

둘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분석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국내 추진사업과 해외 접경지역 협력사례 검토를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도출

셋째, 갈등과 대치의 공간이 아닌 평화조성의 공간으로서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지역의 역할에 따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발전 기본구상 제시

넷째,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 및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기반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기반구축 방안 제시

-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모니터링 적용방안 도출을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데이터 구축방안과 시스템 기반 구축 방안 제시
- 2차연도(2019년) 수행 예정인 과학적 공간분석 기반의 균형발전 기본구상 적용사례(DMZ생태·문화·관광벨트, 주한미국 공여지역 개발, 통일경제특구 조성) 제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기초하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특히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저해요인 문제점 진단을 통해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한 점진적 접근방식과 ‘평화통일특별자치도(시) 도입’ 등의 급진적 접근방식 제시

정책제안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초하에서 낙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및 평화지대 조성을 위하여 접경지역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접경지역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법·제도적 제약의 개선과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

-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에 저해가 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효율적인 접경지역 개발과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부처 간·지자체 간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

- 안보문제와 정치적·군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분담비율 상향 등의 적극적 지원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연구책임 이현주 | 연구진 유현아, 김경술, 김동성, 서종원 | 수시 18-02 | 145면

연구목적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국내외 산업인프라 여건과 기존 남북경협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연구가 필요함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산업 및 인프라 개발 여건과 그동안의 대북정책 흐름, 기존 협력사업들을 권역별로 검토

이 연구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최근 대내외 여건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연구결과

대외적 여건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의 대외전략, 역내 산업정책과 교역관계 및 국가 간 인프라 협력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영향력 확대,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견제 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가시화
- 경제무역 분야에서 역내 국가 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혁신정책이 추진되면서 고위기술 분야산업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프라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음

대내적 여건에서는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남북한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대북제재 여건을 검토

- 남북한이 사회경제적 여건도 남북 간 경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망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강화, 미국의 제3자 제재요건 강화 및 중국의 독자제재 추가지정 등 국제사회 및 주요국가의 독자제재의 강도와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기존 권역별 주요 남북 간 협력사업으로, 환동해권의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북한자원 공동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산업, 환황해권의 경의선 연결공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접경지역의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이 있음

정책제안

상이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남북 간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

- 환동해권은 교통물류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환황해권은 교통물류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은 지역 낙후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

단계별 유망사업의 재검토가 필요

- 단기적으로는 대북제재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개하여 남북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긴밀한 협력하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여 추진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활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추구하는 북방경제와의 연계는 결국 신북방정책을 수단으로 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중-몽-러 경제화랑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
- 신남방정책도 한반도의 평화적 경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견국들과의 외교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남북경협모델에서 추후 신시장으로서의 아세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다 심화해 나가야 함

국제적 규범 준수 및 법제도적 여건개선

- 우리나라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경협의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필요
- 각 권역별 경험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 간 또는 지역 내 협력을 지속해야 함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Territorial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연구책임 이현주 | 연구진 이백진, 유현아, 이석기 | 기본 18-26 | 144면

연구목적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토 및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 발굴 필요

-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추구하는 3대 경제벨트가 남북한을 아우르는 공간적 범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각 벨트별 경협 여건에 대한 종합분석 필요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별 개발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토차원의 남북경협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결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의 현황분석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국토차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 도출

동해안 경제벨트에서는 남북 동해안 연계관광산업 협력벨트, 육·해상 물류 핵심 거점항만 육성, 남북 간 자원개발 연관산업 협력모델 등의 전략 제시

- 전략과제로 △설악-금강-원산-백두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북한 동해안 4대 거점항만 개발, △단천일대 자원개발 특구 조성 등 3개 과제 도출

서해안 경제벨트는 남북 육상교통 연결성 개선, 남북 산업협력 모델 구축, 국제산업협력 지대 조성이라는 전략 제시

- 전략과제로 △서울-평양-신의주 간 고속철도사업, △개성-해주권 특구개발, △단동-신의주 초국경 산업단지 개발, △평양-남포권 특구 개발 등 4개 과제 도출

남북 접경지역벨트는 접경지역의 국토보전 및 관리분야 협력증진, 새로운 협력모델의 시범지대로 활용전략 제시

- 전략과제로 △DMZ 환경생태관광지대 개발, △공유하천 관리 및 한강 하구 공동 활용, △통일특구 개발 등 3개 과제 도출

정책제안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분야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경제벨트별 상이한 여건에 따른 국토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벨트별 국토분야 추진전략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벨트별 전략사업에 대한 주요 평가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이 연구에서 파악된 벨트별 사업도출을 위한 주요 평가요인은 동해안 경제벨트는 '사업성', 서해안 경제벨트는 '경제적 파급효과', 남북접경 지역은 '지정학적 평화안정'임

남북경협 전략사업의 최우선 사업을 선정하여 이들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 간 제도적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경협에서 지자체 및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03 주요 연구성과

1. 2018년도 연구사업 및 2019년도 연구방향
2. 분야별 주요 연구

색인

- 연구과제명
- 연구자명

연구과제명

1-9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8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3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94

A-Z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81
-----------------------------------	----

ㄱ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64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65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66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	110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44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67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68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69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 방안	95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96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97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106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34
국토발전의 전개과정 및 의의(1978~2018)	35

L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전략 연구	82
-------------------------------	----

ㄴ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107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58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45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46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47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83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70

ㄷ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중점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84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48

ㄹ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71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36

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72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37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7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74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98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49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50

ㅇ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75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51

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고려한 도로부문 대응과제	85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	86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52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38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76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77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78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99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100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방안 연구	87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101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39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59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53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방안	88

ㅊ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분석체계 연구	89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40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102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60

ㅋ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54
-------------------------	----

ㅌ

토지주택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103
-----------------------------	-----

ㅍ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90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91

ㅎ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5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11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112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연구	41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61

연구자명

A-Z

Doan Van Minh 107
Ishita Alam Abonee 107

ㄱ

강미나 69
강민조 99, 110
강성우 78
강용석 95
강종식 84
강혜경 100, 103
강호제 33, 51, 110
고용석 80, 82, 83, 84, 88
구형수 52, 53
권건우 71, 76
권규상 46, 51, 54
권기현 69
김경술 111
김광호 85, 87, 89
김다윗 39, 101
김대종 96, 98
김도형 69
김동근 34, 38
김동성 111
김동한 48, 97
김동현 39
김명수 53
김미정 100, 103
김민지 106
김상규 35
김상록 80
김선희 35, 38, 41

김성수 48
김성일 35, 65, 66
김수연 32
김수진 53, 55, 72, 90
김슬예 58
김승중 72
김아름 59
김영룡 54
김용기 53
김유란 46
김윤정 106
김은란 53
김은화 107
김익기 84
김익희 49, 50
김재영 65
김종원 58, 61
김종진 110
김종학 81, 83, 84, 86, 88
김준기 84, 91
김중은 107
김지혜 78
김진범 36
김진영 32
김진태 85
김창현 61
김태엽 75
김호정 69, 80, 81

ㄴ

남기찬 39, 40
남지현 86

노민지 70, 78
노영희 37

다무라 후미노리 54

ㄹ

류덕현 81
류승한 33

문정호 39
문혁 65
민범식 52
민성희 34, 38

ㅁ

박미라 94, 98
박미선 69
박민숙 45
박성경 46
박소영 51, 53
박윤미 72
박종순 45
박종일 85, 87, 89
박천규 67, 70, 71, 78
박태선 36
박혜정 55
방보람 71
배유진 46, 47
배윤경 88, 91
배인영 53
백정한 82, 84, 88, 91

백지현 46
변세일 70, 71
변필성 48, 91, 97

ㅂ

사공호상 35, 102
서기환 101
서민호 46
서연미 33, 41
서종원 111
손은성 67
송재인 88
송정현 32
송창근 58
송하승 72, 73
심재엽 84

ㅇ

안승만 64, 73
안예현 35, 106, 107
안종욱 65, 66
양윤정 101
양진홍 36, 95
오경근 35
오근상 72
오민준 71
오창화 96, 101, 102
원동욱 75
유병혁 60
유영준 60
유현아 110, 111, 112
유희연 106, 107
육동형 86

윤서연 80, 91
윤선근 64
윤영모 41
윤지윤 106
윤태관 85, 87, 89
윤희중 66, 82, 91
이건원 46
이경아 91
이광섭 60
이기상 67
이동욱 84
이미영 32, 35, 49
이민영 101
이백진 82, 91, 112
이병재 58
이상은 58, 60, 86
이상훈 46
이석기 112
이상원 44, 97
이소영 55, 106, 107
이수욱 35, 67, 78
이순자 34, 38
이승욱 53
이승훈 66, 75, 77
이양재 77
이영주 96
이왕건 35, 45
이용우 34, 35, 48, 107
이원복 32
이원섭 35, 36
이윤상 71
이은규 101

이은미 106
이인희 37
이재용 49, 50
이정찬 49, 50
이종소 58
이주일 107
이지원 47
이진희 45, 55
이춘용 35, 80, 83
이태리 76, 78
이현주 111, 112
이형찬 64, 74
임상연 35, 45
임시영 100, 102
임영식 53
임영태 86
임용호 35, 98, 99, 110
임이정 88
임준범 91
임지영 48, 73

ㅈ

장수은 91
장철기 65
장철순 32, 37, 40
전성제 35, 67, 70, 71, 76, 78
전유신 48
전은호 72
전준호 35
정경석 71
정명운 83
정문섭 95

정승혜 68
정연우 75
정우성 32
정의홍 106
정일훈 48
정진규 35
조만석 59, 60, 61
조미향 53
조성철 37, 40
조재용 66
조정희 35, 65, 66, 71, 74, 75
조진철 66, 75, 77
조판기 53
주기범 65

ㅊ

차미숙 41
차은혜 34, 38, 41
차주영 48
최돈정 60
최명식 72
최수 64, 68, 73
최용복 95
최용환 110
최재성 35, 81, 88
최재순 86
최진 78
최진도 67

ㅌ

표한형 33

ㅎ

한국리서치
78
한여정
35
한우석
58
함영한
58
허성윤
59
홍사흠
32, 35, 39, 72
홍진현
44
황관석
78
황명화
37, 94, 96, 98

CHAPTER 0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활동

1. 주요 행사	120
2. 글로벌 협력	124
3. 발간물	138

1. 주요 행사

2018. 2. 19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 2. 27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추진방안' 정책세미나

3. 8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3. 1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3. 16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3. 28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

4. 18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 5. 10 ~ 11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5. 17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 세미나

| 5. 30



스마트+그린시티 융복합 정책세미나

7. 11



제16대 강현수 원장 취임식

| 8. 16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

8. 31

| 9. 4



국토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체결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교류협력협약 체결

9. 5

| 9. 17 ~ 18



국토연구원-LH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정책 지원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개편방안 지자체 간담회

10. 2

| 11. 10



개원 40주년 기념식



제2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11. 17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



11. 21

| 12. 6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2018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12. 10

| 12. 17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



제6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시상식

2. 글로벌 협력

1) 해외학술교류

3. 7

| 4. 3 ~ 4. 4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전략 수립 현지워크숍



Computational Design in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CODE 2018) 특별세션

4. 9 ~ 4. 12

| 5. 15



국토연구원-페루 피우라주정부 공동워크숍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우드로윌슨센터 협동세미나

5. 16



제8차 한-러 극동포럼



7. 2

| 8. 9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1차 Visiting Scholar Program 최종워크숍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 업무협약회

9. 5

| 9. 10



해의 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2차 Visiting Scholar Program 착수세미나

9. 10

| 9. 11



해외석학 전문가 세미나: Akimasa Fujiwara (일본 히로시마대)



2018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9. 13



2018년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GIS)



10. 16

10. 17



2018년 한국-아시아개발은행(ADB) 환경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워크숍: 도시 및 교통 세션



중국 절강공상대학교 방문 세미나

9. 17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국제세미나



10. 31 ~ 11. 2



제26회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 참석



10. 9



제23회 아시아건설회의(ACC) 참석



11. 6

11. 6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원(CIEM) 방원 워크숍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방향 국제세미나

11. 13 | 11. 14 ~ 11. 15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공무원단 방원 워크숍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CSIS) 공동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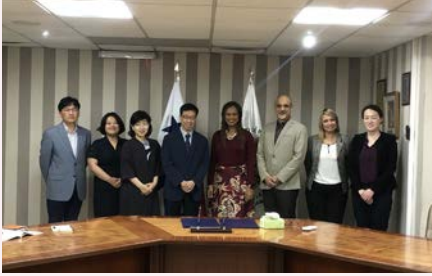
11. 15 ~ 11. 16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11. 16 | 11. 27



국토연구원-파나마시티 MOU 체결



국토연구원-NILIM(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스마트도시 워크숍

12. 11 | 12. 18



제27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제1회 글로벌부동산시장 연구포럼

2) 연수프로그램

5. 13 ~ 5. 18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전략 수립 관련 베트남 관계자 초청연수

6. 21 ~ 7. 11



2018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3차연도)

9. 3 ~ 9. 7



2018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ADB)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및 경험' 공동워크숍

9. 17 ~ 9. 20



2018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국토균형발전' 공동워크숍

10. 15 ~ 10. 18



제4회 중남미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국토연구원-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10. 29 ~ 11. 10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연수(2차연도)

3) 글로벌개발
협력 활동

1] MOU 체결

국제기구/해외 연구기관과 신규 MOU 체결 및 기존 MOU 강화 및 내실화

-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VIDS), 파나마시티 시 정부 등 신규 MOU 체결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기존 MOU 체결기관과 공동연구, 교육·연수, 정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협력사업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기 체결된 MOU 강화·내실화

[MOU 체결 실적]

국가	기관명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 도시생태 및 환경계획연구소
멕시코	국가주택위원회
미국	남캘리포니아지방정부연합, 메릴랜드대학교, 우드로윌슨센터, 워싱턴대학교 건설환경대학,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도시연구소
미얀마	경제발전연구센터
방글라데시	수도권개발청(RAJUK)
베트남	베트남 건설도시공무원 교육원, 베트남 건축도시지역계획 연구원,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토지행정청, 하노이 건축대학교,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VIDS),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청(UDA), 베트남 도시농촌계획연구소(VIUP)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대학교
우루과이	우루과이 리베라주
영국	런던대학교 바틀렛 도시계획대학
이집트	국토계획청, 카이로대학교 건축공학과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쿄대학교, 도쿄대학교 도시안전국제센터, 쓰쿠바대학교, 종합연구개발기구,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히로시마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중국	중국토지감측규획원, 저장대학교, 남개대학교
콜롬비아	콜롬비아개발금융공사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유라시아대학교, 카자흐스탄 농업과학대학교
파나마	파나마시티 시정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주택청
국제기구	APEC기후센터,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2] 연수프로그램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컨설팅·계획수립을 통하여 협력국 지원

- 연구(Research)와 컨설팅(Consulting)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사후 평가 등 다단계 환류 연구연수 시스템 운영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대화와 토론 중심 프로그램 기획

[2018년도 연수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기간	참가국	인원
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 연수	5. 13 ~ 5. 18	베트남	9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3차연도)	6. 21 ~ 7. 11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18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9. 3 ~ 9. 7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조지아, 캄보디아	12
KRIHS-WBG 공동워크숍: 국토균형 발전	7. 11 ~ 7. 13	루마니아, 미얀마, 베트남, 부탄,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2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중남미 고위급 초청연수	10. 15 ~ 10. 18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17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 강화(2차연도)	10. 29 ~ 11. 10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19

3 해외학술교류

연구성과의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

- 2018년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제6차 정례워크숍, 2018년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CGIS) 등 국제세미나 33건 개최
- 한-러 극동포럼, 아시아건설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계획 및 주택기구(Earoph) 세계대회 등 43건의 국제세미나에 발표·토론 등 참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개최 및 참여 실적]

행사명	일자	장소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 전략 수립 베트남 현지워크숍	3. 7	도시계획연구원 (하노이/베트남)
Computational Design in Engineering 국제학술 대회(CODE 2018) 특별세션	4. 3 ~ 4	창원컨벤션센터 (창원/대한민국)
국토연구원-페루 피우라주정부 공동워크숍	4. 9 ~ 12	호텔 페이토 (서울/대한민국)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전략 수립 관련 베트남 관계자 초청연수	5. 13 ~ 18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우드로윌슨센터 협동세미나	5. 15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제8차 한-러 극동포럼 참석	5. 16	현대호텔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파나마 시정부 방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업무협의회	6. 30	콘래드호텔 (서울/대한민국)
2018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1차 Visiting Scholar Program 최종워크숍	7. 2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 업무협의회	8. 9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 전략 수립 연구성과 공유 세미나	8. 22	베트남 건설부 (하노이/베트남)
2018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2차 Visiting Scholar Program 착수세미나	9. 10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해외석학 전문가 세미나: Akimasa Fujiwara (일본 히로시마대)	9. 10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행사명	일자	장소
2018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9. 11	메종글래드 (제주/대한민국)
2018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CGIS)	9. 13	코엑스 (서울/대한민국)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9. 17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한민국)
제23회 아시아건설회의(ACC) 참석	10. 9	워드프론트 호텔 (쿠칭/말레이시아)
중국 절강공상대학교 방문 세미나	10. 17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제26회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 참석	10. 31 ~ 11. 2	뉴캐슬시 시청 (뉴캐슬/호주)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원(CIEM) 방문 워크숍	11. 6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방향 국제세미나	11. 6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공무원단 방문 워크숍	11. 13	국토연구원 (세종/대한민국)
국토연구원-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CSIS) 공동세미나	11. 14	도쿄대 (도쿄/일본)
제6차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연례워크숍	11. 15	IDB 파나마 지역사무소 (파나마시티/파나마)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중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11. 16	IDB 파나마 지역사무소 (파나마시티/파나마)
NILIM(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 워크숍	11. 27	도쿄 (쥬스마트시티기획, 도쿄도 자동 운전원스톱센터 등 (도쿄/일본)
제27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12. 11	서울명동세종호텔 (서울/대한민국)
제1회 글로벌부동산시장 연구포럼	12. 18	프레지던트호텔 (서울/대한민국)

4 연구실적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수탁연구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 등 국제기구 및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 수행 다수
- 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여 각 분야별 국외 전문가(교수 등) 초청, 공동연구 수행
- 협력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토·도시·방재·인프라 분야에서의 정책 및 계획 수립

[국제공동(협력)연구, 수탁연구 등 수행 실적]

관계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미주개발은행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중남미 무허가주거지 개선 방안 연구	2017. 12. 6 ~ 2018. 12. 31	김수진 외 4인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도시정비방안 한·중남미 비교연구	2018. 2. 20 ~ 2018. 12. 31	이진희 외 2인
	문화 창조 산업을 활용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 연구	2018. 7. 5 ~ 2018. 11. 30	권규상 외 3인
	중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	2018. 8. 30 ~ 2020. 2. 29	박미선 외 5인
베트남 도시계획 개발학회	베트남 주민주도형 도시방재 예비조사	2017. 12. 22 ~ 2018. 5. 21	이병재 외 2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8. 1. 1 ~ 2018. 12. 31	박미선 외 4인
University College London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연구	2018. 2. 1 ~ 2018. 11. 30	윤영모 외 4인
세계은행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18. 2. 1 ~ 2018. 11. 30	안예현 외 5인
Clark University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2018. 6. 1 ~ 2018. 8. 31	권규상 외 2인

관계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탄자니아 국립도로청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5. 1. 22 ~ 2018. 2. 21	이승복 외 3인
세계은행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연구	2016. 12. 27 ~ 2018. 3. 31	김성수 외 5인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그란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	2015. 7. 28 ~ 2018. 6. 30	문정호 외 12인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용역	2016. 7. 11 ~ 2018. 9. 21	김호정 외 3인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2016. 11. 2 ~ 2018. 11. 1	사공호상 외 4인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 자원사업 종합평가	2017. 9. 7 ~ 2018. 3. 30	사공호상 외 3인
한국개발연구원	KSP 경제발전분야 미안마 정책자문	2017. 7. 14 ~ 2018. 4. 30	김대중 외 6인
	KSP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2018. 11. 20 ~ 2019. 6. 28	박세훈 외 5인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2017. 8. 4 ~ 2018. 3. 5	이상건 외 3인
해외건설협회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용역	2017. 12. 26 ~ 2018. 9. 21	김대중 외 1인
	베트남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기술 동반수출 전략수립 용역	2018. 1. 24 ~ 2019. 1. 23	이상은 외 1인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전략 수립 용역	2018. 1. 31 ~ 2018. 8. 30	이원섭 외 2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	2018. 4. 10 ~ 2020. 12. 31	이병재 외 4인
산업연구원	중국 동부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2018. 7. 1 ~ 2018. 11. 30	이현주

3. 발간물

1) 국토

통권 435호 2018. 01			통권 436호 2018. 02		
국토시론			국토시론		
20년 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세 가지 난제	권원용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공간정보는?	최병남	
특집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역할과 향후 과제			특집 공간정보 융합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코리아 실현		
1. 메가트렌드와 국토종합계획의 미래상	이용우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공간정보기술 발전방향	김형석	
2.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기초와 이념 및 향후 과제	권영섭·최유		2.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 공간정보 신시장	최현상	
3. 인구감소 시대의 국토계획	민성희		3. 언제 어디서나 활용되는 공간정보	최형한	
4.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생태축 적용을 중심으로	박종순		4. 공간정보 생산방식의 새로운 변화: 데이터가 아닌, 가치의 구축	최경아·이임평	
5. 재해에 대응한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방향	이준		5. 공간정보의 미래를 위한 두 바퀴 자전거: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전보애	
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국토의 실현	임은선		6. 지속가능한 공간정보 발전과 산업 활성화 방안	황정래	
7.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향			7.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임시영·김미정	
: SCAG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연				
용어풀이 <233> 자연자원 총량제			용어풀이 <234>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외	임용호	
KRIHS가 만난 사람 <4>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			KRIHS가 만난 사람 <5>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이 함께하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권영선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특별기고 아파트 밀림이 되어가는 우리 도시들...	이건영		“사람의 가치를 발현하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8>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9>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이 만나는 철도도시 영주	김현주		새 중앙선과 함께 꿈꾸는 안동의 미래		
e-interview 자야크리스난(Jayakrishnan)			국토 옴부즈만		
미래의 이동성	남대식		e-interview 하기와라 타이치(萩原 泰治)		
영화와 도시 <49>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자연재해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당신에게 도쿄(東京)는...	김종은		영화와 도시 <50>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등		
해외동향 싱가포르의 주택계획 및 시사점	변세일·방보람·오민준		평화를 여는 너른 창, 내일의 도시 평창		
글로벌정보 프랑스 국가-레지옹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토종합회의 개최 외			해외동향 영국의 국가주소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및 시사점		
국토 옴부즈만			글로벌정보		
국토연구원 단신			프랑스 세르티 연구소,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지도서비스 제공 외		
‘2017 국토연구원-서울특별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외			국토연구원 단신		
자료회원 가입안내			‘관광컨설팅 사례’ 전문가 특강 개최 외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광역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개편방향 연구	이상대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개선 연구		
(김태환 외 지음)			(윤서연 외 지음)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김진유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김민철 외 지음)			(황명화 외 지음)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짧은 글 긴 생각		
모더니즘 국토와 포스트모더니즘 국토	박태순		언택트, 케렌시아, 그리고 공간정보		

통권 437호 2018. 03			통권 438호 2018. 04		
국토시론			국토시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방안 제언	이용재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	조주현	
특집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전략			특집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1.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방윤석		1.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이형찬	
2.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인프라 투자전략	최진석		2. 모바일 부동산중개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이상식	
3.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의 공공성 개선: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오상진		3. 집합건물 분양에서 소비자 보호 법리와 개선과제	김남근	
4. 첨단교통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성 이슈와 정책 사례	김광호		4. 상가건물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및 향후 과제	정주희	
5.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후 교통인프라 유지관리방안	도명식				
6.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동향과 향후 과제	박준환				
용어풀이 <235> 공공성 외			용어풀이 <236>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외	문세하	
KRIHS가 만난 사람 <6>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국토 옴부즈만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교통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7>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10>			김병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의성, 중앙선에 전통을 담다	양희경		“이웃 간 갈등해결도 분쟁조정이 해법입니다”		
e-interview 엘리사베트 A. 실바(Elisabete A. Silva)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최초회>		
적응형 도시계획을 향하여	권희서		중앙선의 마지막 분기점이자 실질적 종착지, 영천		
영화와 도시 <51>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랑에 빠질 확률’			기고 아파트 공화국		
현대 도시공간 속에서 관계와 소통의 회복, 부에노스아이레스	김도식		e-interview 필립 버크(Philip Berke)		
기고 농촌 난개발 대책, 기반시설부담구역부터 되살리자	김상조		커뮤니티 회복력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해외동향 일본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 및 맨션관리센터 운영 사례			영화와 도시 <52> 영화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		
천현숙·이갈제·김정인			순수한 동화마을 속에서 에곤 실레의 욕망을 찾다, 체스키 크룸로프		
글로벌정보 프랑스 자가 고속열차 시대를 여는 위고(OUIGO) 외			해외동향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섬, 스페인 마요르카(Mallorca)		
국토연구원 단신			이승욱		
‘20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외			글로벌정보 프랑스 주택임대료 한도 제한 폐지 외		
국토 옴부즈만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 개최 외		
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박세훈 외 지음)			(김승종 외 지음)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박미선 외 지음)			짧은 글 긴 생각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뒤쫓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짧은 글 긴 생각			유일동		
아쉬운 도로정책 시계추					

통권 439호 2018. 05			통권 440호 2018. 06		
국토시론			국토시론		
‘혁신도시 시즌2’에 즈음하여		최병선	국토교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김정렬
특집 지역혁신거점 구축과 혁신도시 시즌2			특집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기간서비스산업		
1. 혁신도시 시즌2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장영수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서비스 혁신		한재필
2.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발전 방안		류세선	2. 자동차서비스 기간산업의 중요성 및 일자리 창출		하성용
3. 혁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자		김갑성	3. 선박수리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김길수
4.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류승한	4. 항공정비업의 성공요인과 일자리 창출		신동춘
5. 혁신도시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임성호	5.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민성희
6.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윤영모	6. 국가기간서비스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및 제도개선 방안		권영섭
용어풀이 <237> 혁신도시 시즌2 외			용어풀이 <238> 경제의 서비스화 외		
		김다윗	KRIHS가 만난 사람 <9>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최유
KRIHS가 만난 사람 <8> 이만원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권영섭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윤영모	e-interview 피터 비숍(Peter Bishop)		
e-interview 장미셸 굴드만(Jean-Michel Guldman)			런던 킹스크로스과 올림픽 도시재생사업		
미기후 분석에 근거한 토지이용 최적화		박유진	양도식		
영화와 도시 <53> 영화 ‘오래된 인력거’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1>		
희망과 절망 사이의 삶의 공간: 인도 콜카타와 뭄바이, 비하르		이영아	주인이 주인이 되어 다시 찾은 창신송인		손경주
해외동향 지역자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영화와 도시 <54> 영화 ‘나초 리브레’ 등		
노르웨이 플룸(Flåm) 사례		차은혜·이순자	산 자와 죽은 자의 활기찬 공존, 멕시코시티		김승근
글로벌정보 정부부처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외			국토 옴부즈만		
국토연구원 단신			공간공감(空間共感) <1> 테라 인코그니타를 찾아서		임영모
‘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개최 외			연구자의 서가 <1>		
국토 옴부즈만			나만의 휴식·쾌락 공간, 서재		조판기
KRIHS 보고서			기고 이달의 절기와 조선왕조실록 역사기후자료		박영순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이현재	해외동향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교통협의체 운영과 시사점		김호정
(남기찬 외 지음)			글로벌정보 프랑스 노동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최성연	1만 명에게 교육기회 제공 외		
(민성희 외 지음)			국토연구원 단신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국토연구원-베트남 공무원 및 전문가 초청연수·MOU 체결식’ 개최 외		
짧은 글 긴 생각			KRIHS 보고서		
진정한 상생을 추구하는 혁신도시가 되기를		윤종석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안홍기 외 지음)		변창욱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 연안육역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박종순 외 지음)		최지연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		김동훈

통권 441호 2018. 07			통권 442호 2018. 08		
국토시론			국토시론		
재난에 강한, 안전한 국토 구현		정상만	사람을 키우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 뉴딜의 길		송경용
특집 대형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			특집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현장에서 실천하는 ‘뉴딜’		
1. 지진대응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실효적 방안		김만일	1. 주민·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		박준형
2.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재해복원 기술과 정책		정승현	2. 팝업산업을 활용한 사람 중심 원도심 활성화		박정은
3. 대형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정책제언			3.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김세훈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중심으로)		임채현	4.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남철관
4.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저감정책		주현수	5. 도시재생 민간 파트너십과 협치		신혜란
5. 재난환경 변화와 미래재난 대응방안		장대원	6. 동지내몰림 극복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실천 전략		전은호
6.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방재정책		한우석			
용어풀이 <239> 규모와 진도 외			용어풀이 <240>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국토 옴부즈만		이종소	KRIHS가 만난 사람 <11>		김유란
KRIHS가 만난 사람 <10> 박우종 한국방재학회장, 한서대학교 교수			정창무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인구집중시설의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우석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은 삶의 만족도 체감에서 시작합니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집기획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집기획		
: 국토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 <1> 국토계획과 지역개발		이정식	: 국토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 <2> 도시계획		안건혁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			e-interview 페드로 로메로(Pedro Romero)		
주인이 만드는 주민의 도시, 세종		김동호	지속가능한 자원과 인프라의 회복력		한다희
e-interview 레이첼 클리트(Rachel Garshick Kleit)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3>		
미국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역할		강승범	주민이 함께하는 부산 마을공동체		오태석
영화와 도시 <55> 영화 ‘망대’			영화와 도시 <56> 영화 ‘반지의 제왕’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춘천		이승민	스스로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되어보다, 해밀턴의 호비튼		윤지민
공간공감(空間共感) <2> 그 많던 종이지도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공간공감(空間共感) <3> 지도 속 브라질 땅돼지 찾기		
연구자의 서가 <2>		임영모	연구자의 서가 <3> Inno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임영모
근대도시계획의 진로를 밝힌 내비게이션		권원용	지역발전전략으로 혁신을 제시한 최초의 안내서		권영섭
해외동향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해외동향 캐나다와 미국의 지역주택시장 평가사례		변세일·오민준
글로벌정보 프랑스, 대기오염 기준 초과로 유럽위원회에 피소 외			글로벌정보		
국토연구원 단신			프랑스 도시재생청, 향후 5개년 도시재생사업 예산 협약 체결 외		
‘국토연구원 제16대 강현수 원장 취임식’ 개최 외			국토연구원 단신		
자료회원 가입안내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 외		
KRIHS 보고서			국토 옴부즈만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KRIHS 보고서		
(한우석 외 지음)		신진동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김중은 외 지음)		황희연
시스템 구현(II)(이상은 외 지음)		이승오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이왕건 외 지음)		진영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도시계획 ‘평창’에서 ‘관리’로		손동우	기자칼럼 진정한 도시재생의 실현		윤현숙

통권 443호 2018. 09		
국토시론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국토개발 방향	정창무	
특집 한반도 국토·인프라 발전방향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임강택	
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북방경제 협력방향	이현주	
3. 북한의 도시와 국토개발을 위한 제언	임동우	
4. 북한의 주택문제와 향후 협력과제	최상희	
5. 북한의 교통 인프라 실태와 한반도 교통망 구축방향	안병민	
6.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현황과 향후 과제	김경술	
7.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관광개발 방향	심상진	
용어풀이 <24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김종진	
KRIHS가 만난 사람 <12>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남북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금강산 당일관광도 가능해집니다”	이현주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집기획		
: 국토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 <3> 토지정책	최병선	
e-interview 마이클 라(Michael L. Lahr)		
대학, 재산세, 그리고 인적자본	이정현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4>		
대구 도시재생사업, 진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	이자복	
국토 옴부즈만		
영화와 도시 <57> 영화 ‘글루미 선데이’		
역사적 시공간의 상처를 힐링하는 영화 그리고 부다페스트	한영현	
자료회원 가입안내		
공간공감(空間共感) <4> 세 번 다시 돌아볼 여유	임영모	
연구자의 서가 <4> Governing the Commons		
공유경제와 자치분권의 이론적 토대	변창흠	
해외동향 뉴욕,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김익희	
글로벌정보 프랑스 제4차 경쟁거점 공모, 유럽을 향한 도전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청원시정연구원 연구교류협약’ 체결 외		
KRIHS 보고서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조재일	
(강민조 외 지음)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빈미영	
(이백진 외 지음)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제주 ‘비자림로’ 논란과 그 이면	홍진수	

통권 444호 2018. 10		
국토시론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도시의 미래	조대연	
특집 시로 그려보는 스마트 미래 국토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국토·도시관리의 현황과 추진과제	황명화	
2. 도시공간 변화진단을 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	김태현	
3.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유승일	
4. 스마트 건설을 위한 인공지능과 BIM	강태욱	
5. 선제적 물 재해 관리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전략	신강욱	
6. 국토인공지능의 과학적 이해와 발전 방향	이경전	
용어풀이 <242>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외		
KRIHS가 만난 사람 <13>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많은 사람이 공유할수록 공유비용이 줄고, 국가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황명화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집기획		
특별좌담회: 국토정책 40년, 회고와 전망		
국토 옴부즈만		
e-interview 니콜라스 펠프스(Nicholas Phelps)		
경제지리,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계획학	김형민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5>		
강화군 도시재생, 공감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남영우	
영화와 도시 <58> 영화 ‘만춘’		
일본다운 장소와 풍경, 가마쿠라(鎌倉)	문관규	
공간공감(空間共感) <5>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임영모	
연구자의 서가 <5>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국토 미래 창조를 위한 미래 예측의 길잡이	이용우	
해외동향		
페조선소의 도시재생방안: 빌바오, 함부르크, 말뚝 사례에서 배우다 이승욱		
글로벌정보 프랑스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정보 지도화 서비스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임은선 외 지음)	손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신동빈	
(임시영 외 지음)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스마트 국토	김동훈	

통권 445호 2018. 11		
국토시론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과제	이민화	
특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1.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	이정희	
2.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동향과 시사점	이재용	
3.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의의와 발전방향	황종성	
4. 스마트시티의 도시건설적 접근 변화	김수일	
5. 도시재생에서의 스마트시티 역할	남광우	
용어풀이 <243> 블록체인(Block Chain) 외	신영섭·유인재	
국토 옴부즈만		
KRIHS가 만난 사람 <14> 황희 국회의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집기획		
: 국토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 <4> 주택	김정호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6>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광주	안평환	
e-interview 달시 보엘스토르프(Darcy Boellstorff)		
도시계획과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의 미래	김보아	
영화와 도시 <59> 영화 ‘디파티드’		
역사의 도시 보스턴, 미국의 정신을 엿보다	임동우	
자료회원 가입안내		
연구자의 서가 <6> 사회조사방법론		
도시계획학도를 위한 사회과학연구의 길잡이	정창무	
공간공감(空間共感) <6> 지도는 욕망이다	임영모	
해외동향 독일 베를린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사업관리 사례와 시사점	임상연·이진희	
글로벌정보 프랑스 친환경 스마트시티 이시 레 물리노 외		
국토연구원 단신		
‘제23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외		
KRIHS 보고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김창환	
(사공호상 외 지음)		
스마트 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문채	
(이범현 외 지음)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스마트시티 민간 관심 더 높아야	손동우	

통권 446호 2018. 12		
국토시론		
교통 SOC 투자를 통한 포용국토 만들기	김홍택	
특집 포용성장을 위한 교통 SOC 투자와 정책과제		
1. 포용성장 시대의 교통 SOC 투자방향과 정책과제	최재성	
2.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모창환	
3. 포용성장과 강원도 교통·SOC의 확충과제	김재진	
4. 포용성장을 위한 충청북도의 SOC 사업	조남건	
5. 포용성장을 위한 영남권 교통 SOC의 나아갈 길	이상인	
6. 포용성장을 위한 전라도지역 교통 SOC의 역할과 전망	김상엽	
용어풀이 <244> 포용적 교통정책	이다희	
KRIHS가 만난 사람 <15>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 간 격차해소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집기획		
: 국토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 <5> 교통	이건영	
e-interview 크리스틴 라슨(Kristin Larsen)		
사회 정의를 위한 도시계획 연구와 교육	황세연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7>		
울산 중구,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꿈꾸다	김대성	
국토 옴부즈만		
영화와 도시 <60>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위대한 학문과 사랑을 키워낸 곳, 케임브리지	정희원	
연구자의 서가 <7>		
금강변 작은 창가에서 누리는 독서의 즐거움	김선희	
공간공감(空間共感) <7> 아는 만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임영모	
해외동향 노숙자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간의 괴리		
: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쉼터 공방전을 중심으로	주소윤	
글로벌정보 프랑스 트램 북부 구간 연장, 하루 9만 명 이용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개최 외		
KRIHS 보고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 도로 기능평가를 중심으로(박종일 외 지음)	천승훈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최재성 외 지음)	한진석	
2018년 국토 총 목차(통권 435~446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기자칼럼 실격당한 자들이 없는 사회	윤현숙	

2) 국토정책Brief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645호	2018-01-02	대도시권 미래와 역할을 제시하는 균형발전정책 필요	이용우, 변필성, 김동한, 임지영 외
제646호	2018-01-08	2018년 주택시장은 보합, 안정 전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제647호	2018-01-15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입체개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윤서연
제648호	2018-01-22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김선희, 차미숙, 민성희, 김명찬
제649호	2018-01-29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과제	임상연, 정은진
제650호	2018-02-05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	김상조, 김동근
제651호	2018-02-12	워라밸 시대(Work and Life Balance),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과제	조성철, 황명화, 장철순
제652호	2018-02-19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	권규상, 이왕건, 박소영, 이정찬
제653호	2018-02-26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안종욱, 조정희
제654호	2018-03-05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남기찬
제655호	2018-03-12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시스템과 시사점	이진희
제656호	2018-03-19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김승중
제657호	2018-03-26	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	강해경, 김대중, 서기환, 임용호
제658호	2018-04-0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 전략: 인쇄업을 중심으로	권규상, 강호제, 박소영
제659호	2018-04-09	뉴노멀(New Normal)시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송하승, 이형찬
제660호	2018-04-16	도로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고용석, 김민영
제661호	2018-04-23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디지털 트윈 공간(DTS)' 구축 전략	사공호상, 임시영
제662호	2018-04-30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	박미선
제663호	2018-05-08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이태리, 황관석, 권건우
제664호	2018-05-14	스마트도시시설의 개념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조성방향	이범현
제665호	2018-05-2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	박미선, 이재춘
제666호	2018-05-28	스마트시티를 위한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의 효율적 도입방안	윤탐관
제667호	2018-06-04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이순자, 민성희, 차은혜
제668호	2018-06-11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	박종순
제669호	2018-06-18	국유지 활용의 공공성 제고방안	김명수
제670호	2018-06-25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임은선, 이영주, 황명화, 오창화
제671호	2018-07-02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한우석
제672호	2018-07-09	초고속열차와 콤팩트 국토 시대의 도래	김종학
제673호	2018-07-16	하반기 수도권 강보합, 지방 하락폭 확대 전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674호	2018-07-23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대응과제	민성희, 차은혜
제675호	2018-07-30	도시 차원의 침수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진단 및 정보제공 체계화 방안	이병재, 이상은, 이종소, 김슬예
제676호	2018-08-06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김호정
제677호	2018-08-13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강미나, 우민아
제678호	2018-08-20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이수옥, 강성우, 방보람
제679호	2018-08-27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육성방안	조성철, 남기찬, 장철순
제680호	2018-09-03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조만석
제681호	2018-09-10	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구형수
제682호	2018-09-17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육동형
제683호	2018-10-01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	배유진, 김슬예, 배인영
제684호	2018-10-08	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강미나, 변세일, 김승중, 김민철 외
제685호	2018-10-15	지표로 본 국토인프라 40년: 변화와 과제	이백진, 김종학, 고용석
제686호	2018-10-22	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	류승한, 김석윤, 김형철
제687호	2018-10-29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한 디지털트윈 적용방안	임시영, 김미정
제688호	2018-11-05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김중은, 이우민
제689호	2018-11-12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강미나
제690호	2018-11-19	시설물 및 건축물의 '생애주기 통합 건설정보모달' 구축방안	김성일, 조정희
제691호	2018-11-26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 물관리 정책방향	박태선
제692호	2018-12-03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수도권 광역통행을 중심으로	김광호
제693호	2018-12-10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과제	윤영모
제694호	2018-12-17	GeoAI 기반의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혁신과 활용방안	서기환
제695호	2018-12-24	효율적인 도로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간선기능 평가 방안	박종일
제696호	2018-12-31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구형수

3) 국토이슈리포트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1호	2018-09-28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동네에는 뭐가 있다?	이보경, 이영주
제2호	2018-10-12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임은선, 이영주, 정병화, 신문수

4) 국토연구

통권 96권 2018. 03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한 전월세전환율의 영향요인 분석	황관석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이 기초자치단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권연화·최열	
Forecasting Changes in Trade Areas Due to the Introduction of GTX, a New Regional Express Rail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	이상현	
임의확률모수 포아송 모형을 이용한 무신호 3지교차로 교통사고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김태호·박민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분양·임대 아파트의 물리적 혼합 배치유형 인식 평가에 미친 영향	안용진·김주현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박준·이상훈·박상수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보행량 변화 실증분석		
: 전주시 도심의 쇠퇴지구를 중심으로	유승수·문준경·김민혜·채병선	
통권 97권 2018. 06		
제한적 합리성에 의거한 주택가격과 거래량 관계 형성 요인의 실증분석	박동하·최막중	
빈집의 공간적 군집과 고착화에 관한 실증 연구	한수경	
: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와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을 활용한 토지이용 변화시뮬레이션	원석환·황철수	
: 통일 후 북한 도시를 대상으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역에서 복합용도 토지의 가격수준별결정요인 분석	정태윤	
: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의 지표면 온도변화 분석	김지영·김은정	
통권 98권 2018. 09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문		
① 국토연구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박삼욱	
② 국토정책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최병선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이병호·김가연·박민근	
도시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본 대구 대도시 구역의 폭염 가중원인 추정과 해결과제	권용석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천안시 원성동 사례를 중심으로	서승연·이우민·박효숙·채인병·이경환	
영국 도시재생의 지역사회 참여 성숙화 과정과 정책적 함의		
: Nabatchi의 시민참여 스펙트럼 수정모형을 중심으로	이재은·서순탁	
입지특성분석을 통한 중국 서비스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의 요인에 관한 연구	송인혁·왕봉·강명구	
도시침수 사전관리를 위한 고위험지역 선정: 제주시 사례 연구	이종소·송창근·이상은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을 통해 본 DMZ 접경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김지나	
통권 99권 2018. 12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평가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양원탁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이상범·김정훈	
개인의 자가용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족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에 관한 연구	김찬성·이재경·허태영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지 재생사업이 거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영국 버밍엄시의 킹스노턴 NDC 사례를 중심으로	경산원·김예성	
생존분석을 통한 건설업 경영전략 방안 연구		
: 경영상태 요소, 건설업종 내외 견업을 중심으로	이무송·유정석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거상·하향 이동에 관한 연구	권연화·최열	
농지의 도시화가 폭염상황에서 주변 지역 지상 기상요소에 미치는 영향	김건후·인소라·손철	
수도권 지역 직종 숙련의 시공간 분포 변화		
: 공간 마르코프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이소현·송창현·임업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과 공유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차수요를 중심으로	장창호·장재용·송재민	
재난관리 협력체계에서 정부책무성과 정부신뢰가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현영란	
: 세월호 사례를 중심으로		

5)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20호 2018. 01		
인포그래픽스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주요 국가의 PIR지수 비교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주요 국가의 실질주택가격지수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		
심층분석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방안	이태라·황관석	
정책과 시장		
저성장기 다주택자의 역할에 대한 재고	이창무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함영진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제21호 2018. 04		
인포그래픽스		
2017년 미분양주택 상위지역은?		
2017년 미분양주택의 공간적 집중지역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		
심층분석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변세일	
정책과 시장		
주거복지의 주택정책, 주거복지의 도시재생정책	박현용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제22호 2018. 07		
인포그래픽스		
2018년 하반기 주택매매가격 전망에 대한 인식은?		
2018년 하반기 주택전세가격 전망에 대한 인식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		
심층분석		
저소득 임차가구 입지분석과 주거지원 정책과제	이윤상	
정책과 시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과 향후 정책과제	정화남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제23호 2018. 10		
인포그래픽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 인식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가장 효과 있을 것 같은 정책		
수도권 내 신규주택 30만호 공급 효과 인식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		
심층분석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박천규·전성제·노민지·변세일	
정책과 시장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두 개의 바퀴	손경환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6) 도로정책Brief

제123호 2018. 01			제125호 2018. 03		
이슈&칼럼 대도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개발과 공간구조 개편 류재영			이슈&칼럼 도시재생은 도로재생의 기회이고, 도로재생은 도시재생의 시작 김경석		
해외정책동향 주요업체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I 김범식 도교도심과 임해부도심을 연결하는 BRT 김재열 뉴질랜드의 新도로등급분류체계 및 시사점 김민영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자율주행차 도래와 입법·행정서비스 제공 방철호 샌프란시스코 교통 안전 정책: 비전제로(Vision Zero SF) 김도연 관광도로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연복모		
기획시리즈: 도로의 가치 탐구⑥ 도로의 미래 가치 조남건			기획시리즈: 행복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작은 생각② SOC 사업,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지불되어야 임광수		
간추린소식 국토연구원,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간추린소식 도로분야 4대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도로국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용어해설 정밀도로지도					
제124호 2018. 02			제126호 2018. 04		
이슈&칼럼 빅 데이터 기반의 도로정책이 되려면... 박은미			이슈&칼럼 “포용” 국토와 지역 SOC 문정호		
해외정책동향 주요업체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II 김범식 미국 스마트 공유교통 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안성희 베트남 고속도로망 및 동부 북남 고속도로 구축 계획 백정환			해외정책동향 미국 커넥티드(Connected) 교통체계 시범사업의 추진 강경원 일본 사업용자동차 종합안전플랜 2020 김재열 차량경량화와 탄소저감 관련 유럽 연구동향 최재성		
기획시리즈: 행복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작은 생각① 국가 경제를 위해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임광수			기획시리즈: 행복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작은 생각③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SOC 제고 방향 임광수		
간추린소식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간추린소식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 통행료 인하		
용어해설 블록체인			용어해설 자금제조달 제도		

제127호 2018. 05			제129호 2018. 07		
이슈&칼럼 아시안고속도로 1호선 한반도 연결 손기민			이슈&칼럼 해밀턴 프로젝트가 주는 교훈 고용석		
해외정책동향 미국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돌발상황 관리 배범준 미국 교통부의 ‘Smart City Challenge’ 추진 현황 김현미 유럽의 도시물류 부문 전기차 활용 동향 김성록			해외정책동향 베이징 7환 고속도로의 완공 의의와 시사점 백승걸 도시부 속도관리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김기용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시범계획: PMU 2013-2018 진광선		
기획시리즈: 행복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작은 생각④ 행복한 도로 임광수			기획시리즈: 한국 도로의 생로병사 ②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발전 과정 강정규		
간추린소식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			간추린소식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용어해설 한반도 신경제지도(H 경제벨트)			용어해설 워라밸		
제128호 2018. 06			제130호 2018. 08		
이슈&칼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 도로 이기영			이슈&칼럼 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유정복		
해외정책동향 금문교의 가변차로운영을 위한 무브어블 배리어의 설치와 효과 김창모 일본 히로시마현 인프라 자산관리 동향 김원철 안전성을 고려한 제한속도 설정 및 시사점 임현섭			해외정책동향 일본 도로 화물수송 효율화 정책 및 시사점 최윤혁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의 해외 실증사례 및 시사점 최재성 슈퍼블록: 삶으로 가득찬 거리 만들기 진광선		
기획시리즈: 한국 도로의 생로병사① 1960년 이후 한국 도로시설 발전과정 강정규			기획시리즈: 한국 도로의 생로병사③ 한국 도로 성공의 10가지 요인 강정규		
간추린소식 국토교통부,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로현황 발표			간추린소식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개정		
용어해설 남북협력기금			용어해설 자동차 리콜		

제131호 | 2018. 09 |

이슈&칼럼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 인프라의 관리 제언

권수안

해외정책동향

외국의 도로 위험물질 수송관리 현황 및 시사점

최윤혁

일본 주차장의 집약화 배치와 적정화

김재열

초소형자동차 안전운행관련 사례와 시사점

김태호

기획시리즈: 한국 도로의 생로병사④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한다

강정규

간추린소식

도로분야 4대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내 삶을 바꾸는 길(路)' 개최

용어해설

재난

제132호 | 2018. 10 |

이슈&칼럼

한반도와 대륙 연결, 국경을 넘는 도로통행을 준비하자

조성민

해외정책동향

유럽의 화물자동차 군집주행 동향 및 시사점

김세현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 일본 도로역

연복모

개인용 드론시장 성장과 보험제도 도입방안

김태호

기획시리즈: 한국 도로의 생로병사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발전 방향

강정규

간추린소식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이모저모

제133호 | 2018. 11 |

이슈&칼럼

나의 2.27원: 자율주행차에 관한 소고

이찬영

해외정책동향

해외 공유통 현황과 시사점

이수일

뉴욕시의 공유승차사업 정책변화

강은아

호주의 인프라 데이터 계획

김민영

기획시리즈: 한국 도로의 생로병사⑥

도로 기술과 도로 문화

강정규

간추린소식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 개장

용어해설

Z세대

제134호 | 2018. 12 |

이슈&칼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김호정

해외정책동향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책임

이수일

변화하는 나들목(IC) 개발방향

전용현

버지니아 주의 전략적 고속도로 안전계획

박중한

기획시리즈: 미래 사회와 교통⑦

미래 사회 및 기술 변화 전망

이기영

간추린소식

2019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안 확정

용어해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7) Space & Environment

Vol. 73 2018. 03		Vol. 75 2018. 09	
IN-DEPTH LOOK		IN-DEPTH LOOK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Vacant Housing Policy	강미나	Assessing the Effects of Adopting Self-driving Cars in Terms of Transportation Network Efficiencies and Users' Behaviors	육동형·이백진
Residential Environment of Industrial Complexes: Challenges and policy directions	조성철	Measuring Employment Resilience in Korean Regions: Using regional business cycles	홍사흠
Reinforcing the Urban Growth Management Role of Green Belts in Metropolitan Areas	김중은·이성원·김다윗	Housing Stabilization Plans for Renter Households	김민철
Ideas to Utilize Big Data to Complement a Method of Travel Demand Estimation: Focus on New Development Sites	윤서연	Stimulation of Regional Consump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Virtuous Circle Structure for the Regional Economy	남기찬
GLOBAL PARTNERSHIP NEWS		GLOBAL PARTNERSHIP NEWS	
Vol. 74 2018. 06		Vol. 76 2018. 12	
IN-DEPTH LOOK		IN-DEPTH LOOK	
Towar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Low-growth Era: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안홍기	Changes to Spatial Structures of National Territory and Policy Implications	민성희
Conception, Normative Directives, and Policy Tasks towards Inclusive National Territory	문정호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Policy System by Analyzing Urban Flooding Areas	이성건·이종소·김슬예
Monitoring Land Cover in North Korea and Policy Proposals	강민조·임용호	A Study on New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장철순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이현주	GLOBAL PARTNERSHIP NEWS	
GLOBAL PARTNERSHIP NEWS			

CHAPTER 0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임직원 현황

1. 인원 및 주요 보직자 현황	154
2. 조직 및 부서 소개	155

1. 인원 및 주요 보직자 현황

인원

2019년 6월 기준 국토연구원의 현원은 325명, 정원은 275명으로 연구직이 246명, 관리·전문직이 78명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보직자 현황

원장	강 현 수
부원장	이 상 준
국토지식센터장	김 대 중
본부장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장 철 순
도시연구본부	이 왕 건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김 선 희
주택·토지연구본부	이 수 욱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이 춘 용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임 은 선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 세 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 태 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이 백 진
기획경영본부	김 명 수
실장	
행정지원실	오 경 근
감사실	박 종 택

2. 조직 및 부서 소개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국토·지역정책, 국토계획평가, 지역경제, 산업입지 등 국토계획과 국토 및 지역발전 관련 장단기 정책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국토·지역정책, 수도권정책 및 계획, 둘째, 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 체계, 미래국토 및 국토 모니터링 관련 연구, 셋째, 지역경제분석, 공간계량분석, 국토개발 사업 경제성분석 관련 연구, 넷째, 국가 산업입지정책 및 계획, 산업입지 수요분석, 지역산업 입지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

장철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지역계획
홍사흠 | 국토계획평가센터장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 |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 개발 및 계획
강호제 | 산업입지연구센터장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권영섭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류승한 | 선임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경제지리
차미숙 | 선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지역정책, 지역계획
문정호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안홍기 | 선임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 도시경제학, 공공투자정책
이순자 | 선임연구위원 | Colorado State University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김천규 | 연구위원 | 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자원 및 환경경제) 박사 | 동북아, 통일한반도, 중국지역연구
양진홍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국토계획,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서연미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하수정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역경제, 지역계획
장은교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도시설계
민성희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
남기찬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계획, 지역경제분석, 도시경제
정우성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 도시 및 지방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방자치, 조직관리
강민조 | 책임연구위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GT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조성철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산업입지, 지역개발 및 계획, 경제지리
안소현 | 책임연구위원 | 경희대학교 관광학 박사 | 문화관광, 관광경제
정기성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Birmingham 도시 지역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개발 및 계획, 도시 및 주택정책
김다윗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 및 지역계획
차은혜 | 책임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석사 | 도시네트워크, 공간분석
임용호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 공간통계, 북한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
강민규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과정 | 도시정책
박정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과정 | 미래국토, 국토계획평가
이윤석 | 연구위원 | Rutgers University 박사과정 | 산업입지, 도시계획

유현아 | 연구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교육학 석사 | 지역계획 및 정책
배인성 | 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평가
김석윤 |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 지역계획 및 개발, 산업입지
김주훈 | 연구원 | 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산업입지, 노후산단재생
김형철 | 연구원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학
김경민 | 연구원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지역경제, 도시계획, 타당성 분석
조은주 | 연구원 | University of Utah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계획
강민석 | 연구원 | 아주대학교 수자원공학 석사 | 지역계획
이효란 |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국토 및 지역계획
김명한 | 연구원 | 가천대학교 지역개발학 석사 | 도시 및 지역정책
김태숙 | 연구원 | 산업입지정보망 운영
이영선 | 연구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석사 | 문화역사지리학
박나영 | 연구원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지역계획, 교통·도시공학
김수연 | 연구원 | 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
이인희 | 주임사무원 | 산업입지정보망 운영

【기획팀】

한소현 | 사무원 | 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2) 도시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문화 및 관광, 건강장수도시 연구, 둘째,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국토 및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 및 개발 연구, 셋째, 기후변화 및 재해로부터 안심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방재 연구, 넷째, ICT와 융·복합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및 녹색 도시연구 등이 며,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이왕건 | 도시연구본부장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서민호 |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토지·교통융합 계획, 공공공간/생활인프라
조판기 | 국·공유지연구센터장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 도시정책·연구저성장·생활인프라/도시복지
이용우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Bonn 지리학 박사 | 국토계획, 국토계획평가, 미래국토
김상조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도시정책, 도시제도
변필성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도시계획 부전공) 박사 | 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김성수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석사 | 도시계획 및 설계, 건강도시, 도시범죄/안전
김진범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지역계획
김은란 | 연구위원 | 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 |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성장,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이범현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디자인/경관
김중은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도시계획 제도, 교외신도시재생, 개발제한구역
박정은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디자인/경관
김동근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 |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제도
임상연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정윤희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 박사과정 | 공공감등관리 및 지역경제분석
이진희 | 책임연구위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공학
이승욱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정책
박소영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재생, 도시계획
구형수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 공간분석
김수진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개발계획학 박사 | 도시설계, 도시개발, 도시정책
배유진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재생, 공공투자
권규상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도시재생, 도시경제, 지역정책
임지영 | 책임연구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 박사 | 국토 및 지역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
송지은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경제
윤정재 | 책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설계/경관, 건강장수/이동친화적 도시, 주거복지/효용
최정윤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역사환경, 도시보존
이다예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정책, 공간분석
박대근 | 연구위원 | 도시계획
김유란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도시재생, 도시설계, 도시계획
박대한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도시재생, 균형발전
김태영 |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지리정보학 석사 | 도시재생, 도시정책
정은진 | 연구위원 | 명지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 도시재생, 건축

3)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국민 관심사인 깨끗한 국토,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국토·도시환경을 복원하고, 산에서 신선한 깨끗한 바람을 도시를 끌어들이는 전략,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토환경·자원정책, 둘째, 국가 방재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안전국토 및 재해예측, 셋째, 국가 수자원정책, 하천 정책, 유역 통합관리정책 등이 있다.

연구진

김선희 |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박사 | 환경계획, 갈등관리
한우석 | 국가방재연구센터장 | University of Utah 토목공학(수자원) 박사 | 방재, 수자원
이상은 |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박사 | 수자원관리, 기후변화 적응, 재난위험도 분석
김종원 | 선임연구위원 |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자원경제학 박사 | 수자원정책, 계량경제분석
김창현 | 선임연구위원 | 경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농어촌정주, 수자원(방재), 하천
박태선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 댐, 하천, 수자원정책
박중순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Cambridge 지리학 박사 | 국토환경, 산림, 연안지역관리
이미영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안승만 | 책임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 | 녹지계획, 미기후관리정책, GIS
이정찬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도시계획·정책, 지역혁신
조만석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자원·환경경제
이중소 | 책임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 하천·수자원, 방재, 공간분석
성선용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환경계획, 영향평가모델링, 생태정보학
김소윤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 재해취약성
서정석 | 연구위원 | UNIST 도시환경공학 석사 | 재해취약성, 환경정의
김슬예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 | 친수공간, 지역개발, 물문화

[기획팀]

송태희 | 사무원 | 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4) 주택·토지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거복지, 부동산, 토지 및 건설경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시장분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둘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시장 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토지정책 연구, 넷째, 건설경기 동향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이다.

연구진

이수옥 | 주택·토지연구본부장 | 한양대학교 문학 석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박천규 |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김민철 | 건설경제연구센터장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주택정책
김근용 | 선임연구원 | KAIST 경영공학 박사 |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 부동산시장 분석
김혜승 | 선임연구원 | 경희대학교 이학(주거정책)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김성일 |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건설산업정책, 건설보증·금융
강미나 | 선임연구원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주거복지, 주택정책, 주택금융
윤하중 | 선임연구원 | 가천대학교 공학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이승복 | 연구위원 | 단국대학교 경영학(자원환경관리)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최 수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조진철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 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 도시개발
이형찬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주택정책, 토지(택지)정책
변세일 | 연구위원 | 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지역경제
김승중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 법, 토지정책
박미선 | 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주택정책
송하승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 토지개발
전성제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이태리 | 책임연구원 | The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이윤상 | 책임연구원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안중욱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응용경제, 기술정책, 혁신정책
이재춘 | 책임연구원 | 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주택정책, 주택계획, 도시 및 환경계획, 교통계획
최명식 | 책임연구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 토지 및 주택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노민지 | 책임연구원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 주택정책, 부동산시장
김지혜 | 책임연구원 |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이길제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이후빈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주택정책, 주택개발사업
조정희 | 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부동산산업
이승훈 | 연구원 | 인하대학교 경영학(지속가능경영) 박사과정 수료 | 건설보증, 건설품질 및 안전, 건설시장
석재성 | 연구원 |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 | 민간투자, 교통정책, 건설산업
황관석 | 연구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정책효과 분석
최 진 | 연구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 부동산, 부동산경제학
조윤지 | 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최진도 | 연구원 | 충남대학교 도시·환경정책 박사과정 | 주택 및 부동산시장 연구
고영화 | 연구원 | 고려대학교 환경지질학 석사 | GIS, 공간분석
권건우 | 연구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손은영 | 연구원 | 토지정책, 도시정책, 공간정책
정경석 | 연구원 | 경상대학교 도시계획 석사 | 도시계획

우민아 |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 주거복지
이건우 | 연구원 | 충남대학교 통계학 석사 | 주거복지
유현지 | 연구원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 건설관리, 민간투자사업
강성우 |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 주거복지
오아연 | 연구원 |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 | 주택정책, 부동산시장
오민준 | 연구원 |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획팀]

김신애 | 사무원 | 연구행정 및 행사 담당

5)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 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대도시권 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둘째,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 물류정책, 셋째,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이춘용 |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도시교통계획, 지역계획,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고용석 | 도로정책연구센터장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도로 및 교통계획, SOC 정책
김중학 | 인프라정책연구센터장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 교통서비스 가치 연구, 교통망 구축효과, 교통수요예측
김호정 | 선임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도로계획, 교통계획
오성호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이백진 | 선임연구위원 | 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김흥석 |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교통계획, 생활교통
임영태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지역교통, 물류계획
김준기 | 연구위원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 교통안전, 통행행태, ITS 등
김혜란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 활동기반 통행행태분석, 인프라 투자
윤서연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지리학(교통) 박사 |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행동 모델, 시공간분석
배윤경 |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교통계획, 교통정책, 통행행태
육동형 | 책임연구원 | Utah State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Traffic, Transit Assignment, 대중교통요금산정
김광호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통공학 박사 | 지능형교통체계(ITS)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최재성 | 책임연구원 |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교통경제학 박사 | 교통경제
박종일 | 책임연구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교통계획, ITS
윤태관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Tennessee-Knoxville 토목공학(교통) 박사 | 교통공학, 지속가능 교통, 대중교통
김정화 | 책임연구원 | Kyoto University 도시사회공학 박사 | 교통계획 및 정책, 통행행태·심리
이재현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교통모형 및 시공간분석 박사 | 교통계획, 빅데이터, 친환경차
김상록 |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백정환 | 연구원 | 중앙대학교 교통공학 석사 | 교통계획, 빅데이터, 기계학습
김민영 | 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 | 도로정책
최소림 |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관리학 석사 | 고속도로 사후평가, 국가기간선도로망 계획, 교통안전
임현섭 | 연구원 | 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도로건설계획
연복모 |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석사 | 교통공학
정현지 | 연구원 | 공주대학교 도시교통 석사 | 첨단교통
배보람 | 연구원 | 교통계획
박종한 | 연구원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위눈술 | 연구원 | 공주대학교 지리학 석사 | 원격탐사 및 GIS, 자연지리학
이기영 |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교통공학 석사 | 교통공학, ITS
이다희 |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 석사 | 교통계획,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남문우 | 연구원 | 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김우형 | 연구인턴 | 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 | 도시·교통공학

[기획팀]

서진영 | 사무원 | 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6)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는 국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활용·분석 등을 위한 방법·정책·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 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지자체 공간정보 추진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둘째, 국토 관련 데이터 수집, 생산 및 분석방법 연구, ICT 등 유관기술과의 융·복합 활용방법, 공간정보 분석 및 활용 기술, 원격탐사,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KOPSS), 공간빅데이터, 동적인 시공간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이 있다.

연구진

임은선 |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인재양성

이재용 |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정책, 사공간분석

이영주 | 국토시뮬레이션센터장 | Keio University 미디어·거버넌스학 박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유통, 공간정보 관련 일본사례연구

사공호상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GIS, RS, 공간정보정책, 그린&스마트 시티

김미정 | 선임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토지관리 및 규제 정보화, 정보화전략계획,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김대중 | 선임연구위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정문섭 | 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 박사 | 국토 정보화, GIS정책

김동한 | 연구위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계획학 박사 | 도시모형, 공간분석

서기환 | 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황명화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공간분석용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공간 빅데이터 프로세싱, 공간분석

임시영 | 책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 공간정보 정책, 스마트시티, 공간정보화, 경제성 분석

김익희 | 책임연구위원 | San Dieg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스마트시티, GIS, 데이터사이언스

성해정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공간 분석

이보경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 박사 | 공간빅데이터마이닝, 지역혁신, 기술경영

허 용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박사 | 공간정보시스템

오창화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지리학 석사 | GIS, 공간분석

임룡혁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 석사 | GIS, 공간분석,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이시형 | 연구위원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박사과정 | 공간정보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최정내 | 연구위원 | 공간정보정책

이누리 | 연구위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석사 | 공간정보정책

한선희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스마트시티

신영섭 | 연구위원 |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측량 및 GIS) 박사과정 수료 | 스마트시티, GIS, 측량

유인재 |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 공학 석사 | 스마트시티

신기원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공간정보사회연구, 국토조사 및 분석

임거배 | 연구위원 | 청주대학교 도시부동산지적학 박사과정 수료 | 개방형 공간정보

신문수 | 연구위원 |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석사 | 공간정보분석, GIS

김도형 | 연구위원 | 청주대학교 지적학 석사 |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정병화 | 연구위원 |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지리정보학 석사 | GIS, 공간분석

이민영 | 연구위원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공간정보, 교통·도시계획

김지유 | 연구위원 | 경북대학교 공간정보학 석사 | 공간정보, GIS

[기획팀]

류소연 | 사무원 | 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7) 국토지식센터

국토지식센터는 지식자산을 축적하고 공유체계구축, 공간데이터분석과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한다. 국토빅데이터팀은 지식자산 축적 및 공유체계 구축·관리, 공간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공간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기반 연구, 원내외 공간정보 활용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식관리팀은 도서관 운영, 국토연구 관련 자료 및 성과물 등 지적자산 관리, 기록물관리, 연구 및 경영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관리, 전산 및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김대중 | 국토지식센터장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국토빅데이터팀]

이수욱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문학 석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김동근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 |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제도

이미영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안승만 | 책임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 | 녹지계획, 미기후관리정책, GIS

임룡혁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 석사 | GIS, 공간분석,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지식관리팀]

김상규 | 지식관리팀장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 학사 | 문헌관리 및 정보관리 총괄

송정현 | 책임전문원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정보화사업 기획, 통합행정시스템 운영관리

박정기 | 3급관리원 |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산인프라 운영관리

이새별 | 전문원 | 연구성과물 및 간행물 관리

김현서 | 전문원 | 기록물관리

임지수 | 전문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사 | 전자도서관 관리, 도서 관리

김명준 | 행정인턴 |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 학사 | 연구성과물 배포 및 판매

8)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국토연구원이 축적한 국토·도시 분야 지식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국제적인 선도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국제화 추진의 플랫폼으로 2010년 12월 개소하였다. GDPC는 다년도 공동 연수, 개도국 대상 연구·컨설팅, 정책 교류, 해외 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도국의 개발촉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 선진 연구기관과의 국제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국토연구원의 연구 선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선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의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고, 국토·도시 분야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진

박세훈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 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정책, 도시문화(다문화), 국제개발협력
이상건 | 선임연구위원 | Virginia Tech 교통공학 박사 | 스마트시티 설계, 교통시스템 계획
정진규 | 선임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 국제개발협력, 도시·광역교통정책
최성수 | 선임전문위원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경제학 박사 | 국제개발협력,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정책
강해경 | 연구위원 | 부산대학교 지형정보공학 박사 | 공간정보정책,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플랫폼, 공간 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이병재 | 책임연구위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도시방재, GIS, 기후변화, 공간계획
홍사흠 | 책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 |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안예현 | 책임연구위원 | Virginia Tech 도시계획학 박사 | 국제개발, 도시인프라 개발, 역량개발
유희연 | 책임연구위원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석사 | 국제개발협력, 도시지리
하태훈 | 연구원 | University of Florida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도시 및 지역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국제개발협력
박해정 | 연구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개발계획 석사 | 개도국 도시개발, 도시권, 비공식주거
이은미 | 연구원 | 연세대학교 국제학 석사 | 국제개발협력, 취약국, 공적개발원조(ODA)
김민지 | 연구원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 국제개발협력, 개발파트너십, 주택정책
전세련 | 연구원 | University of Sussex 개발 인류학 석사 | 개발인류학, 취약국, 사회갈등, 빈곤, 질적 연구
이소영 | 연구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 | 국제개발협력, 주택정책
황유원 | 연구원 | University of Jordan 국제경영 석사 | 국제개발협력, 중동건설 진출, 무역, 물류
김은화 | 연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석사 | 국제지역연구, 중남미연구, 도시 및 주택정책
유찬용 | 연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 국제개발협력

[기획팀]

황정연 | 사무원 | 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9)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구, 국가균형발전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진

김태환 | 소장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지리학 박사 | 건강장수도시, 지역계획
이원섭 | 선임연구위원 | 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제도
권영섭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류승한 | 선임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경제지리
이순자 | 선임연구위원 | Colorado State University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변필섭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도시계획 부전공) 박사 | 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강호제 | 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김진범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지역계획
서연미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김은란 | 연구위원 | 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 |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성장,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민성희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분석
박정은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디자인/경관
임상연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남기찬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계획, 지역경제분석, 도시경제
배윤경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교통계획, 교통정책, 통행행태
안소현 | 책임연구위원 | 경희대학교 관광학 박사 | 문화관광, 관광경제
남성우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저에너지 도시형태, 스마트 도시계획 및 설계
이효란 |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국토 및 지역계획
서승연 | 연구원 | 도시 및 지역계획
표희진 | 연구원 | 인천대학교 도시설계 석사 | 도시설계

[기획팀]

한현정 | 사무원 | 연구행정, 연구기획 지원

10)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는 한반도 및 북한지역 공간계획,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그 밖에 한반도·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남북 인프라 경험 등 시대적 당면과제 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이백진 |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 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임영태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지역교통, 물류계획

조진철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 도시개발

이성수 |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이병재 | 책임연구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도시방재, GIS, 기후변화, 공간계획

이현주 | 책임연구원 | 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 박사 | 중국경제, 중국지역개발 및 정책, 중국에너지 자원, 동북아지역

강민조 | 책임연구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GT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김정화 | 책임연구원 | Kyoto University 도시사회공학 박사 | 교통계획 및 정책, 통행행태·심리

김민아 | 책임연구원 | 한양대학교 공학 박사 | 북한 도시, 건축 및 주거공간 정책

임용호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구조탐색

오호영 | 연구원 | 도시 및 지역계획

[기획팀]

한현정 | 사무원 | 연구행정, 연구기획 자원

11)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융복합 정책연구 지원,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홍보, 예산 경영, 직원의 역량개발 및 인재 채용, 출판물 기획·편집 및 발간, 연구성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성원

김명수 | 기획경영본부장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개발, 환경계획, 경관계획 및 정책

[연구기획·평가팀]

박경현 | 연구기획·평가팀장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연구기획·평가팀 업무 총괄

윤영모 | 연구위원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 연구기획·발굴 및 기관평가

윤장근 | 2급관리원 | 영남대학교 경영학사 | 과제발굴 및 평가(연구개발적립금 연구과제, 수시과제)

김지형 | 3급관리원 |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사 | 수탁연구사업 관리

이수암 | 연구원 | 기본과제 관리 및 기관평가

김상근 | 3급관리원 | 공주대학교 부동산학 석사과정 | 소식지 및 기관평가

김신애 | 사무원 | 영남대학교 수학 학사 | 수탁과제 연심회 관리 및 행정

[예산경영팀]

전준호 | 예산경영팀장 | 예산경영팀 업무 총괄

김유진 | 3급관리원 | 정부출연금

박도연 | 3급관리원 | 실행예산 편성

최지현 | 사무원 | 전북대학교 의류학 학사 | 위탁계약, 수·위탁현황관리

[인재개발팀]

박동신 | 인재개발팀장 | 서강대학교 경제학사 | 인재개발팀 업무 총괄

임정천 | 1급관리원 | 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 근무평가 및 보상

신한별 | 3급관리원 | University of Bath 경영학 학사 | 복무관리 및 정규직 인사관리

이은혜 | 3급관리원 | 인하대학교 교육학 석사 | 채용 및 교육

김수인 | 사무원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 학사 | 위촉직·일용직 관리,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차주영 | 행정인턴 | 경력, 재직증명

[홍보출판팀]

이강식 | 홍보출판팀장 | 건국대학교 행정학(도시 및 지역개발) 석사 | 홍보출판팀 업무 총괄

박순엽 | 책임전문원 | 국토교육, 경영공시

한여정 | 책임전문원 | 월간 국토 발간

김민경 | 3급관리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언론홍보 및 대외요청자료 관리

유지은 | 전문원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학 학사 | 학술지 국토연구 발간

문보배 | 전문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 국토정책Brief, 국토이슈리포트 발간

홍희민 | 전문원 | 언론, 홈페이지, 뉴미디어

[어린이집건립추진단]

김경동 | 어린이집건립추진단장 | 어린이집건립추진업무 총괄

12)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연구원의 자금관리 및 회계, 청사관리를 담당한다.

구성원

오경근 | 행정지원실장 | 행정지원실 총괄

[총무관리팀]

김형표 | 총무관리팀장 | 총무관리팀 업무 총괄

이호창 | 2급관리원 | 계약, 자산, 인쇄

구민상 | 3급관리원 | 출장, 복리후생

박아름 | 3급관리원 | 동국대학교 경제학사 | 구매, 규정

이정복 | 전문원 | 차량운행

오동주 | 행정인턴 | 우편, 서무

[재무회계팀]

김성태 | 재무회계팀장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 석사 | 재무회계 총괄

김진배 | 2급관리원 | 중앙정부 계약

오희정 | 3급관리원 | 충북대학교 행정학 학사 | 결산, 법인카드

이동훈 | 3급관리원 | 급여, 세무, 자금

김은주 | 3급관리원 | 수입, 지출, 4대보험

최현준 | 사무원 | 지자체, 공사계약

[청사관리팀]

이판식 | 청사관리팀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 청사관리팀 업무 총괄

양승국 | 책임전문원 | 시설담당

심규조 | 기술원 | 기계관리

정상민 | 기술원 | 기계관리

노영준 | 기술원 | 기계관리

김용현 | 기술원 | 기계관리

김 홍 | 기술원 | 전기관리

김현주 | 기술원 | 전기관리

유정준 | 기술원 | 전기관리

박정웅 | 기술원 | 전기관리

홍현기 | 기술원 | 건축관리

전영복 | 기술원 | 건축관리

강의석 | 경비원 | 경비업무

조동민 | 경비원 | 경비업무

박경명 | 경비원 | 경비업무

오민환 | 경비원 | 경비업무

조윤아 | 경비원 | 방문객 안내

이관옥 | 미화원 | 미화업무

김기훈 | 미화원 | 미화업무

이옥화 | 미화원 | 미화업무

이순애 | 미화원 | 미화업무

김정금 | 미화원 | 미화업무

이복례 | 미화원 | 미화업무

서명원 | 미화원 | 미화업무

이매화 | 미화원 | 미화업무

정삼숙 | 미화원 | 미화업무

13) 원장실

김사연 | 전문원 | 원장실 비서

14) 부원장실

조윤미 | 사무원 | 부원장실 비서

15) 감사실

박종택 | 감사실장 | 감사실 업무 총괄

이성식 | 2급관리원 | 감사 업무

2018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 행 일 2019. 7. 17.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전 화 044-960-0114(대표)
팩 스 044-211-4760
I S B N 979-11-5898-426-7
eISBN 979-11-5898-427-4

www.krihs.re.kr

© 2019,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발간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